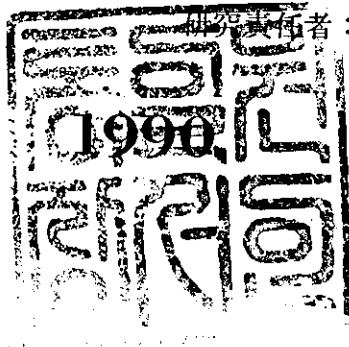


北韓權力變動 및 社會變化對備計劃 研究

— 豫想 시나리오 및 對應方案의 檢討 —



研究責任者：徐 鎮 英

(高麗大學校 政治外交學科 教授)

이 冊子에 收錄된 論文은 統一政策開發을 위해 特殊課題로
用役委囑한 研究結果로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의 見解일
뿐 當院의 公式意見과 無關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目 次

第1章 序 論	5
1. 研究背景과 目的	5
2. 主要 研究內容과 接近方法	7
3. 研究의 限界와 問題點	11
第2章 社會主義 國家의 變革運動과 變革類型	13
1. 社會主義 國家의 變革運動이 갖는 歷史的 含意	13
가. 社會主義 沒落論	17
나. 새로운 社會主義 建設論	18
다. 社會主義 強化論	20
라. 發展論的 視角에서 본 社會主義 改革論	20
2. 變革運動의 原因：一般的 原因	21
가. 革命的 이데올로기의 日常化와 信心의 危機	22
나. 黨 - 國家體制의 非民主性과 官僚主義	27
다. 長期的 經濟沈滯와 體制의 危機	29
라. 社會的 多元化와 社會體制의 危機	33
마. 社會主義 體制改革의 國際的 要因	38
3. 變革運動의 觸發要因과 變革過程	40
가. 中國의 歷史的 路線轉換과 改革政治	41
나.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50
다. 東歐의 大變革과 社會主義의 沒落	59
4. 社會主義 社會의 變革類型	70

第3章 北韓 社會主義 體制的 變化要因	81
1. 北韓 社會主義 體制的 性格과 特徵	81
가. 이데올로기의 特徵	81
나. 政治的 特徵	83
다. 經濟體制的 特徵	85
라. 分斷과 北韓 社會主義體制的 性格	89
2. 北韓 體制가 當面한 課題	92
3. 北韓의 變化要因：國際的 要因	97
가. 冷戰秩序의 構造的 變化	98
나. 社會主義圈의 變化와 韓國의 北方政策	100
다. 蘇聯, 中國과 北韓의 關係	102
4. 北韓의 變化要因：經濟的 要因	107
5. 權力承繼와 北韓의 變化	116
가. 엘리트의 構成과 性格 變化	118
나. 金正日 體制에 對한 抵抗勢力	123
다. 安定的 權力承繼와 北韓의 變化 可能性	127
第4章 北韓體制的 變化에 對한 豫想 시나리오	129
1. 社會主義圈의 大變革에 對한 北韓의 認識과 對應	129
가. 北韓의 認識	129
나. 北韓의 對應	134
2. 北韓의 變化類型 分析과 豫想 시나리오：短期的 展望	139
3. 北韓의 變化에 關한 豫想 시나리오：長期的 展望	144

第 5 章 北韓體制的 變化에 대한 對應	148
1. 北韓의 變化에 대한 우리의 基本立場	148
2. 北韓의 變化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50
가. 短期的 方案	151
나. 長期的 方案	154

第 1 章 序 論

1. 研究背景과 目的

최근 社會主義圈의 국가들은 그야말로 革命的 變化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體制變革(Systemic Change)의 과정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해에 東歐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自由化, 開放化, 民主化를 요구하는 밑으로부터의 변혁 요구에 굴복하여 共產黨 1黨獨裁와 중앙집권적 計劃經濟로 특징지워졌던 기존의 社會主義體制를 포기하고, 정치적 多元主義와 市場經濟體制를 수용함으로써, 2차대전 이후 東歐 社會를 지배하던 스탈린식 사회주의체제에 종식을 고했다. 특히 루마니아와 東獨에서의 변혁과정은 社會主義 體制에서의 변화가 얼마나 폭발적이고 혁명적일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혁명적 변화는 東歐社會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社會主義의 宗主國인 蘇聯에서도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과감한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면서 체제변혁의 진통을 겪고 있으며, 中國의 경우도 비록 天安門事態이후 改革과 開放政策이 후퇴하고 있지만, 鄧小平의 中國이 과거의 毛澤東體制와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체제로 변형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이 既存의 社會主義 理念과 制度에 대한 혁명적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北韓만이 여전히 金日成의 主體體制를 고수하면서 歷史的 變化의 요구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첫째, 既存의 主體體制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며, 둘째, 대부분의 사회주

의 국가들이 改革과 開放을 추진하고 있으며, 脫冷戰的인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지 않으면 生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北韓內部도 權力移讓期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내외의 상황에 적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金日成의 死亡과 같은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진다면 북한은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혁명적이고 폭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北韓이 변할 것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東獨이나 루마니아의 사태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安定된 것처럼 보였던 社會主義體制도 역사적 변혁의 격랑에 휩쓸려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에서의 돌발적이고 혁명적인 變化의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北韓이 동독이나 루마니아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다. 北韓의 社會主義體制가 이들 東歐國家들과 일정한 差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변혁 과정이 북한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歐 社會主義國家들과 蘇聯 및 中國에서의 변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北韓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를 예측해 보는 작업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고도 절박한 課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運命과 밀접하게 연결된 '우리의 問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研究의 目的은 현재 社會主義國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혁 과정을 분석하여 북한의 變化可能性과 變化의 方向을 다각도로 예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對應方案 (Contingency Plan)을 모색해 봄으로써, 우리정부의 對北政策과 統一政策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2. 主要 研究內容과 接近方法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이 연구의 主要 目的이 北韓의 變化에 대한 豫想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對備計劃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本 研究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第2章 社會主義國家의 變革過程과 變革類型〉에서는 蘇聯 및 中國, 그리고 東歐 社會主義國家에서의 變革운동이 발생하게 된 〈原因과 背景 및 變化過程을 분석하여 북한에서의 變化可能性과 變化類型을 예측하는 準據基準〉으로 삼고자 하였다. 따라서 各國의 〈變革운동과정〉을 세부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이들 社會主義國家들에 있어서 變革운동이 발생하게 된 初期段階에 초점을 맞추어, 그같은 혁명적인 變革운동이 폭발하게 된 背景과 要因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 경우, 社會主義體制가 일반적으로 共有하고 있는 〈變化의 要因과 各國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變革운동을 觸發하게 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여 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요인을 중심으로 各國에서의 變革운동과정을 간략히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變革類型을 설정함으로써, 북한의 변화가 과연 어떤 유형일 수 있는가를 살펴 볼 수 있는 準據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같은 연구방식에서 암묵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假定은 北韓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역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差別性を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몇가지 〈體制的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1) 마르크스-레닌주의 또는 그것의 變形이라고 할 수 있는 思想을 공식적인 당과 국가의 指導理念으로 삼고 있다는 점, (2) 黨의 領導權이 이념적, 정치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장되어 있는 黨國家體制를 견지하고 있

다는 점, (3)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國有化, 集團化를 통하여 私的 經濟와 市場經濟 領域을 억제하고,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4) 陣營論的 世界觀에 입각한 국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라고 假定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假定에서 출발하여, 이 研究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變革運動, 또는 改革運動이란 결국 앞에서 말한 社會主義體制가 기본적으로 共有하고 있는 共通의 特性중에서 상당부분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既存의 이데올로기와 黨國家體制, 經濟構造와 經濟管理體制, 그리고 陣營論的 世界觀등에 있어서 重大하고 의미있는 變化를 시도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개혁운동, 또는 변혁운동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第3章 北韓社會主義體制的 變化要因>에서는 北韓과 다른 社會主義國家들이 共有하고 있는 體制的 性格이 무엇이며, 북한의 社會主義體制가 가지고 있는 特殊性이 무엇인가를 분석함으로써, 北韓體制的 變化를 誘發할 수 있는 要因과, 變化에 抵抗하는 要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북한의 變化가능성과 變化방향을 예측하려고 하였다.

특히 金日成 - 金正日의 權力承繼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體制的 課題와 危機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북한 정치 엘리트들의 對應方案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함으로써, 北韓의 變化 可能性과 變化의 方向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체제의 變化가능성과 방향을 예측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지적한 사회주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부문에서 意味있는 變化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主體思想과 首領論에 입각한 북한의 黨 - 국가체제, 그리고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관리체제, 진영론적 사고와 정책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의미 있는 변화'란 상당 부분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변혁운동, 또는 개혁운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의미있는 변화'라고 설정하였다.

(1)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전면적으로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階級的 和解와 協力을 강조하는 경우, (2) 공산당의 영도권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政治制度의 變化가 있는 경우, (3) 私的 經濟와 市場經濟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영역을 상당부분 축소하는 경우, (4) 진영론적 사고를 포기하고 국제적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對外開放을 시도하는 경우

물론,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운동이 앞에서 지적한 4가지 분야의 변화를 동시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中國의 개혁운동은 (1), (3), (4)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공산당의 영도권을 포기하거나 수정하는데에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비하여, 蘇聯이나 東歐의 경우는 특히 (2)의 영역에서의 변화가 다른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처럼, 각 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北韓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의미있는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북한에서 위의 4가지 영역 중 어느 한 영역에서나마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을 예측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第4章 北韓體制의 變化에 대한 豫想 시나리오〉에서는 앞에서의 사회

주의 체제의 변혁유형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북한체제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한 類型을 想定하고 각각의 경우에 북한의 변화가 어떤 樣相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豫想시나리오를 작성하려고 하였다.

이 경우 1980 년대에 북한이 보여준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양상을 분석하여 북한이 현재 追求하고 있는 변화의 방향이 어떤 것이며, 장기적인 차원과 단기적인 차원에서 과연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통제해 갈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은 북한 변화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았다.

- (1) 現體制를 유지하면서 部分的이고 漸進的인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경우
- (2) 김정일체제가 붕괴되거나 또는 변형되면서 變革的인 指導部가 중심이 되어 소련식의 위로부터의 급진적인 改革을 추진하는 경우
- (3) 루마니아와 같이 軍部 쿠데타나, 또는 民主化를 요구하는 밑으로부터의 압력으로 金日成-金正日體制가 崩壞되는 경우
- (4) 東獨과 같이 蘇聯 및 中國의 개혁압력과 內部的 불만이 결합되어 金日成-金正日體制가 붕괴되고 統一指向的 政權이 등장하는 경우

〈第5章 北韓體制的變化에 대한 對應〉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북한의 體制變化的 여러가지 類型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특히, 북한의 급격한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韓半島 安保 환경의 不安定性을 방지하고 우리민족 스스로의 자율적인 改革, 開放과 民主化를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南北韓의 協力과 統一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구상, 제시한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基本立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2) 북한의 비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對北韓政策의 基本方向과 구체적인 內容을 구상해 보며, (3) 소련과 중국 및 다른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北方政策의 방향을 설정하고, (4) 美國을 비롯한 友邦國

家들에게 어떤 협력을 구할 것인지를 검토하며, (5) 우리사회의 다양한 北韓認識과 統一論議를 고려하여 어떻게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가 (國民的 合意를) 얻을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3. 研究의 限界와 問題點

이와 같은 연구에서 흔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지만 정확하고도 실증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상당히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 研究 結果의 客觀性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은 이 연구의 客觀性에 결정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일견 普遍的인 現象처럼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기존의 사회주의체제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위기요인을 안고 있다고 假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정이 옳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같은 社會主義의 危機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개혁이나 변혁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밖에 없을 만큼 심각한 정도를 어떻게 判別할 수 있는지를 客觀的인 자료에 입각하여 작성된 基準을 提示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장기적인 經濟的 沈滯가 개혁의 중요한 요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침체가 體制的 危機를 촉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더구나 어떤 요인, 또는 어떤 요인들의 결합이 變革運動을 觸發시키는 것인지도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같은 위기의 중후군이나 개혁운동의 촉발요인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事後分析, 즉 개혁운동이 전개되면서 개혁주도세력들에 의하여 공개된 자료에 입각한 사후분석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개혁운동의 類型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各國의 사정이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개혁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면 각국의 特殊性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화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分類 對象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과연 3가지 또는 4가지의 변혁유형으로 구분한 것이 객관적인 妥當性이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사회주의국가중에서 '意味있는 變革'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은 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구의 6개 사회주의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두 8개의 변혁운동을 기초로 類型化를 시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셋째, 북한체제의 특징과 북한의 體制的 問題點을 評價하는 데에도 현재의 자료로는 거의 객관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변화 방향을 어느 정도 알기 위해서 필요한 政治的, 社會-經濟的 資料가 거의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연구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研究의 意義는 學問的인 次元에서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정리와 논쟁을 유발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체제변화 연구를 촉진시켜 줄 수 있으며, 實際的인 次元에서도 북한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객관화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예측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第2章 社會主義 國家의 變革運動과 變革類型

1. 社會主義國家의 變革運動이 갖는 歷史的 含意

1978년 中國共產黨 제 11기 3차 中央委員會 全體會議(이하 11기 3中全會) 이후 중국에서 추진한 개혁, 개방정책, 1985년 蘇聯共產黨 第1書記로 선출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소련에서 진행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 그리고 지난 1980년대 이후 점차로 성숙되어 마침내 1989년에는 東歐의 사회주의체제 몰락으로 나타난 사회주의국가들에서의 大變革運動은 역사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것은 첫째, 사회주의체제의 完全 沒落(동구의 경우), 사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認識의 變化(소련의 경우), 그리고 기존의 스탈린적 사회주의에 대한 質的變化(중국의 경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들 나라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운동은 제2의 革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둘째, 이같은 변화가 사회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과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변화는 개별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에게, 그리고 全世界的 차원에서 기존의 질서와 理念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세계를 지배했던 계급적, 冷戰的 思考와 秩序의 根本的인 變化를 불가피하게 결과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권의 변혁운동은 歷史的이고 世界的 意味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獨逸의 統一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변혁운동은 사회주의권의 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차대전 이후 형성된 世界秩序의 改編이 불

가피한 역사의 과정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歷史的이고 世界的인 含意를 가지는 혁명적인 변혁운동이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것은 물론 아니다. 사회주의국가에서 改革運動의 歷史를 조금만 살펴본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된 이후 계속적으로 등장했던 개혁운동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같이 (1) 蘇聯에서는 볼셰비키정권이 수립된 직후부터 여러 차례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1921년 내전의 종식과 더불어 레닌에 의하여 제시된 新經濟政策, 1956년 후루시초프에 의하여 촉발된 스탈린격하운동과 平和共存政策, 그리고 1970년대의 코시긴의 경제개혁과 브레즈네프이후 등장한 안드로포프의 개혁운동과 같이 소련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70여년 동안 크고 작은 개혁운동이 여러차례 반복되었고, 소련의 지도층 내부에서도 改革派와 保守派들의 논쟁과 정책대결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¹⁾

(2) 中國에서도 1956년의 百花齊放과 百家爭鳴운동, 1961년에서 1964년 사이에 柳소기, 등소평등이 주도한 실용주의적인 경제정책, 그리고 1973년에서 1975년 사이에 주은래와 등소평이 제창했던 現代化政策등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조적인 좌파의 정책에 대한 개혁운동이 연속적으로 시도되었다. 특히, 중국은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경험하면서 지도층 내부에 이데올로기적인 성향과 정책목표, 그리고 권력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左派와 實用主義派가 형성되어 치열한 路線鬭爭을 벌인 歷史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과 개방정책도 대체로 과거의 실

1) Stephen F. Cohen, "Friends and Foes of Change", The Soviet Union Since Stalin, ed. by Cohen, Rabinowitch, Sharlet (Indiana Univ., 1980) p.17. 코헨은 특히 스탈린 死後의 소련정치를 양 경향 사이의 대립으로 특징지운다.

용주의노선을 종합,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3) 東歐에서의 개혁운동은 이미 1950년대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956년의 헝가리사태와 1968년이후 헝가리에서 도입되어 동구 사회주의국가에 실험적으로 시도되었던 신경제제도와 市場社會主義, 1968년의 ‘프라하의 봄’, 1980년과 1981년 폴란드에서의 自由勞組運動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동구사회에서 스탈린적 사회주의에 대한 저항과 변혁운동의 역사는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와같이 오늘날 사회주의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변혁운동은 과거의 개혁운동에서 그 역사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中國의 경우는 다시 보겠지만, 초기단계에 개혁을 주도한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 毛澤東時代に 實用主義의 路線을 표방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개혁정책도 과거의 정책을 보완, 발전시킨 것이란 점에서 과거의 개혁정치와의 강한 政治的, 歷史的 連續性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개혁운동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의 왜곡이나 제도상의 결함을 수정, 보완하는 부분적인 개혁인데 비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회주의권의 변혁운동은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危機意識과 회의감에서 출발하여, 과거에는 의심없이 받아들였던 사회주의 원칙에 대한 根本的인 再解釋이나 심지어 拋棄까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개혁운동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후루시초프의 개혁운동도 스탈린에 의한 사회주의의 왜곡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이념과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樂觀主義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후루시초프의 낙관주의는 1961년에 개척된

2) 徐鎮英, “中國共產黨의 役割認識 變化”, 『亞細亞研究』(제 78호), 1987, pp.253-261.

소련공산당 22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야심적인 개혁안에 반영되어 있었다. 여기서 후루시초프는 “소련에서 社會主義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勝利했으며, 전면적인 共產主義社會를 건설하는 시기에 돌입했다”고 선언하고, 1980년까지는 농산품과 공업제품의 1인당 생산량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 잡을 것이라고 호언하였다. 이와같이 후루시초프는 역사는 최종적으로 사회주의의 승리로 귀결할 것이란 낙관론에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平等共存을 주장하였다.³⁾

비록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개혁주의자들, 특히 동구의 개혁주의자들은 후루시초프의 낙관론보다는 점차로 참을 수 없는 질곡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혁보다는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經濟改革에 局限시켰다. 헝가리의 이른바 시장 사회주의라든가 중국의 실용주의자들이 주도한 신경제정책도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정치질서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모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경직화된 管理體系를 修正, 補完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部分的인 改革이었다고 볼 수 있다.⁴⁾

이에 비하여 現在 동구는 물론이거니와 소련에서 추진되고 있는 변혁운동은 사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根本적인 變化를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서는 후루시초프시대의 개혁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회주의의 장래에 대한 낙관주의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반대로 고르바초프의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언명에서 극명하게 표출된 것처럼 사회주의에 대한

3) Ernst Kux, “Contradictions in Soviet Socialism,” Problems of Communism (Nov.-Dec. 1984), pp.10-11에서 재인용

4) J. Kornai, “The Hungarian Reform Process: Visions, Hopes and Re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24, (Dec.1986)

심각한 危機意識에서 變革運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혁운동은 사회주의의 기본원칙을 재해석하거나 포기하는 革命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중국의 소위 ‘中國의 社會主義’는 사회주의의 원칙 고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 1989년 6·4 천안문사태이후 중국의 개혁정치는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鄧小平이 등장하여 지난 10여년간 추진한 改革·開放정책은, 그것이 비록 기존의 사회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나 포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택동시대의 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성격과 내용을 가지는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란 점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변혁운동은 과거의 개혁운동과 역사적 연속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變化의 切迫性, 急進性, 包括性에서 있어서 革命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혁명적인 변혁운동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의 將來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주의국가의 개혁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과 사회주의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危機의 性格과 對應方案, 그리고 社會主義의 將來에 대한 서로 다른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社會主義 沒落論

브레진스키교수의 “대실패 (The Grand Failure)”,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 (The End of History)”, 그리고 “Z 논문”으로 알려진 “스탈린 영전에 바침 (To the Stalin Mausoleum)” 등의 서구학자들의 논문과 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가정은 현재 사회주의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침체와 관료주의적 병폐에서 유래되는 일시적인 위기

가 아니라 (一般危機 (General Crisis), 總體的 危機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理念과 制度, 政策 등 모든 영역에서의 위기이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20세기에 시도되었던 공산주의의 실험은 '대실패'로 끝났다고 선언하고, 현존하는 사회주의체제는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마침내 市場經濟와 政治的 多元主義를 수용하고 사회주의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이들은 현재 소련이나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개혁은 본질상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市場經濟와 計劃經濟의 兩立은 궁극적으로 不可能하고, 市民社會의 活性化와 더불어 黨의 支配를 계속 견지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長期的인 次元에서 사회주의의 체제는 몰락하고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장경제가 지배적인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주의의 몰락이 곧 모든 사회가 서구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이후 대부분의 사회는 民族主義的이고 權威主義的인 段階를 거쳐서 다원주의적인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나. 새로운 社會主義 建設論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급진적 改革主義者들이나 西歐의 마르크시스트학자들은 현재 사회주의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앞의 사회주의 몰락을 주장한 서구의 학자들처럼, 그와 같은 危機의 起源을 사회주의라든가 마르크시즘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古典的 마르크시스트들이 추구했던 理想의 포기, 또는 歪曲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스탈린에 의하여 定式화된) 社會主義가 사회주

의체제의 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레닌으로 돌아가자”는 구호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바와같이 스탈린이나 모택동에 의하여 왜곡된 사회주의를 폐기하고 마르크스와 레닌이 추구했던 ‘人間의 얼굴을 가진 社會主義’를 건설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급진적인 개혁파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사회주의에 대한 원칙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밀리반드(R. Miliband)와 같은 西歐의 마르크스주의學者들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의 위기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사회에서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왜곡됨으로써, 官僚權威主義的인 政權과 경직된 經濟, 社會的 統制體制가 수립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체제에서 市民的 自由의 확대와 정치적, 경제적 民主主義를 실현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참다운 社會主義의 理想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만델(E. Mandel)과 같은 혁명적 마르크시스트들은 소련의 사회주의체제는 진정한 사회주의라기보다는 ‘獨占的인 官僚支配階級에 의하여 통치되는 권위주의적 官僚國家’라고 정의하고, 이같은 관료국가에서의 위기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같은 개량적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델에게 있어서 ‘참된 사회주의는 勞動者와 農民의 階級的 利害가 관철되며, 그들이 참된 주인이 되는 기층 民主主義의 擴大, 強化를 통해서만 도

5) R. Miliband, “Reflection on the Crisis of Communist Regime”, in New Left Review, no. 247.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

다. 社會主義 強化論

中國의 보수적 개혁파나 北韓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회주의체제의 위기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체제의 포기나 또는 사회주의체제의 질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만큼 심각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에 근본적인 缺陷이 있다는 인식을 거부하면서도 改革의 必要性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체제에서도 관료주의적 병폐라든가 경직된 경제관리체제, 그리고 잔존하고 있는 (봉건적인 구습등)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制度的, 政策的인 缺陷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部分的인 改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산당의 영도권에 기초한 黨-國家體制를 維持하는 범위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대가 필요하고, 공유제와 계획경제의 기초 위에서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와 사적 경제를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라. 發展論的 視角에서 본 社會主義 改革論

현재 사회주의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심각하며, 그것은 대체로 스탈린주의적 왜곡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앞의

6) Ernest Mandel, Beyond Perestroika : The Future of Gorbachev's USSR (London : Verso, 1989)

7) 중국공산당 13全大會에서의 趙紫陽의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에 이러한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社會主義 初級段階로 중국의 현재상황을 규정하고 개혁을 확대-추진하는 한편, 이것의 기본원칙으로 四項基本原則, 즉 사회주의 노선 견지, 인민민주독재의 견지, 당의 영도 견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 사상의 견지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2)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탈린에 의하여 정식화된 기존의 사회주의가 모든 위기의 근원이 아니며, 오히려 社會主義社會의 發展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사회주의는 냉전적 상황에서 급속도의 産業化와 국가 건설을 추진하면서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왜곡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産業化·近代化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發展된 社會가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보수적인 體制擁護論者들을 除外하면, 대부분이 기존의 사회주의체제가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같은 危機의 根源은 기존의 사회주의체제가 경직된 이데올로기, 관료적 지배와 정치적 民主主義의 缺如, 과도한 計劃經濟構造등으로부터 유래한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보수적 개혁파도 민주주의의 확대와 보완적인 차원에서나마 시장경제와 私的經濟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개혁운동이, 사회주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스탈린과 모택동에 의하여 정식화된 社會主義의 質的 變化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2. 變革運動의 原因 : 一般的 原因

소련, 중국, 동구의 사회주의국가에서 혁명적인 변혁운동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社會主義國家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의

8) S. Frederick Starr, "Soviet Union : A Civil Society", Foreign Policy, No.70 (Spring 1988)이 가장 대표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問題點을 노출하면서 개혁운동을 전개함으로써 革命的 變革運動의 도미노현상마저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다시 설명하겠지만, 개별적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변혁운동은 各國의 歷史的, 政治的, 社會-經濟的 特殊性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사회주의체제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체제적 성격 때문에 사회주의국가들은 개별적인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一般的 危機要因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革命的 이데올로기의 日常化와 信心의 危機

혁명과정과 초기의 사회주의사회의 건설과정에서 어느정도 대중적 호소력을 가졌던 혁명적 이데올로기는 共產黨의 支配가 공고해 지고, 공산당세력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적대적인 계급도 정치세력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베버가 말한 바와 같은 日常化(rountinization)의 過程을 밟게 되는 것은 모든 혁명운동이 경험하는 不可避한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정착되면서 점차로 大衆動員과 大衆統制의 手段으로 변질함에 따라 사회주의적 理想과 大義가 왜곡되고 의례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이 체제의 正統性의 근간으로 강조되는 사회주의체제에서 “理想과 現實”의 乖離가 심각하게 노정되면서 혁명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중적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팽배하고 社會主義에 대한 信心의 위기까지 초래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과거 전통사회의 질곡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중에서 이같은 “이상과 현실”의 乖離에서 비롯되는 현존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와 불만은 사회주의의 將來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다. 1984년에 모스크바에서 발행되는 「Komsomol'skaya Pravda」는 소련의 젊은 세대들

이 사회주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만과 회의감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왜 사회주의사회의 現實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것일 수가 없는가. 어째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물자부족과 불균형,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는가... 왜 우리의 목표는 항상 실현될 수 없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인가. 공산주의 理想과 우리의 현실적 삶과의 관계는 무엇이며, 미래에 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理論的 觀點과 현실의 실제와의 관계는 무엇인가.”⁹⁾

사회주의에 대한 이같은 信心의 위기는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사회에서 이데올로기는 體制와 政權의 正統性을 주장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의 지도자들은 개혁운동이 있기 전에도 이같은 이데올로기적 위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大衆的인 思想教育 運動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文化革命도 어떤 면에서는 이같은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퇴조와 일상화에 위기감을 느낀 모택동과 左派들의 思想革命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교육운동은 사회주의체제가 大衆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더욱 信心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산출하였다. 덩소평은 개혁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1976년에 이같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의 工業, 農業, 國防, 그리고 科學技術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런 말을 지켜울 정도로 들었고,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9) Ernst Kux, 앞의 논문, p.7.

사회주의에 대한 이같은 信心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대중들의 生活改善에 대한 욕구와 직결되는 경제적 위기가 信心의 위기를 더욱 침체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불만과 더불어 黨-國家體制의 政治的, 社會的 閉鎖性과 硬直性이 대중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信心의 위기를 보여주는 여러가지 症候群을 분석하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심각한 信心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후군으로는 첫째, 사회주의국가의 지도층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 둘째, 비록 극소수 지식인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反體制運動이 활동하는 경우, 셋째, 광범위한 社會的 逸脫現象이 나타나는 경우, 넷째,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大衆들의 비조직적인 示威나 暴動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증후군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제적, 정권적 위기로인한 안고 있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이같은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深刻度에 있다고 하겠다. 불행히도 信心의 위기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험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각 사회주의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信心의 위기 정도를 제시할 수 없지만, 소련, 중국, 동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症候群에 대한 內容分析을 해 본다면, 이들 사회주의국가에서 信心의 위기는 변혁운동이 있기 전에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이들 사회주의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대중들의 無關心과 냉소주의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3년 蘇聯共產黨 중앙위원회에서 당시 서기장이었던 안드로포프(Andropov)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黨의 指導的 役割”이 실제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상부로부터의 지시는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계획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안드로포프에 의하면, 당시 지시에 대하여 대중들은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따라서 대단히 필요한 조치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⁰⁾

둘째,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反體制運動이나 비판적 大衆運動의 발생은 대체로 억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동구, 중국에서 公式的인 體制理念에 도전하는 반체제운동이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東歐에서는 각 분야에서 批判的 知識人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변혁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폴란드의 경우 連帶勞組運動은 공산당 지배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체제적 위기를 촉발할 정도였다. 동구와 같이 활발했던 것은 아니지만, 蘇聯에서도 후루시초프시대 이후 반체제운동이 태동하여 사하로프, 솔제니친과 같은 科學者, 作家들은 물론이거니와 공산당내의 지식인, 黨員 일부까지도 포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71년을 정점으로 당국의 적극적 탄압에 분산되고 약화되었지만, 사미즈다트(samizdat)와 같은 地下刊行物등을 통하여 체제이념과 당의 독재에 대한 批判運動을 계속하였다.¹¹⁾

中國의 경우는 소련이나 동구보다 공개적인 반체제운동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1956년의 백화제방운동 당시 지식인들은 黨天下에 대한 격렬한 비

10) Kux, 앞의 논문, p.9.

11) 趙政男, 『蘇聯反體制論』(대왕사, 1983) pp.49-52.

판을 제기하였고, 문화혁명이후에 소수의 ‘青年民主派들’에 의하여 모택동의 개인숭배와 전체적인 통치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발표하였다. 1973년에 李正天, 陳一陽, 郭鴻志등에 의하여 발표된 이른바 ‘李一哲 大字報’ 사건은 ‘관료특권계급의 독재와 사회주의 파시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큰 충격을 주었다.¹²⁾

셋째, 信心의 위기를 반영하는 사회적 일탈현상의 문제는 특히 소련의 경우 알콜리즘과 범죄율의 증가와 같이 사회적 紀律과 紀綱의 이완이 심각한 정도로 발전하여, 안드로포프가 집권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紀律과 秩序’였을 정도였다. 사실, 소련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이같은 사회적 일탈현상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노동규율의 이완과 勞動生産性의 低下현상은 사회주의사회의 보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¹³⁾

넷째,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대중적 불만은 조직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우발적인 계기나 국지적인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폭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自律的인 정치조직이나 사회단체가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대중적 시위에 대한 當局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彈壓으로 말미암아 대중적 시위가 확산되지 못하고 잠복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여러가지 형태와 규모의 공개적인 罷業과 示威가 발생하고 있다. 동구의 대변혁이 바로 이같은 대중적 시위와 民衆蜂起의 형태에서 시작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련이나 중국에서도 변혁운동이 있기 전에 이미 이와같은 형태의 시위와 파업이 증가하고 있었다.¹⁴⁾

12) Li I-Che, “Concerning Socialist Democracy & Legal System”, Issues & Studies, 7:1 (Jan. 1976), pp.110.

13) 제프리 호스킹, 김영석譯, 『소련사』(홍성사, 1988), pp.443-444.

14) 소련의 경우 80년대 초반까지의 노동자 소요에 대해서는 Betsy Gidwitz, “Labor Unrest in the Soviet Union,” Problems of Communism, 31:6 (1982. 11-12)을 볼 것.

특히, 中國에서 있었던 1976년의 천안문사태는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로까지 심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976년 4월 5일, 전통적인 淸明日을 계기로 주은래를 추모한다는 명분으로 천안문광장에 모인 수십만의 군중들은 당시 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모택동과 문화혁명 좌파를 통렬하게 비판함으로써 중국의 지도층을 경악하게 했던 사건은 사회주의에 대한 信心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하겠다.¹⁵⁾

나. 黨 - 國家體制의 非民主性和 官僚主義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사회주의에 대한 信心의 위기가 심화된 데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작용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당 - 국가체제의 비민주성과 관료주의에 대한 불만에서도 비롯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사실, 사회주의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問題點중의 하나는 人民의 政治的 參與를 보장하고 정권과 體制의 政治的 正統性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를테면, 선거와 의회제도 같은 것을 節次的 民主主義, 또는 부르조아적 민주주의라고 배격하면서, 선언적인 차원에서만 프롤레타리아독재가 實質的인 民主主義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는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사실상 인민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고 관료특권계급의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차원에서 가장 극명하게 사회주의의 '理想과 現實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체제에서도 대중의 정치적 參與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것

15) Tseng Yung-Hsien, "The Tienanmen Incident & Chinese Count Mass Movement," Issues & Studies Aug. 1976, pp.31-40.

은 아니다. 당국과 국가의 각급 수준에 人民代表者會議가 설치되어 있고, 대의원에 대한 선거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黨-國家체제에서 이같은 선거와 대의제도는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지도자를 선출하고 대중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라기보다는 政治教育과 動員의 性格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지배와 당국가체제의 정당성을 이를 통하여 입증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다. 사실, 당의 지배는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통치이념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선형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선거와 代議制度는 형식적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사회주의국가는 이른바 ‘黨天下’와 ‘관료특권계급의 지배,’ 그리고 각급 수준에서 ‘1인장기집권’과 같은 현상에서 파생하는 政治的 危機要因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官僚主義의 問題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보수파나 개혁파 모두가 사회주의체제의 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것이다. 만델(E. Mandel)과 같은 학자는 蘇聯의 위기를 사회주의의 위기라기보다는 관료주의의 위기로 보고 있을 만큼, 사회주의사회에서 관료주의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¹⁶⁾

사실, 정치적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權力이 당과 국가에 集中되어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관료의 특권화와 관료주의의 병폐는 非사회주의사회에서 보다도 훨씬 심각한 政治的, 體制的 問題를 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의 지도자들은 大衆路線을 강조하기도 하고, 下放과 같

16) Ernest Mandel, Beyond Perestroika: The Future of Gorbachev's USSR (London: Verso, 1989), pp.31-34.

은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가와 당의 관료들로 하여금 대중의 경험을 체득하게 하는 방식도 실시해 보기도 하였으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각종 監督機構를 강화하여 관료주의를 억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으로 관료의 특권화와 관료주의가 극복되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행정적 合理化와 制度化를 阻害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관료주의적 통치가 계속되었다. 브레즈네프시대의 소련이 보여준 것처럼, 당-국가체제가 안정화되면서 보수적인 官僚權威主義의 성격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체제의 적응력과 탄력성이 상실됨으로써 체제의 위기가 심화된다는 역설은 거의 모든 脫革命期의 社會主義國家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 장기적 經濟沈滯와 체제의 위기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요인 가운데 가장 강조되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사회주의국가들의 長期的인 경제침체와 그에 따른 대중들의 累積된 不滿이다. 사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적인 변혁운동이 폭발하게 된 가장 구체적인 원인은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로 말미암아 대중들의 생활개선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성적인 소비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 生活苦를 절감해야했던 蘇聯의 인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 있어서도 인민대중들의 경제적 불만은 사회주의체제의 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爆發力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北韓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1960년대까지 成長과 發展의 시기를 경과한 후 성장률의 정체와 經濟的 效率의 전반적 약화라는 동일한 증상에 시달렸다. 소련의 경우 1960년대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던 경제가 70년대에 접어들어 발전의 動力을 상실하면서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빠져들었다. 1971년부터 1985년 사이에 국민소득의 성장

률은 거의 2.5배나 감소하였고, 1979-82년 기간 중에는 전례없는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工産生産이 40%나 감소했고, 農業生産 역시 후퇴했다.¹⁷⁾ 이 시기 폴란드 역시 총 GN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제위기에 시달렸다. 다음 표 1과 2에서 보듯이 70년대 이후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成長率은 지속적으로 下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 蘇聯·東歐諸國의 經濟成長推移

구 분	1971-75 年平均		1976-80 年平均		1981-85 年平均		1986-1987		1986-90 年平均 計劃值
	經濟 成長率	投資 增加率	經濟 成長率	投資 增加率	經濟 成長率	投資 增加率	經濟 成長率	投資 增加率	
蘇 聯	5.7	7.0	3.8	3.4	3.3	3.3	4.1	2.3	4.0
불가리아	7.8	8.6	6.1	8.6	3.7	4.3	5.5	5.1	4.4
체 코	5.6	8.2	3.7	3.9	1.8	-0.4	3.2	2.0	3.5
東 獨	5.4	4.8	4.2	3.4	4.5	0.1	4.3	4.0	4.6
헝 가 리	6.2	6.9	3.2	2.4	1.4	-2.0	0.6	2.0	3.0
폴 란 드	9.8	17.5	1.2	3.0	-0.8	-7.5	5.2	2.0	3.5
루마니아	11.3	11.4	7.3	8.5	4.4	1.3	7.3	4.8	7.5

資料 : OECD, Financial Market Trends, Feb., 1983.

The Economist, International Economic Appraisal Service, 각호.

- * 經濟成長率은 순물질생산(Net Material Products) 기준
- * 투자증가율은 총고정투자기준

17) 아간베기안, 김태홍·장오현譯,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적 도전』(우아당, 1989) pp. 10-11.

<표 2>

소련 : 1965 ~ 85년 기간중의 경제지표
(제 8 차 ~ 11 차 5개년계획기간)

구 분	(1965 = 100)		(1970 = 100)		(1975 = 100)		(1980 = 100)
	1970 (계획)	1970 (실제)	1975 (계획)	1975 (실제)	1980 (계획)	1980 (실제)	* 1985 (실제)
국민소득	199.5	141	138.6	128	126	120	116.5
산업생산	148.5	150	147.0	143	137	124	
생산재	150.5	151	146.3	146	140	126	
소비재	144.5	149	148.6	137	131	121	

資料 : Alec Nove, An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Penguin Books, 1982), p.377, * 부분은 아간베기안, 앞의 책, p.82에서

이같은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현상은 소련과 동구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中國의 경우도 소련이나 동구에서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즉, 1966년부터 1970년 사이 中國의 GNP 성장율은 8.3%이었지만, 1971년에서 1975년 사이에는 5.6%로 하락하였고, 1978년의 改革直前에는 1.9%까지 저하되었다.¹⁸⁾ 이같은 경제성장의 둔화로 말미암아 中國 국민들의 生活水準은 1970년대 후반기에도 195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와같이 사회주의국가들이 장기적인 경제적 정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蘇聯 국내의 專門家들에 의하면, 사회주의체제의 경제는 다음과 같은 限界要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¹⁹⁾

18) 『계간 공산권경제』 제 1권 1호, 1984.3, p.138.

19) 경제침체의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아간베기안, 같은책 : Alec Nove, 위의 책, pp.371-391 : 안택원, 『소련, 그 열정과 좌절 : 역사, 철학 그리고 사회주의』 (인간사랑, 1989), pp.163-179을 주로 참고.

첫째는 經濟構造와 發展段階의 一변화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資源投資의 增大를 주된 동력으로 발전해온, 外延的 一성장단계에서 內包的, 質的 발전단계로의 轉換點에 도달하였으나, 경직된 經濟管理體制가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조정해내지 못하는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中央集中的 計劃體系의 한계이다. 첫째 요인과도 직접 관련되는 이 부분은 계획기간별 生産目標 第1主義를 직·간접적으로 고취하여 기술 혁신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生産性的 증가를 생산기술의 진보와 혁신에 의존해야 하는 技術情報革命의 時代에 사회주의경제의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들과의 經濟的 間隔이 확대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계획경제의 문제점은 浪費와 不足의 문제이다.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의 無計劃性을 비난하고 스스로의 우월성의 근거로 내세웠던 계획체제는 그러나 오히려 市場의 調節機能을 대체할 어떤 효율적인 장치도 개발하지 못한 채 자본주의 경제보다 더 많은 원료와 에너지, 그리고 노동력을 사용하여 더 적은 產品을 생산해 내는 非能率的 經濟構造와 경제관리체제를 결과하였고, 결국 장기적 경제침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⁰⁾

결국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위기 원인은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에서 파생되는 資本蓄積의 문제, 技術水準의 낙후성, 불합리한 價格構造, 비효율적 資源使用 등의 문제들이고, 이같은 문제점은 기존의 사회주의 經濟의 構造의 改革과 함께, 전혀 새로운 經濟발전전략과 經濟관리체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의 成長鈍化 要

20) 아간베기안, pp.47-48, p.137 : 브레진스키, 명순희譯, 『대실패』, (을유문화사, 1989) pp.49-50.

인므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특히 소련이나 북한의 경우, 과도한 國防費의 負擔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사회주의진영의 宗主國으로서 소련은 미국의 對유럽 군사주둔에 직접 대응해야 했으며, 나아가 전세계에 걸쳐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2차대전이후 원자·수소폭탄의 제조, 인공위성의 발사 등 軍事·戰略的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자원의 상당부분을 투입해야만 하였다. 특히, 1961년 쿠바사건을 통해 미국과의 軍事的 對決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한 소련은 브레즈네프 시기에 美·蘇간의 軍事的 均衡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군사비로 지출하였다. 미국의 경우 40%에 불과한 經濟力을 지닌 소련으로서는 이같은 국방부문의 힘겨운 出血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970년 이래 소련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나 대략 GNP의 1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機械工業과 金屬產業 생산량 가운데 최고 품질의 20~30%가 軍事部門에 투입되었음을 생각할 때, 이는 서구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악화되고 있던 소련의 民間經濟部門에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곡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점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고 하겠다.²¹⁾

라. 社會的 多元化와 사회주의체제의 위기

앞에서 말한 發展論的 觀點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사회주의사회의 '發展'

21) Alec Nove, p.379 : 안택원, pp.175-176 : 특히 국방비 지출규모에 대한 다양한 평가의견들은 Carl Gustar Jacobsen, "Soviet Defence Costs-the Unquantifiable Burde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24, no. 4(December 1987), pp.333-338 : R. T. Maddock, "The Soviet Defence Burden and Arms Control," 같은 잡지, p.384를 보라. 美 국방성에서는 17% 수준까지 올려보고 있다.

으로부터 기본적으로 動員體制的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의 위기가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다시말해서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사회에서 ‘위로부터의 革命’이란 방식으로 급속도의 産業化와 近代化를 추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그 결과 사회주의사회가 多元化됨으로써 기존의 억압적이고 一元的인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東歐의 몇나라, 이를테면 체코슬로바키아라든가 동독과 같은 나라들을 제외하면, 소련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은 前 産業化段階에서 사회주의에로 移行하였고, 이들 사회주의국가들은 스탈린주의적 발전모델을 원용하여 급진적인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여 나름대로의 가시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사회주의사회가 최소한 외형상으로는 産業社會로 발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북한의 경우도 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선 이후, 강력한 大衆動員과 자원의 집중적 동원, 투자를 하면서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사회주의사회가 近代化를 나타내는 모든 指標를 보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發展된 産業社會의 段階에 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스탈린이 사망했을 당시만 해도 농업사회였던 蘇聯은 급속도의 산업화의 결과로 1977년 무렵에는 전체인구의 약 1/3가, 오늘날에는 약 3/4의 인구가 都市에 거주하는 엄청난 社會的 變化를 겪었다. 이와같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한때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을 넘어섰던 콜호즈 농민이 이제 겨우 전체인구의 12.5%만 차지하게 되었다.²²⁾ 이같은 변화는

22) 소련의 도시화와 계급구성 정도에 대해서는 송두울, 『소련과 중국』 (한길사, 1990), pp.114-115 : S. Frederick Starr, "Soviet Union : A Civil Society," Foreign Policy No.70 (Spring 1988) p. 28을 참고.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적 다원화를 예상할 수 있는 증거로서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教育水準의 확대와 專門家 集團의 성장이다. 소련의 경우, 1939년에는 전 인구의 10% 미만이 中等教育을 이수했던 데 반해 1987년에는 89.5%가 최소한 10년차의 중등교육을 받았다고 한다.²³⁾ 이와 같은 교육수준의 확대와 더불어 전문가 집단이 급속도로 증가되었다. 레윈 (Moshe Lewin)에 의하면, 1941년에 1,100만의 被雇傭者중에서 240만명이 고급의 전문화된 교육을 받았는데, 1960년에는 1,600만명의 피고용자중에서 절반이 전문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소련에는 약 3,150만명의 전문가가 있으며, 이중에서 약 1,350만명은 고등교육을 받았고, 1,800만명이상이 전문화된 중등교육을 받았다고 한다.²⁴⁾

이와같이 산업화, 근대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주의사회가 다원화, 복잡화되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의 계획과 통제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소련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고스플란 (국가계획위원회)이 국가의 物的, 人的 資源을 망라한 計劃을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기한 소련사회에서 그같은 계획은 어차피 한계성을 지닐 수 밖에 없으며, 정치적,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과거와 같은 통제가 점점 힘들어 지는 것도 사실이다.

스타 (Starr)는 KGB와 경찰이 현대적 대도시의 수백만 인구들 속에서 監視와 監督의 수준을 예전같이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犯罪率의 지속적인 증가, 아프가니스탄사태 발생시 유례없는 徵集回避事例의 증가등을 실례로 들고 있다.²⁵⁾ 이같은 국가의 統制力 弛緩은 사회의 독자적인 輿論形成構造를 낳게 되었다. 非公式集團이나 소집단들의 활동이 활성화

23) S. F. Starr, "Soviet Union : A Civil Society," pp.29-30.

24) 모세 레윈, 『고르바초프현상』(1990), pp. 51-55.

25) Starr, 앞의 논문, p. 30.

되고 국가의 공식적인 선전은 이를 통해 여과되어 사회에 전달됨으로써 당
파 국가의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도 腐植되었다. 물론, 情報通信手段의 보
급은 이같은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켰다.²⁶⁾

이와 같이 사회주의국가에서 산업화와 근대화의 결과로 '市民社會'가 발
견, 성숙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는 점차로 밑으로부터 變革의 壓力을 받
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의 압력은 특히 西歐의 시민사회적 傳統
이 강하게 남아 있는 東歐에서 기존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즐기찬 저항과
거부의 형태로 극명하게 표출되었다고 하겠다.

사실, 東歐社會는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사회와는 달리, 동
구사회의 사회주의적 改造에 성공하지 못하여 사회주의정권하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市民社會的 要素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농업부문에서도 사적
영역이 상당히 허용되었고 사회적인 다원성과 自律性도 어느정도 인정되었
다. 아래의 <표 5>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동구사회는 여전히 강한 宗教

<표 5> 東歐의 宗教人口 (1983) (전체인구중 %)

	카 톨 릭	프로테스탄트	그리스정교	이 슬 랍
폴 란 드	95			
체 코	70	10		
유 고	31		40	16
헝 가 리	56	칼빈교 19 기 타 5		
루마니아	10		70	
불가리아	1		70	10
동 독	7	46		

資料 : The Economist, 1983.9.10, pp.63-4.

26) 레윈, 앞의 책. pp.63-79 : Starr, pp.32-33.

的인 傳統을 유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동구사회의 산업화는 이러한 시민사
회적 전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체제의 異質性을 심
화시켰고, 그와 같은 '國家와 社會'의 葛藤과 모순이 사회주의체제의 붕
괴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 社會主義 體制改革의 國際的 要因

국제적 차원에서 冷戰的 秩序의 이완과 사회주의사회의 國際的 開放度의
증가가 중요한 사회주의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라는 점은 새삼 강
조할 필요가 없다. 사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의 深化는 국내적으로 계
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를 강화하는 名分으로 작용하였고, 사회주의적
國際主義를 강조하면서 蘇聯의 규정력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데탕트와 多極的 國際秩序의 확산은 이념적, 군사적 대결보다는 정
치적, 경제적 相互協力の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특히, 이같은 데탕트
의 확산과 더불어 西方世界와의 국제적 交流가 증가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심화됨으로써 改革, 開放을 요구하는 압력이 가중되
었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 개방도와 사회주의체제의 변혁운동은 밀접한 관
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사실은 특히 동구의 대변혁에서 극명하게 입
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구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西歐와 밀접
한 관계에 있었던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가장 급격한 변혁의 물결에 휩
쓸리게 되었다는 점과, 그 반대편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인 알바니아와 北
韓이 大變革의 와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등은 국제적 개
방도와 변혁운동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이다. 사실, 東獨이나 체

코슬로바키아의 西部는 서독 TV 시청이 가능하고, 다른 동구국가들 역시 旅行自律化등을 통해 서방세계와의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더이상의 폐쇄적인 체제유지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헝가리, 폴란드등은 일찍부터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서방세계에의 의존도가 증가되었으며, 이같은 동구국가들의 경제적 사정을 이용하여 원조와 차관공여를 조건으로 한 西方政府들과 IMF, IBRD 등 서방국가들이 주도하는 國際機構가 개방과 개혁을 계속 요구한 것도 동구에서 폭발적인 변혁운동이 발생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蘇聯의 경우도 1950년대 중반이후 西歐와의 接觸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서구와 소련을 비교하게 된 소련국민, 특히 인텔리겐차들의 現實認識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批判的 視覺이 대두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미국과의 군사적 균형이 어느정도 달성됨으로써, 이른바 자본주의국가로부터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위협감이 감소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蘇聯國民들은 점차 지금의 자신을 그전처럼 1920~30년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서구 인민들과 비교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게 만들었다.²⁷⁾

이런 점에서 中國도 소련과 비슷하게 安保的인 위협이 감소하면서 국내적인 현대화, 개방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可視化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도 1960년대에는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 소련과의 격렬한 理念的, 軍事的 紛爭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군사적 긴장과 경각심이 고조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같은 군사, 안보적인 위협이 감소되면서 중국의 지도

27) 호스킹, pp. 360-361. : 브레진스키, pp. 52-53.

층 내부에서 現代化와 開放을 요구하는 세력이 점차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모택동과 좌파의 영향력이 아직도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던 1975년에 이미 당시 實用主義派를 대변하던 주은래가 제 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금세기 내에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現代化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이른바 4개 現代化 路線을 제창하였고, 이와 같은 4개 現代化노선에 따라 등소평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개혁, 개방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시작함으로써 1978년의 역사적 개혁, 개방으로의 歷史的 轉換을 예비하였던 것이다.

3. 變革運動의 觸發要因과 變革過程

앞에서 각 사회주의국가들이 안고 있는 一般的인 體制危機要因을 살펴 보았다. 스탈린적 사회주의에 대한 信心의 危機는 특정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이란 見地에서, 이같은 사회주의에 대한 信心의 危機를 초래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 보았다. 共產黨의 領導權을 보장하고 있는 黨國家體制의 非民主性과 官僚主義에 대한 불만,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와 생활개선을 요구하는 일반 대중들의 요구, 社會的 多元化에 따르는 대중들의 기대상승과 좌절, 국제적 다원화와 開放化로부터 오는 압력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가. 이같은 의문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주도한 中國, 蘇聯, 東歐社會主義國家에서 변혁 운동이 표면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와 같은 變革運動의 直接的인 觸發要因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한다. 특히, 이들 나라의 변혁운동 초기단계에 초점

을 맞추어 改革主導勢力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 출현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성격과 改革戰略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가. 中國의 歷史的 路線轉換과 改革政治

1976년 9월, 毛澤東의 死亡과 끝이어서 文化革命 4人幫의 실각으로 중국은 역사적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鄧小平과 같이 모택동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舊官僚들과 지식인들은 모택동의 사망과 文化革命 4人幫의 실각을 계기로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바로 잡고,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도 모택동시대와의 결별을 모색하였다. 사실, 당과 국가, 그리고 인민들에게 ‘大災難’을 가져다 주었다는 문화혁명에 대한 반감은 구관료와 일부 지식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광범위한 대중들사이에서도 모택동시대의 좌경적 노선과 정책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

따라서 鄧小平을 중심으로 형성된 反左派 聯合勢力은 이같은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적 불만과 불신을 이용하여, 모택동의 지시와 정책노선을 계승하려는 이른바 凡是派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전개하였다. 實事求是, 또는 實踐만이 眞理를 檢證할 수 있는 유일한 基準이란 旗幟를 내걸고, 이들 반좌파 연합세력은 모택동시대의 정책과 노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모택동의 후계자로 부상한 華國鋒을 비롯한 당내의 좌파적 성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는데 성공하여, 1978년에는 마침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역사적인 노선전환을 실현할 수 있었다.²⁸⁾

이와같이 등소평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좌파 연합세력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1期

28) Harry Harding, China's Second Revolution : Reform after Mao,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pp. 48-65.

3中全會)에서는 ‘새로운 시기의 총체적 과업’을 四個 現代化 (농업, 공업, 과학기술, 그리고 국방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이라고 규정하고, ‘大規模的인 大衆的 階級鬭爭’의 終結을 선언함으로써, 계급투쟁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모택동시대의 좌경적 노선과의 결별을 명확히 하고, “現代化된 社會主義 強國을 建設하기 위한 長程”을 요구하였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反左派 聯合勢力의 지도자들은 3中全會의 결의를 통하여, 첫째, 인민들의 ‘思想解放’을 제창하였고, 둘째, “생산력의 발전에 적응되지 않는 모든 관리방식, 활동방식, 사상방식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셋째, “지난 한 세기동안 民主主義를 떠나서 中央集權을 강조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너무 적었다”고 지적하면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를 실현하고 法制를 강화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끝으로, 11기 3중전회는 중국의 문호개방을 선언하고,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중국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와같은 혁명적인 11기 3중전회의 결의에 따라 중국의 개혁파 지도자들은 사상해방운동을 전개하면서 階級鬭爭을 강조하는 문화혁명 左派들의 교조주의적 사상을 비판하였고, 그동안 신성시 되었던 모택동사상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再評價 作業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모택동시대에 실시되었던 左傾的 經濟制度和 經濟政策도 생산력의 발전을 阻害한다는 이유로 폐지하거나 수정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과거 20여년동안 ‘資本主義的 要素’라고 비판되고 억제되었던 農民들의 個人 副業과 自由市場을 許容하고, 개별 농가에게 일정한 생산량에 대한 책임만을 부과하는 農業生產責任制를 실시함으로써, 1958년의 大躍進運動이후 중국의 농촌사회를 지배하던 人民公司制度를 사실상 와해시키는 혁명적인 정책전환을 실시하였다.²⁹⁾

29) 徐鎮英, “四大現代化와 中共의 農村經濟政策”, 『中共問題』 제2집 (1983), pp. 73-77.

이와 동시에 개혁파들은 문화혁명으로 폐지되었던 당과 국가기구를 재정비하고, 좌파적 성향을 지닌 지도자들과 黨 간부들에 대한 정리, 정돈에 착수하였다. 이를테면, 문화혁명과정에서 폐지되었던 中央書記處를 부활하고 總書記에 개혁파의 胡耀邦을 내세우는가 하면, 역시 문화혁명 당시 좌파에 의하여 박해를 받았던 陳雲을 중심으로 中央紀律檢查委員會를 개편, 강화하여 黨風刷新을 시도하고, 과거 문화혁명 4인방이 조장한 ‘黨內的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와같이 중국사회는 1978년 11기 3중전회이후, 모택동시대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개혁파 지도자들이 의도한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思想解放을 표방하고 지식인들에게 어느정도 비판의 자유를 허용하자, 그동안 억제되었던 지식인들의 反體制的 주장들이 일시에 폭발하여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개혁파 지도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1979년과 1980년에 ‘北京의 봄’이라고 알려진 민주화운동에서 표출된 것처럼, 일부 급진적인 지식인들은 社會主義를 부정하고,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와 自由經濟體制的 導入을 主張하기까지 하였다.

물론 이같은 극단적인 민주화 요구는 中國社會의 광범위한 계층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화혁명을 경험한 중국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사회주의에 대한 冷笑主義와 無關心이 팽배하였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대중들의 生活改善에 실패한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보수적인 지도자들은 급진적인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에 대한 信心의 危機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11기 3중전회의 政策路線을 실천함에 있어서 일정한 原則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보수파의 입장은 덩소평의 “四項 基本原則을 堅持하자”는 연설에 반영되었다. 덩소평은 1979년 3월에 개최된 黨의 理論事業 原則研究會에서 ‘四個 現代化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첫째, 반드시 社會主義의 길을 堅持해야 한다. 둘째, 반드시 無產階級 獨裁를 堅持해야 한다. 셋째, 반드시 共產黨의 領導를 堅持해야 한다. 넷째,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思想을 堅持해야 한다.”는, 이른바 4개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개혁정치가 사회주의의 拋棄이거나, 또는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修正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사상해방과 체제개혁, 그리고 문호개방으로 상징되었던 11기 3중전회의 결의와, 덩소평이 1979년에 제시한 4개 기본원칙이 “中國的 社會主義”의 성격과 限界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정책노선, 즉, 3中全會에서 결정된 개혁, 개방노선과 1979년의 4개 기본원칙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3中全會의 정신이 自由化, 開放化, 多元化에 있었다면, 4개 基本原則은 기존의 사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란 점에서 상호 갈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정치는 3中全會의 精神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대담한 개혁을 요구하는 급진파의 논리와,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의 틀을 보존하려는 보수적인 개혁파의 논리를 동시에 표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相互 矛盾되는 듯한 논리를 동시에 강조하게 된 것은 중국의 改革政治를 추진하는 정치세력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反左派 聯合勢力이란 現實的 條件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덩소평의 개혁정치를 支持하는 정치세력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지닌 여러 세력들의 연합체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들이 지닌 共通點은 문화혁명에 의하여 모두가 迫害를 받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모택동시대의 중국과는 다른 방향에서 중국적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중국의 개혁과 개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改革의 範圍와 速度 등에 대하여는 정치적 이해관계 및 이데올로기상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急進的 改革派는 기존의 사회주의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심각한 問題提起로부터 출발하여, 훨씬 광범위하고도 深大한 變革을 추구하고 있는데 비하여, 保守的 改革派는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통하여 좌경적 오류를 시정하고 정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原則을 強化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중국의 개혁정치는 처음부터 개혁의 범위와 속도에 대한 개혁추진세력 내부의 異見을 노출하였고, 이같은 정책정향의 차이로 말미암아 지난 10여년동안 개혁정치과정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改革의 擴大와 改革의 縮小와 調整이 반복되었다.

이와같이 중국의 개혁정치는 개혁을 주도하는 指導層 內部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差異로 말미암아 3중전회의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妥協的이고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이데올로기와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그리고 毛澤東思想이 여전히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강조되었고, 당국가제도의 기본틀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組織의 合理化, 制度化 次元에서만 정치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82년 12차 全黨大會이후 당과 국가의 영도간부에 대한 世代交替作業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 간부의 老化現狀을 극복하고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젊고, 고등교육을 받은 新進幹部의 등장이 요구된다는 명분에서 당과 국가의 각급 수준에서 세대교차가 단행됨으로써, 新進 技術官僚들이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특히 1985년 임시당대회에서는 이같은 세대교체작업이 당과 국가의 고위급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섭검영을 비롯한 많은 老幹部들이 제 2선으로 물러나고 胡耀邦, 趙紫陽, 李鵬과 같은 이른바 第2梯隊의 인물과, 40.50대의 第3梯隊에 속하는 신진세대들이 당과 국가의 영도적인 지위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³⁰⁾

이렇게 일견 개혁파들의 정치적 立地가 強化된 가운데, 개혁파들은 경제 개혁을 더욱 확대, 심화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중국의 지도층은 예민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지만,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보수적인 지도층까지도 생산력의 발전을 중국이 당면한 최고, 최대의 과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력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資本主義的인 要素’까지 어느 정도 용인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農業生產責任制를 실시하고, 人民公司制度를 해체하며, 농민들의 자본주의적 성향을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鄧小平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공공연히 “일부 지역, 일부 농민들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장려하였고, 농촌에서의 個體經濟의 발전을 오히려 지원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보수적인 지도자들과 지방간부들은 이같은 농촌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건국 이후 수십년동안 천신만고 끝에 건설한 사회주의가 하루아침에 崩壞하게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혁명적인 경제개혁에 대하여 일반 農民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과거 20여년동안 停滯되었던 중국의 農村社會가 활성화되고, 농촌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보수적인 지도자들도 개혁정책을 더 이상 반대할 名分을 찾을 수 없었다. 사실, 이같은 혁명적인 농촌경제정책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1979년부터 1984년 사

30) 서진영, “중국공산당의 조직과 구성변화 1921-1987”, 『亞細亞研究』 (제 80 호), pp.86-82.

이에 농촌소득은 2배로 증가했으며, 곡물생산도 연평균 4.9%의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농촌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듯 하였다.

이같은 농촌에서의 경제개혁 성공에 힘입어 개혁파들은 生産責任制를 도시부문의 국영기업에까지 적용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4년 10월에 중국공산당 제 12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는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決定”을 채택하고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서 개혁파들은 計劃的 商品經濟論을 제창하면서, 상품경제의 발전과, 시장과 계획의 결합을 통하여 중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영기업을 비롯한 도시부문의 경제관리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는 야심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³¹⁾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決定”에 의하면, 그동안 중국에서 사회적 생산력의 증가속도가 늦고, 고도의 노동생산성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당과 행정기구가 지나치게 기업활동을 統制했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경제의 역할, 가치법칙과 시장의 기능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黨과 企業의 分離와 기업의 自律權 擴大를 강조하였고, 획일적인 계획을 지양하고 시장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상품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은 “決定”에 따라, 중국의 개혁파들은 1984년 이후 경제계획, 경제관리, 가격 및 임금구조의 개편에 착수하였다. 즉, 計劃經濟의 영역을 대폭 縮小 조정하고, 市場經濟의 영역을 점차로 擴大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의 가격정책에 묶여있던 상품을 대폭적으로 감축하였고, 民間企業部門을 活性化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는가 하면, 국영기업에서도 ‘契約責任制’ 등을 실시하여 所有와 經營을 分離함으로써 경

31) “中共中央 關於經濟體制改革的 決定”, 『紅旗』 제 20기 (1984), pp. 2-13.

영의 합리화와 자율화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같은 경제개혁으로 말미암아 중국경제와 중국사회는 엄청나게 변화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1987년 여름의 통계에 의하면 12,398개의 대형 국영기업중에서 약 75%가 請約責任制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들 기업들은 국가에 의하여 할당된 책임생산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私企業의 비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78년 당시 사기업은 모두 30만개 정도이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력도 약 33만명에 불과하였는데, 1988년에는 사기업의 수가 1,413만개로 증가하였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력도 2,624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같이 대담한 경제체제의 개혁안에 반영된 개혁정신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변혁을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자본주의적인 요소'라고 비판을 받았던 商品經濟와 市場經濟的 要素를 전국적으로 導入, 실시하려는 개혁파의 이같은 시도는 당연히 중국의 지도층 내부에서, 그리고 중국사회의 각 분야에서 심각한 갈등과 논쟁을 촉발하였다. 農村經濟改革과는 달리, 도시부문의 국영기업의 管理體制의 改革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반의 변혁을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같은 개혁은 중국사회의 모든 계층들의 직접적 이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불행히도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개혁정치의 성과로 나타났던 농업경제의 成長率이 1985년을 계기로 鈍化되기 시작하고, 중국경제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결합과정에서 과도기적인 혼란을 산출하면서, 그 동안 개혁의 성과에 가려져 있던 경제개혁의 副作用이 한꺼번에 표출되기 시작함으로써, 개혁정치에 대한 路線鬭爭은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경제는 앞에서 말한 도시부문의 경제체

제개혁이 확대, 심화되면서, 경기과열과 통화팽창,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經濟的 不平等이 확산되면서 지역적, 계층적 분화와 갈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하였으며, 官僚의 부정과 腐敗, 그리고 황금만능의 사조가 팽배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信心의 危機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經濟改革의 速度와 範圍를 縮小하고 ‘資產階級 自由化思潮’에 대한 강력한 思想教育運動을 전개해야 한다는 보수파의 공세가 강화되었다.³²⁾

이같은 상황에서 청년학생과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民主化運動이 發生하자 보수파는 이를 이용하여 개혁파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하였다. 1986년 12월 合肥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학생들의 민주화시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개혁파를 대변하던 당시 당 총서기 胡耀邦을 퇴진 시켰고, 1989년 6월 4일 天安門事態를 계기로 역시 개혁주의자였던 趙紫陽을 비롯하여 많은 개혁파 지식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중국의 개혁정치는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³³⁾

특히 1989년의 東歐事態는 중국의 지도자들을 더욱 경직화하게 하였다. 따라서 개혁의 확대보다는 안정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중국은 天安門事態이후 안정과 단결이 모든것에 우선한다고 강조하면서 개혁의 속도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중국이 모택동시대로 回歸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보수적인 지도자들도 과거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에서 ‘安定속의 發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서진영, “중국 사회주의 : 그 승리와 좌절의 역사”, 『계간 사상』
1989 가을호, pp. 164-165.

33) 서진영, 앞의 글, p.168.

나.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1985년 고령의 체르넨코가 사망하자 불과 4시간만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고르바초프가 蘇聯政治의 새로운 時代를 개막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같이 고르바초프가 黨內의 일치된 支持를 받으면서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소련지도부내의 共同認識이 있기 때문이었다.

첫째, 좀처럼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장기적인 經濟 沈滯가 계속되는 한편 사회적 기강과 도덕이 이완되면서, 전반적인 상황이 점차로 ‘참을 수 없는 상태’로 까지 惡化되고 있는 데에 대한 危機感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1982년 브레즈네프가 사망한 후 일반적인 관측과는 달리 당내에 세력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안드로포프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體制的 危機와 變化의 必要性에 대한 共同認識의 產物이었다.³⁴⁾

따라서 안드로포프가 집권하자마자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規律과 秩序를 다시 부과하고 체제의 效率性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정력적으로 추진한 것도 그와같은 소련 지도부의 공동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안드로포프가 그의 개혁정치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사망하고, 다시 구체제의 인물인 체르넨코에 의하여 개혁이 지체됨으로써, 체제적 위기감과 변화의 절박성이 더욱 深化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와같은 蘇聯社會의 전반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과 함께, 지도부의 世代交替에 대한 요구도 절박하게 제기되었다. 브레즈네프의 長期執權과 그의 “幹部의 安定化” 정책으로 말미암아 소련정치는 오랫동안

34) Myron Rush, "Succeeding Brezhnev", Problems of Communism, 32:1 (Jan.-Feb. 1983), p. 7.

안 활력소를 잃고 現狀維持에만 급급함으로써 소련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련의 변화를 방해함으로써 소련이 당면한 체제적 위기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브레즈네프시대의 幹部政策과 保守性에 대하여 비알러 (S. Bialer)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브레즈네프 하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도부와 엘리트 수준에서의 인물 교체는 소련 역사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적었다. 그것은 스탈린의 犯罪들로부터 수혜를 받았던 세대, 즉 그가 창조해 낸 체제 속에서 길러지고 교육받고 정치적으로 社會化된 세대, 그리고 아마도 스탈린의 가장 효과적인 遺産이며 소련체제에 대한 그의 가장 커다란 影響力으로 간주되는 세대가 소련의 리더쉽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 대결하려고 했던 후루시초프의 잠정적인 시도를 挫折시켰던 것도 이 세대의 聯合戰線이었고, 지난 15년 동안 소련 歷史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대해서 찬양이나 침묵 이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하기를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이 世代였다.”³⁵⁾

이와같이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세대의 퇴진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1980년대에 들어와 브레즈네프 세대의 核心構成員들이 속속 死亡하거나 隱退함으로써 가시화되기 시작함으로써, 정권적인 차원에서도 젊고 精力的인 새로운 지도자를 옹립함으로써 지도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련이 당면한 위기적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같은 배경에서 이미 안드로포프에 의하여 後繼者로 지목되었던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서기장 취임은 단순한 소련의 지도부 교체라는 의미를 넘어서 소련정치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35) S. Bialer, Stalin's Successors, p. 61.

그것은 한편으로는 소련체제에서 스탈린시대에 培養된 舊世代가 물러가고 新世代가 등장했다는 세대교체로서 성격지워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改革運動이 이같은 새로운 지도부에 의하여 더욱 과감하고 혁명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었다.

사실, 고르바초프는 1970년대이후 黨內外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개혁주의자들과 연계되어 있었다고 한다. 소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고르바초프는 黨中央委員會 農業擔當書記를 맡고 있던 시절부터 이미 일군의 改革派 학자들과 접촉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학계의 전문가들과 때로는 중앙위 사무실에서, 또 때로는 모스크바 교외의 별장에서 일련의 세미나들을 가졌는데, 그 모임들은 처음에는 農業問題에 관한 논의로 시작되었으나 곧 소련 경제 일반에 관하여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그 모임의 참석자들 중에는 60년대 중반 이래로 脫集中化와 市場要素의 導入 擴大를 주장해 온 경제학자 아간베기안과, 역시 개혁주의적 성향을 지닌 탁월한 사회학자 자슬라프스카야도 있었다고 한다.³⁶⁾

이와 같은 모임의 존재는 소련의 지도적 엘리트층 내부에서 개혁의 이념과 방법을 둘러싸고 일종의 ‘意見集團’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의견집단은 스킨링의 개념대로 指導者集團과 官僚的 集團, 그리고 知識人集團 모두에 존재하는 개혁분파들이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더불어 일종의 聯合的 改革勢力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³⁷⁾

36) G. J. Church, "The Education of M.S. Gorbachev", Time, January 4, 1988. p.13.

37) 스킨링의 집단 논의에 대해서는 H.G. Skilling, "Group Conflict and Political Change", Change in Communist Systems, C. Johnson (ed.) (Stanford Univ., 1970), pp. 215-217.

그렇다면 고르바초프의 리더십이 전적으로 이같은 개혁주의적 분파의 지지에만 기초한 것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 고르바초프의 권력기반은 비록 로마노프가 서기장 선출과정에서 그리신을 지지하면서 이탈하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안드로포프 支持聯合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 연합세력의 성격은 코헨(S. F. Cohen)이 60년대의 당 인텔리겐차들에게서 그 전형을 구하였던 온건개혁파와 온건보수파의 同盟이라고 볼 수 있다.³⁸⁾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초기단계에는 이같은 온건개혁파와 온건보수파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즉, 안드로포프식의 개혁을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고르바초프가 당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물론 經濟回復이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경제개혁의 새로운 靑寫眞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서기장 취임연설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새로운 계획보다는 既存戰略의 加速化를 강조하였다. 경제개혁을 향한 그간의 경험과 지혜의 총결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 27차 黨大會 綱領의 ‘經濟戰略’ 부분은 이 시기의 기본노선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말해준다.³⁹⁾

그 전략이란 첫째, 생산효율의 증대를 위한 科學技術진보의 강화와 勞動生産性의 급격한 향상, 둘째, 集約的(=내포적) 發展을 위한 생산구조의 변화, 셋째,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행정체계, 경제운영방식의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戰略路線은 이미 안드로포프에 의하여 제시되었던 것이었다. 이처럼 경제개혁정책에서는 기존의 개혁노선을 지속하고 있었지만, 고르바초프는 以前의 지도자들과 비교해 그의 리더십을 가장 뚜렷이 특징지우는 開放(글라스노스트)政策을 채택, 실시하였다. 이 개방정책은 이미 서기장 취임연설에서부터 강력하게 시사되고 있었다.

38) Cohen, 앞의 논문, p.26.

39) “소련 공산당 제 27차 당대회 신강령”, 『중소연구』, 10권 1호 (1986 봄), pp. 312-318.

“우리는 黨, 國家, 政府, 社會 등 제반조직들의 활동을 더욱 더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대중의 깨달음’을 통해 국가는 강력해진다고 레닌은 말 했다… 사람들은 情報를 더 잘 얻을수록 더욱 知的으로 행동하며 당과 黨의 계획 및 목표를 적극적으로 支持한다.”⁴⁰⁾

위의 인용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고르바초프는 위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소련의 문제가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自覺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왕의 위기적 경제침체가 ‘行政的 方式의 過剩’으로부터 연유한다고 믿고 있는 그가 인민대중을 자발적으로 생산활동과 정치적 활동에 참여시키는 일을 구상하였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과거의 統制와 動員 一邊倒의 사고방식에 젖은 保守派들로서는 이러한 인민의 정치적 활성화가 앞으로 빚어낼 예측불가능한 사태는 마땅히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감안한 타협의 결과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漸進的 實行이었다.

따라서 초기단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上記한 기본 전략대로 경제관리체제와 생산구조의 合理化라는 수준에 한정되어 추진되었다. 또한 개방정책은 초기에는 官僚主義와 腐敗의 문제, 경제관리상의 誤謬와 浪費의 문제등을 폭로하는 데 국한되었다. 그러나 글라스노스트는 점차 스탈린시대를 포함한 過去를 비판, 재평가하는 작업에까지 조심스럽게 확대되었다. 이와같이 초기단계에 개혁과 개방이 신중하게 추진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내에 보수적 개혁파들의 牽制때문이었다. 소련의 체제위기가 이념과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인민의 意識狀態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아울러 科學技術의 現代化와, 規律의 強化를 통해 사회의 道德的 再生을 이룩함으로써 당

40) “고르바초프 서기장 취임 연설문”, 『중소연구』, 9권 2호(1985 여름), p.218.

만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리가초프, 체브리코프 등의 보수파⁴¹⁾들의 반발이 고르바초프로 하여금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 개혁파가 주장하는 안드로프식의 개혁정책으로 소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식의 경제개혁도 궁극적으로 官僚的 統制의 타성과 또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회전체의 多眠狀態를 깨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자명해져 갔다. 최초로 1년이 지난 후 고르바초프는 제 27 차 당대회 석상에서 過去의 개혁시도들에 대한 評價를 통해 얻은 教訓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서 향후 개혁작업의 指針으로 삼을 것을 보다 강력한 어조로 제시하였다.

“첫번째 교훈은 眞理의 교훈이다. 과거에 대한 냉철한 분석은 미래를 밝혀 줄 것이며, 진실을 숨기고 피하는 태도는 현실적인 정책을 강구하는 데 지장을 주고 우리의 전진을 방해할 것이다. … 두번째 교훈은 실천적 행동에서의 目的指向性과 決斷性에 관한 것이다. … 개혁을 시작한 이상 제한적이며 엉거주춤한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가장 대담한 조치들을 통해 끊임없이 철저하게 정력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또 하나의 교훈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떠한 일이든지 그 성과가 모든 大衆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사업에 參與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⁴²⁾

한편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은 잠재되어 있던 급진적 반대파의 목소리, 즉 보다 全面的이고 보다 전격적인 改革을 요구하는 세력을 분출시켰다. 흔히 급진개혁파로 일컬어지는 이 세력은 소련공산당 内外에서 그 존재를

41) Ben Eklof, Soviet Briefing : Gorbachev and Reform Period (Westview Press, 1989), p.24.

42) “고르바초프 정치보고 : 제 27 차 당대회에 제출한 중앙위의 보고”, 『중소연구』, 10권 3호 (1986 가을), pp. 237-238.

드러내면서 보수적 개혁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르바초프에 대해서도 정치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향후 개혁정치的主要變數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점차 확대하면서 보수파의 이데올로기적 해계모니를 붕괴시키고 가일층의 개혁을 향한 理想的, 政治的 지지기반을 黨 内外에서 확보해 나갔다. 특히, 고르바초프는 세대교체를 강조하면서 급진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함으로써 그의 개혁정치에 대한 지지기반을 강화하였다.

고르바초프가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 시절 이미 黨의 실질적인 2人者로서의 위치를 굳혔음은 앞서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그는 1983년에 黨의 組織, 人事까지 책임을 맡게 되면서 안드로포프의 부패추방운동에 따라 지방당 간부들의 숙정작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서기장 취임 이후에는 이를 중앙의 고위지도층으로까지 확산시켰다. 이같은 黨幹部들의 再編작업은 일련의 세대교체 작업과 병행되어 대규모적인 간부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⁴³⁾ 따라서 1987년에는 政治局과 書記局의 거의 대다수가 1919년 이후의 세대로 채워졌으며, 1926년 이후의 세대도 절반 가량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세대교체와 지도부의 재편은 단순히 지도부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新陳代謝와 고르바초프 개인의 權力強化라는 협소한 의미보다는 스탈린주의적 체제로부터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이같은 간부의 교체로 정치적으로 立地가 강화된 고르바초프는 소련공산당 1월총회(1987)에서 그 이전보다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월 총회에서 고르바초프는 우선 理論의 硬直性和 教條主義로

43) 문수언, “고르바초프 세대의 등장 : 소련지도자들의 배경분석”, 『중소연구』 10권 2호(1986 여름), 안병만, “고르바초프체제와 권력엘리트”, 『슬라브연구』 제4권(1988) 등을 볼 것.

부터 탈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共産主義에 대한 피상적 觀念, 여러 종류의 예언, 抽象的 見解가 분명히 통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의 역사적 중요성을 경감시키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오히려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認識의 轉換과, ‘새로운 思考’를 강조하였다. 고르바초프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재편의 目的은 “국가상황을 전면적으로 현저하게 刷新하고 사회주의 내에 가장 현대적인 형태의 사회조직을 공급하며… 우리 체제의 人本主義的 特性을 완전히 발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주의적 모델에 대한 심각한 修正을 제창했다는 것이다.⁴⁴⁾

이제 고르바초프는 급진적 개혁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소련의 개혁이 추구하는 것은 기존 사회주의의 보완, 강화가 아니라, 새로운 社會主義의 建設이란 점을 명백히 하였다. 한 개혁파 理論家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소련에서 개혁정치는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解釋으로부터 시작되는 그야말로 革命的인 性格을 띠게 되었다.

“추상적 추론에 입각한 사회주의의 人爲的 모델은 이제 사회적 實踐에 의거한 견해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현실의 경제적·사회적 진보의 기준이 되는 것은 擄取와 政治的 抑壓으로부터 인간의 解放에 성공했는가, 인간 福祉의 부단한 성장과 모든 사람의 自由로운 發展을 위해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보장되고 있는가, 경제·과학기술·문화의 번영으로 나아가는 데 성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방향으로의 운동이 ‘社會主義性’의 基準을 가장 충족시키는 것이고, 사회주의의 새로운 비전에 답하는 것이다.”⁴⁵⁾

44) 고르바초프, “재편과 당간부정책에 대하여”, 『중소연구』, 11권 2호 (1987 여름), pp. 268-273.

45) 올레그 보고몰로프, “변화하는 사회주의의 실상”,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폴빛, 1990), p. 11.

이와같은 ‘새로운 思考’에서 출발한 소련의 개혁정치는 1987년 이후, 특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놀랄만큼 급진적인 變革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고르바초프와 급진적 개혁파들은 현재 소련이 안고 있는 經濟危機의 근저에 계획부문의 모순과 사회주의적 소유의 왜곡이 자리잡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진정한 民主主義를 통해 인민의 참여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과거 소련에서 시도되었던 일련의 개혁이 곧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官僚階級들의 방해와 抵抗, 그리고 인민대중의 無關心 때문이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개혁파들은 보수적인 관료들을 견제하고 대중을 자각시키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파들은 “생산, 과학과 기술,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進歩는 사회주의에 내재하는 民主的 形態의 부단한 발전과 自治權의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한 방법만이 自覺的인 規律을 보장해 준다. 재편 그 자체도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그리고 민주주의에 의해서만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혁명적인 政治改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고르바초프와 그의 支持者들은 지금까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통적 사고, 즉 土臺의 變革이 上部構造를 그에 상응하도록 변화시킨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정치개혁을 통한 민주화가 경제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조건이 될 것이라는 戰略的 判斷에 도달했던 것으로 간주된다.⁴⁷⁾ 이 같은 전략적 구상은 상당기간의 준비끝에 1988년 6월에 개최된 제 19차 特別 黨代表者協議會에서 소비에트제도의 개편과 補數候補를 인

46) 고르바초프, “재편과……”, p. 279.

47) 보고몰로프, 위의 논문, p. 17.

정하는 선거제도의 개선, 명실상부한 議會 기능을 하는 最高소비에트의 구성, 1990년 3월에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는 대통령제 신설, 그리고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헌법 규정 수정과 복수정당제의 도입과 같은 정치개혁으로 구체화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르바초프는 정치개혁을 통한 民主化의 進展과 글라스노스트의 확대를 추진하여 소련의 政治過程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데 성공하였다. 그렇다고해서 소련의 개혁정치가 成功했다는 것은 아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치는 소련이 당면한 가장 절박한 經濟問題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그리고 개혁정치의 부산물로 폭발한 民族問題로 말미암아 언제 좌초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政治的 運命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소련이 다시 舊體制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 東歐의 大變革과 社會主義의 沒落

지난 1989년 알바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밑으로부터 분출된 변혁운동으로 말미암아 차례차례 沒落함으로써 세계를 경악케 했던 東歐革命이 발생했던 배경에는 최소한 두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要因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이미 앞서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東歐社會主義體制와 東歐의 市民社會的 傳統사이의 뿌리깊은 갈등으로 인하여 동구사회에서 사회주의체제는 강제와 소련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존립할 수 있었던 체제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蘇聯의 對東歐政策이 변화하자, 이같은 동구 사회체제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게 됨으로써, 하루아침에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동구의 대변혁의 배경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동구 市民社會의 抵抗과 蘇聯의 政策變化라는 두 가지 공통적인 觸發要因을 찾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라마다 역사적, 사회문화적 傳統이 다르고, 경제발전정도가 다르며, 기존의 共產黨에 대한 국민적 支持도와 개혁주의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동구에서 사회주의체제의 변혁과정과 변혁유형을 선불리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 헝가리 : 동구권 국가들중에서 비교적 일찍 변혁과정에 돌입한 헝가리, 폴란드는 모두 동구변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공산당 내부에서 개혁에 대한 論爭이 可視化되었고,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하였다. 헝가리는 1956년이래 계속 집권하고 있던 카다르가 당내 개혁파 연합세력의 압력으로 1988년에 물러가게 되고, 그로스 (K. Gross) 書記長이 취임하면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⁴⁸⁾

1956년 혁명이 蘇聯軍의 무력개입으로 좌절되면서 임레 나지政權이 붕괴된 이후 등장한 카다르 정권은 1960년대까지 비교적 온건한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사회 내 각세력에 대해서도 제한적이거나 다른 사회주의국가들보다는 寬容性을 보여주는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어느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소련의 壓力으로 제한적인 개혁이 중단되고 헝가리 경제가 계속 惡化되자 카다르정권에 대한 黨 內外에서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 헝가리는 동구 국가들중에서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과 1인당 외채가 가장 많은 나라로 기록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악

48) Georges Schofflin, Rudolf Tokes and Ivan Volgyes, "Leadership Change and Crisis in Hungary", Problems of Communism (Sep.-1988), pp. 27-39.

화되면서 개혁에 대한 要求는 사회 각 부문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었다.⁴⁹⁾ 특히 批判的 知識人들은 공개적으로 혁신적인 경제개혁과 더불어 정치개혁을 주장하였다. 아직 헝가리에는 폴란드처럼 합법적이고 조직적인 反體制運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으나, 비판적인 지식인 집단들을 중심으로 多黨制를 포함한 혁명적인 정치개혁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카다르가 퇴진하고 그로스가 등장하여 고르바초프의 묵시적인 同意를 얻어 包括的인 改革을 斷行하면서 헝가리의 변혁운동은 가속화되었다.

1989 년초에는 “集會, 結社에 관한 法案”이 國民議會에서 통과됨으로써 복수정당제의 길이 열렸으며, 이에 따라 헝가리 민주포럼등 9개의 주요 정당, 정치단체들이 조직되었다.⁵⁰⁾ 이와같이 헝가리의 민주화가 가열되면서 공산당 내부에서도 改革의 速度와 範圍에 대해 치열한 論爭이 전개되었다. 이같은 당내 논쟁의 결과, 급진개혁파가 승리하여 1989년 9월에는 마침내 在野勢力과 협상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포기, 의회민주주의 실현, 시장경제원리의 전면 수용, 완전한 자유선거를 약속하고, 10월에는 黨名을 社會黨으로 개칭하였으며, 憲法에서 共產黨의 指導權을 규정했던 부분을 삭제했고, 國名에서 “人民”이란 표현도 삭제하였다. 그러나 1990년 5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헝가리 社會黨(舊 共產黨)은 中道右派勢力을 대변하는 민주포럼에 패배함으로써 헝가리에서 사회주의체제는 몰락하게 되었다.

(나) 폴란드 : 이미 잘 알려진 바와같이 폴란드의 개혁운동은 連帶勞組運動 (Solidarity) 의 등장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에 당시 폴란드의 노동조합원 1,300 만중 약 1,000 만명이 가입하여 일시에 舊勞組

49) Bennett Kovrig, "Hungarian Socialism: The Deceptive Hybrid", EEPS (winter, 1987), pp. 122-123.

50) Laszlo Urban, "Hungary in Transition: The Emergence of Opposition Parties", Telos (Spring 1989), p. 118.

를 무력화시키고 강력한 압력단체로 등장한 연대노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 最初의 勞組가 되었다.⁵¹⁾ 이같은 연대노조운동의 확산은 폴란드 統一勞動黨(共產黨)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당시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소련의 후원을 받아 戒嚴令을 선포하고 연대노조운동을 탄압하였다.

하지만 폴란드 공산당정권은 연대노조에 대한 무력탄압으로 대중적 지지가 더 하락하자 政權의 正統性 缺如를 만회하고자, 1980년대에 들어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폴란드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部分的인 經濟改革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에 회복 기미를 보이던 폴란드 경제가 1980년대 중반이후 다시 악화되자 야루젤스키정권은 1986년에 정치범의 석방, 폴란드 교회세력 및 일부 연대노조세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정부고문위원회 설치등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共產黨이 主導하는 정치,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 이같은 야루젤스키의 개혁노선은 고르바초프의 지지를 받았지만, 폴란드내에서는 오히려 더 큰 정부의 양보를 요구하는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1981년이후 불법화된 연대노조는 공개적으로 이같은 제한적인 경제개혁에 반대하였고, 연대노조의 合法化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야루젤스키정권은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으나 폴란드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대중적 불만이 심각한 정도로 표출함에 따라 急進的인 改革을 摸索하게 되었다.

1988년 5월에 임금문제를 둘러싸고 勞動者들의 罷業이 再發함으로써 폴란드의 정치적 정치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특히, 1988년 8월에 다시 대규모의 노동자파업사태에 직면한 야루젤스키는 당내의 보수파를 억누르고 연대노조를 비롯한 재야세력과의 妥協的 解決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51) R. Laba, "Worker Roots of Solidarity", Problems of Communism (Jul.-Aug. 1986), p.86.

1989년 1월에 연대노조가 合法化되고 6월에는 상원과 하원에 대한 妥協的인 自由選舉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결과 연대노조가 압승함에 따라 폴란드는 공산당의 기존권력을 어느정도 인정한 범위에서 연대노조를 중심으로 한 非共產黨세력이 執權을 하는 과정을 밟는 脫社會主義의 길을 보여 주었다.

(다) 東獨 : 이와같이 헝가리,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혁운동에 자극을 받아 다른 동구사회주의국가들에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표면화 되었다. 그러나 동독, 체코, 루마니아 등의 공산당정권은 개혁운동에 대하여 強硬한 立場을 固守하였다. 특히 동독의 호네커정권은 東獨의 特殊性을 내세우면서 동독에서의 변화의 필요성을 拒否하였다. 즉, 동독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西獨과의 대립下에 유럽에서의 전초진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소련식 개혁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소련도 이를 묵인하는 입장이었다.⁵²⁾

따라서 동독은 헝가리,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혁운동에 대하여도 냉담한 태도를 堅持하였다. 그렇다고해서 동독이 전혀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이거나 경제체제의 脫集中化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서독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공존의 범위내에서 인적, 물적 교류를 제도화하였으며, 공산당에 의하여 용인되고 있었던 유일한 비공산당조직인 教會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비판적 知識人運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타협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⁵³⁾

52) Renée de Nevers,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 The End of an Era, Adelphi Papers, no. 249 (March 1990), pp. 14-22.

53) Vladimir Tismaneanu, "Nascent Civil Society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Problems of Communism, vol. 38, no. 2 (March-June, 1989), pp. 90-111.

그러나 동독공산당은 이같은 제한되고 통제된 개혁을 벗어난 급진적인 개혁 운동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堅持하여 1989년까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安定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強硬保守적인 호네커정권에 대하여 동독국민들의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다. 특히, 서독과의 교류를 통하여 동독과 서독과의 현격한 경제적 격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동독국민들은 비록 사회주의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방과 비교하여 相對的인 剝奪感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같은 여건에서 동독에서도 비판적인 지식인운동이 1980년대 중반부터 발생,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東獨教會를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平和運動은 점차로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政策批判으로 확대되면서 동독의 완고한 공산당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심화되어 1989년에 서방세계로의 大脫出이란 前代未聞의 사건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이 확산되면서 호네커정권이 崩壞됨으로써 마침내 西獨에로의 吸收統合이란 사회주의체제의 역사적 解體過程이 시작되었다.

(라) 체코슬로바키아 : 체코슬로바키아는 1968년 두브체크정권하에서 獨自路線을 선언하고 대폭적인 민주화개혁을 시도하여 이른바 “프라하의 봄”을 실현했으나, 바르샤바조약 5개국의 개입으로 좌절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후 체코 공산당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요구에 강경한 입장을 堅持하였고, 심지어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에 대해서도 당시 동독의 호네커정권과 마찬가지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987년에 체코를 방문한 고르바초프가 조심스럽게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지만 체코 공산당은 여전히 保守強硬派들이 主導하면서 개혁에 반대하였다.⁵⁴⁾

54) Renée De Nevers, Ibid., p.45.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성장한 改革勢力은 소련과 여타 동구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변혁운동에 자극을 받아 공산당정권을 압박하였다.⁵⁵⁾ 특히 소련마저 1968년 두브체크가 제시했던 ‘인간의 얼굴을 한 社會主義’를 강조하게 되자 在野團體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혁명적인 민주화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9년 10월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群衆集會가 폭발하고 시민포럼이 결성되어 全國的인 抗議와 蜂起를 주도하게 되자, 체코공산당은 이같은 밑으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하여 새로운 聯邦議會 選舉에 동의하게 됨으로써 공산당정권의 平和的인 退陳이 실현되었다.

(마) 불가리아 : 불가리아 공산당은 2차대전당시에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抵抗運動을 지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에 비하여 경제상황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당 지배에 대한 저항과 거부감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불가리아 공산당 지도자인 지브코프는 표면적으로 소련의 개혁노선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개혁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1989년 4월에 불가리아정부의 터어키민족에 대한 정책에 불만을 가져 터어키계 주민들의 시위가 발생하고 약 30만명이 터어키로 탈출하는 사태로 정치적 긴장이 야기된 가운데 보수파인 지브코프가 퇴진하고 소련 개혁파의 지지를 받는 물라데노프가 권력을 승계하면서 黨-政分離, 表現의 自由擴大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을 약속하고⁵⁶⁾ 1990년 6월에 총선을 실시한다. 불가리아의 경우, 다른 동구국가와는 달리, 지난 1990년 5월 총선에서 불가리아 社會黨(舊共產黨系列)이 47.6%의 지지를 획득, 재집권

55) H. Gordon Skilling, "Independent Currents in Czechoslovakia", Problems of Communism (Jan.-Feb. 1985), pp. 34-49.

56) René De Nevers, Ibid., p.51.

하는 데 일단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난 8월에 議會間選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野黨聯合勢力인 自由民主同盟에 패배함으로써 역시 동구의 다른 나라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 루마니아 : 루마니아의 경우는 물론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개혁의 주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원인은 차우세스쿠의 族閥強壓統治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찾아져야 한다. 脫蘇독자노선을堅持하면서 몰락직전인 89년 11월 루마니아공산당 14차 당대회에서 개혁을 거부하고 기존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해, 바르샤바조약기구 가맹국중 유일하게 反개혁국가로 남아 있던 루마니아는 헝가리계 주민들의 티미시와라 시위를 시발로 일주일만에 붕괴되어 버린다.

차우세스쿠를 정점으로 가장 강력한 지도권을 형성한듯 보이던 루마니아에서 개혁운동이 가장 늦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진행된 이유는 루마니아 政治體制의 特殊한 性格과 構造로부터 찾아져야 한다. 1965년 게오르규 데지의 지도권을 이어받은 차우세스쿠는 70년대이후 자신에게 모든 권한을 集中시키고 친인척들을 요직에 임명하는 한편, 초기 권력기반이던 공산당을 권력의 주변적 위치로 내몰고 자신의 확고한 권력기반으로서 保安軍을 창설하여 正規軍과 이중적인 형태로 존속시켰다.⁵⁷⁾ 또한 그는 자신의 아들인 니쿠에게는 權力承繼를 시도하여 공산당내 엘리트들과 정규군의 내부반발이 잠재되어 왔다.⁵⁸⁾

결국 경제상황 악화와 헝가리계 주민에 대한 민족정책 등으로 인한 民衆蜂起가 발생하자 이러한 권력엘리트 내부의 잠재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57) William Crowther, " 'Ceasescuism' and Civil-Military Relations in Romania ", Armed Forces & Society (Winter 1989), pp. 217-219.

58) Vladimir Tismaneanu, " Personal Power and Political Crisis in Romania ", Government and Opposition (Spring 1989), pp. 192.

친소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救國戰線의 결성과 정규군의 동조로 차우세스쿠 정권이 급격히 몰락해 버린 것이다. 루마니아 개혁은 민중봉기에 의해 차우세스쿠가 타도된 점 이외에는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공산당이 해체되었지만 조직화된 공산당外 개혁세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기존의 당-국가 엘리트들이 구국전선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再執權에 성공하고 급진 개혁보다는 제한적인 개혁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 알바니아 : 알바니아의 경우는 동구국가들중 가장 열악한 경제상태에 있으나 지난 40년간의 스탈린주의적 統制와 孤立主義 政策으로 인해 현재까지 변혁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리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알바니아 역시 黨主導의 제한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개혁과 관련해 알바니아가 주목을 끄는 것은 최근보다는 40년동안 전권을 행사하던 호자(Enver Hoxha)의 후계자인 알리아(Alia)의 權力 承繼過程과 1985년 호자의 사망후 알리아의 제한적인 개혁노선이다. 80년대초까지 호자의 후계자로는 당내 제2인자이며 호자의 오랜 동료이기도 한 셰후(Mehmet Shehu)가 유력했으나 7차경제개발계획을 둘러싼 호자와의 대립으로 제거되고 알리아가 浮上한다.⁵⁹⁾ 그는 이미 82년부터 호자의 역할을 대행하기 시작했고 85년부터는 호자의 스탈린주의적 통치와 고립주의 외교노선을 일부 수정한 제한적인 개혁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알바니아 공산당은 자신에 도전할만한 사회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당내에서도 保守-改革의 路線樹立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의 낙후성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對外開放과 制限的인 民主化를 추구하고 있다.⁶⁰⁾

59) Elez Biberaj, "Albania after Hoxha : Dilemmas of Change", Problems of Communism (Nov.-Dec. 1985), pp. 34-37.

60) Arshi Pipa, "Glasnost in Albania?", Telos (Spring 1989), pp. 187-18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구국가들의 변혁과정은 나라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들 동구국가들이 모두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변혁과정도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구의 대변혁에서 특이한 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스탈린식 사회주의에 대한 東歐市民社會의 저항이 결국 동구국가들의 변혁을 招來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동구의 변혁에서 기본적으로 밑으로 부터의 변혁요구가 革命的 轉換點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과, 그리고 이같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대변한 비판적 재야세력들이 동구변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등에서 立證된다고 하겠다.

사실, 동구의 변혁과정에서 공산당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黨外의 비판적 知識人들이나 教會가 중심이 되어 형성된 在野勢力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이를테면, 헝가리의 人民主義 작가그룹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그룹들, 폴란드의 교회와 연대노조, 동독의 교회와 평화운동 세력, 체코 슬로바키아의 77憲章그룹들은 모두 1989년의 대변혁이 있기 전에 이미 동구 시민사회의 개혁운동에 뿌리를 두고 성장하였다. 따라서 이같은 시민사회의 전통과 비판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헝가리, 폴란드, 체코등이 동구의 변혁을 주도하였고, 이들 재야세력이 중심이 되어 비교적 기존 공산당과의 妥協과 協商을 통하여 체제변혁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 외부에 개혁세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한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에서는 개혁운동이 뒤늦게 발생하거나 폭력적인 민중봉기가 발발한 후에도 舊 공산당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制限的인 改革에 그치는 差異를 보인다.

이와같이 동구변혁의 중요한 變數가 동구의 市民社會의 成熟과 改革傳統인 것은 틀림없지만, 동구변혁의 가장 직접적인 촉발요인은 역시 蘇聯의 政策變化라고 하겠다. 과거에는 소련의 무력개입 가능성 때문에 항상 동구의 변혁운동은 制約을 받아왔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후 소련의 무력

개입 가능성이 없어지고 동구의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그 동안 억압되었던 反蘇的 感情과 改革要求가 上昇作用하여 폭발적인 변혁운동을 발생하게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처럼 소련의 동구에 대한 不干渉이 동구 변혁의 중요 변수이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의 개입이 개혁을 촉진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고르바초프는 1987년까지 소련 내부의 개혁문제와 자신의 權力立地 강화에 몰두하였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美國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집중하였다. 동구를 비롯한 사회주의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結束強化를 주장하면서도 기존의 政治優位의 관계보다는 經濟關係 強化를 주장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1987년을 경과하면서 고르바초프는 소련 내부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면서 국내적으로 급진적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면서, 동구국가들에 대해서도 개혁압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1987년 4월 체코슬로바키아 방문중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추진과 동구 정부의 ‘自國人民들에 대한 責任’을 강조하였고, 5월 루마니아 방문에서는 동구에서의 소련식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1989년 8월 연정수립을 둘러싸고 폴란드공산당과 연대노조의 논란이 계속되자, 이에 개입하여 공산당을 포함한 연대노조 주도의 연정을 수립하도록 작용하였고, 강경보수노선을 堅持하는 동독의 호네커에게 개혁 압력을 가하는 한편, 民衆蜂起를 탄압하기 위한 그의 소련군 동원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호네커로 하여금 퇴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1989년 11월의 체코, 불가리아 사태, 그리고 12월의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 몰락 과정에서도 소련이 적극 개입한 흔적이 보인다. 동구 국가들중 가장 소련노선에 충실하였던 불가리아의 경우에도, 1954년 이후로 장기집권중이던 지브코프가 퇴진하고 외무장관 블라데노프가 당지도권을 장악하는

과정은 소련의 개입에 의한 궁정 쿠데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루마니아에서도 차우세스쿠 逐出과정에서 등장하는 일리에스쿠 중심의 救國戰線이 親蘇勢力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소련의 개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社會主義社會의 變革類型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蘇聯, 中國, 東歐를 그 변혁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은 대단히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변혁에 작용하는 요인들은 이미 보았듯이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는 쉽게 단순화시킬 수 없는 독특한 사회적, 역사적 조건의 규정을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반적으로 관측될 수 있는 유형변수들을 중심으로 한 便宜的인 유형분류는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 유형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自生的인 革命運動의 經驗과 체제확립이후 변화에 적응하려는 體制改革 運動의 傳統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다. 자력혁명의 경험은 그 나라의 정치적 정통성과 대중적 지지의 기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고, 개혁운동의 전통은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충격을 체감시킴과 아울러 그 변화를 추진할 주체를 배양하는 累積的 土臺가 되었다.

둘째, 經濟發展의 水準과 經濟危機의 深刻度이다. 앞에서 일반적 위기요인을 분석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경제발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일수록 기존의 계획경제는 새로운 발전단계로의 비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인민대중들의 높아진 생활수준에 대한 욕구는 충족될 길이 없는 채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하게 된다. 반면 아직도 外延的 成長 段階에 있는 나라라면 動員體制를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발전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는 체제의 변혁

을 가져오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때 경제위기의 심각도는 체제의 경제적 복구능력에 대한 인민들의 평가에 의해 加減될 것이다.

세계, 國際的 開放程度와 社會的 多元化 程度이다. 사회다원화 경향은 경제발전의 수준과 비례해서 확대되면서 국가로부터의 획일적인 통제와 감시를 거부하고 보다 다원적이고 자율적인 정치·경제구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낳게된다. 그러나 국제적 개방정도는 반드시 경제수준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발전된 경제의 내재적 필요에 의해 대외경제개방 정책을 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반대로 외국으로부터의 원조와 협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한계점에서 門戶를 개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국제적 개방도 (西方世界와의 관계)가 높을수록 외부의 압력에 취

<표 6> 社會主義國家의 變革類型

유형변수 변혁유형		자생적 혁명전통		개혁전통		경제발전수준		경제위기심화정도		서방세계와의관계		사회적 다원화		비고
		유	무	유	무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저	
위로 부터 급진적 개혁	소련	*		*		*		*		*		*		
	헝가리	*		*		*		*		*		*		
위로 부터의 제한적 개혁	중국	*		*		*		*		*		*		
	불가리아	*		*	*	*		*		*		*		
	알바니아	*		*		*		*		*		*		
아래로 부터의 급진적 개혁	폴란드		*	*		*		*		*		*		
	동독		*	*		*		*		*		*		
	체코	*		*		*		*	*	*		*		
특수형	루마니아		*	*	*	*		*		*		*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노선을 추진하기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임.

약할 수 밖에 없으면, 情報 및 海外旅行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변화를 향한 國內外的 압력은 더욱 漸高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유형변수들을 중심으로 소련, 중국,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유형을 분류하면, 앞의 <표 6>에서와 같이, 위로부터의 急進的 改革, 위로부터의 制限的 改革, 아래로부터의 急進的 改革, 特殊型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앞의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같이 자생적 혁명전통과 개혁운동의 전통이 있으며, 비교적 산업화의 정도가 높고 사회적 다원화가 진행되었으며,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도가 높은데 비하여 장기적인 침체로 체제위기가 조성된 소련과 헝가리의 경우는 기존의 共產黨內部에서 急進的 改革派가 등장하여 사회주의체제의 질적 변화를 과감하게 추구하는 변혁운동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폴란드, 동독은 모두 그런데로 개혁의 전통도 있고, 산업화의 정도, 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측정한 국제적 개방도, 사회적 다원화가 높지만, 기본적으로 소련에 의하여 강제된 상황에서 정권이 수립되었고 政權의 正統性이 낮은데다가 1980년대에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밑으로부터의 변혁운동이 폭발하여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었다. 물론, 체코와 동독은 폴란드와는 달리 사회주의국가들 중에서는 양호한 경제상황이었지만, 동독은 서독과의 비교 下에서 相對的 剝奪感이 深化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체코의 경우는 헝가리와 폴란드변혁운동이 자극을 받아 폭발한 민중봉기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中國, 불가리아, 알바니아는 모두 자생적인 혁명전통이 있으며, 강력한 공산당의 지배가 지속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중국은 지도부내의 路線鬭爭의 傳統이 있는데 비하여 불가리아와 알바니아는 그와같은 개혁운동의 전통이 없다는 점, 그리고 불가리아는 경제발전의 정도가 높은데 비하여,

중국과 알바니아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서 差別性이 있으나, 이들 세 나라는 모두 사회적 다원화와 국제적 개방화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밑으로부터의 변혁압력에 저항하면서 共產黨이 主導하는 制限的인 改革,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民衆蜂起 및 기존의 당과 군부의 分裂이 결합되면서 폭력적인 변혁과정을 밟았다는 점에서 앞의 유형들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소련, 중국,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을 자생적 혁명전통, 개혁전통, 경제발전정도, 경제적 위기의 심각도, 서방과의 관계, 사회적 다원화의 정도 등에 따라 분류한 것은 이들 각 나라들의 政治的, 經濟的, 歷史的 傳統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였다. 특히,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참고자료>를 기초로 분류하였다.

< 변혁유형의 분류 참고자료 >

(1) 自生的 革命傳統

(가) 헝가리 :

1919 벨라 쿤 주도의 일시적인 政權樹立 경험.

1944. 12 소련군 진주와 함께 親蘇派 출신들이 임시정부 수립

1945년 이후의 선거에서 공산당이 잇따라 패배하였으나, ‘살라미 戰術’(점진적 흡수전략)에 의해 대중의 지지 획득

(나) 불가리아 :

1919 선거에서 의석의 1/3 차지

1931 ‘獨立勞動黨’ 명칭으로 274석중 31석 획득

2차대전중 祖國戰線 형성에 중요한 역할(1944년 당원 50만명)

1944. 9 소련군 진주와 함께 祖國戰線 주도로 연립정부 구성

1947.10 선거에서 465석중 366석 차지

1948 디미트로프 사망이후 소련유학과 체르벤코프 지도권 장악

(다) 알바니아 :

유고공산당 지원하에 1941년 黨創建, 초기에는 인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나, 1942년경부터 중남부를 중심으로 인민해방평의회를 조직했고,

1943.8 민족주의자들과 결합해 ‘알바니아救國委員會’ 조직.

1944.11 알바니아 독립 주도

(라) 폴란드 :

1차대전후 국경문제로 反蘇感情 고조.

공산당세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944.8 國內軍에 의한 峰起

2차대전 직후 소련의 강한 후원하에 공산당이 정권 수립.

1947년 선거에서 反共그룹인 미코라지크의 폴란드農民黨이 10.3 %를 득표하자 철저한 肅清作業으로 社會主義化 달성

1954년 말까지 정치범 10만명, 성직자 1/4 체포, 공산당내의 민족주의계열 숙청 병행

(마) 동 독 :

나찌치하에서 과거의 좌익세력의 거점이 거의 파괴

2차대전후 소련군의 지원하에 동독 성립

親蘇派 울브리히 등이 주도하여 社民黨과 결합해 SED 결성

(바) 체코슬로바키아 :

1921년 黨 창건해 당원수 30만명

1925년 선거에서 13.2% 득표하여 제2당이 됨

1945년 총선거에서 의석 300석중 114석 확보

(2) 改革傳統

(가) 헝가리 :

1956년 임레 나지 정권하에서 소련의 스탈린격하운동의 영향으로
‘사회주의로의 獨自의인 길’ 모색했으나 실패.

이후 등장한 카타르정권은 정통성 결여를 경제개혁으로 만회하려
‘同盟政策’과 60년대 후반 New Economic Mechanism (중앙
통제의 약화와 시장도입이 주목적) 도입으로

66-70년 사이 국민소득이 2배로 증가했으나,

70년대초반 성장 停滯.

1982년 지하경제의 합법화와 1985년 기업민주화를 위해 유고슬라
비아식 경영모델을 채택

(나) 폴란드 :

- 1953년 대중시위후 黨主導로 自由化추진. 지식인 중심의 비판세력
형성

- 1956년 포즈난 노동자봉기(고물카정권 수립)

- 1968년 바르샤바 대학생 시위.

- 1970-71년 생필품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노동자의 파업 - 폭동 발생

- 1980년 7월 식료품가격인상에 대한 그다니스크 레닌조선소 파업을
시발로 9월 전국 자치노조들이 연대노조를 결성. 自營農 중심의 ‘지
역자치조합’ 결성 (350만 회원)

(다) 동독 :

- 과도한 집단화에서 비롯된 1953년 베를린 폭동

- (개혁운동과는 약간 다르나) 1961년까지의 270만, 난민촌에 수용
된 100만 등 약 370만의 인구유출등으로 사회주의화에 대한 저
항 존재.

* 개혁세력이나 전통은 미약하나, 체제자체의 성립이 外生的이었고 分
斷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서독과의 비교로 대중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개혁의 動因이 항상적으로 존재.

(라) 체코슬로바키아 :

- 1947년 이후 급격한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발생한 슬로바키아 출신 지도자들의 숙청에 대항해 형성된 슬로바키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黨에 대한 비판 (이것이 1968년 프라하의 봄의 근원을 이룸)
- 1968년 '프라하의 봄' : 슬로바키아 출신 당 제1서기 두브체크가 숙청된 지도자들의 復權과 소련과 다른 체제건설 시도. 1968년 2월 20주년 국경절에서 '新路線' 제시. 이에 대해 소련 및 동구 강경국가들이 비난하고 8월 군사개입함으로써 개혁 중단.
- 1977년 1월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의 법률준수와 비준된 국제조약의 준수를 촉구하며 '77 헌장 그룹' 등장 (68년 당시 외무장관이던 하제크를 포함한 약 1,000명의 인사들로 구성). 1980-81년 폴란드의 연대노조의 활동에 고무되어 활동 강화시작. 그러나 대중운동의 차원이 아닌 비판, 청원활동

(3) 經濟發展 水準

- 사회주의화 이전 동구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 評價
 - o 비교적 공업이 발달한 中位 자본주의 국가 :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 o 낙후한 農業國家 :
루마니아, 헝가리, 알바니아
- 일반적으로 소련 - 동구 국가들을 높은 경제발전 수준으로, 중국 - 북한 - 쿠바 등을 낮은 경제발전 수준으로 평가.
- 그러나 경제발전 수준을 국민총생산, 산업구조의 구성비 등 객관적인 수치를 중심으로한 절대평가보다는 인접한 사회주의국가나 자본주의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相對評價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예를 들어 동구국가들중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GNP 등에 있어 중

국 등 비유럽지역 사회주의국가들보다는 월등히 높은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타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서는 낙후된 국가들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經濟危機의 深化程度

— 이에 대한 평가 역시 객관적인 수치를 중심으로한 구체적인 평가보다는 제요소들의 영향(특히 국제적인 활성화에 따른 상대적 낙후성)에 의한 다분히 主觀的인 評價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경제위기심화 興否에 대한 평가는 개혁과정에서 경제적 슬로건이 전면화되었는가에 따라 역으로도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 사회주의 국가일반이 60년대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율의 감소 - 정체현상, 실질임금 상승률 및 생활수준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서유럽과 인접한 동구국가 국민들의 경제적 격차에 관한 체감이 경제적 위기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외부세계와의 관계가 경제위기 심화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경제위기 심화여부에 관한 평가에 있어 비교적 판단이 용이한 나라는 동구국가들중 외채규모가 가장 크고 80년대 들어와 계속해서 두자리 숫자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폴란드, 동구국가들중 1인당 외채가 가장 많은 헝가리(80년대후반의 생활수준이 70년대 수준으로 하락) 등이다. 중국이나 알바니아 등은 경제적 후진상태에도 불구하고 自給自足的 經濟體制의 固守로 인해 외부세계와의 비교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불만의 표출사태는 없었다. 또한 이들 나라는 정통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를 내세워 黨 - 大衆關係등의 정치적 측면을 全面化시킴으로써 경제문제의 전면화를 막아온 것 역시 경제위기의 심화를 노출시키지 않은 또다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타 소련 및 동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제반 經濟指標를 중심으로 이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여겨진다. 다만 동독의 경우는 동구국가들중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한 서독과의 대비속에서 대중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함으로써 경제위기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체코 역시 서독등 서방세계와의 활발한 관계증대로 인한 상대적 격차 인식이 이러한 위기심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루마니아의 경우는 차우세스쿠 정권의 비효율적 경제정책과 외채상환을 최우선으로한 내핍생활강요 등이 공식통계에서의 성장지속과는 달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고 실제로 88년 노동자파업등은 이러한 악화된 경제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5) 西方世界와의 關係程度 :

이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는 경제교류(무역구조, 차관 도입, 기술도입, 직합자투자 등)와 외교관계 수립, 각종 조약 체결 그리고 인적교류 등은 소련 및 동구국가들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련의 경우는 미국과 함께 양대진영을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써 당연히 활발한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헝가리, 체코의 경우는 서유럽과의 接境地帶 위치와 인적, 물적교류의 확대가 두드러지며, 폴란드는 동구국가들중 가장 많은 對外借款을 주로 서방국가들에 의존하는 점에서, 루마니아는 국내적으로는 차우세스쿠정권의 強壓政策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중반이래 脫蘇獨自外交路線 추구로 인한 대서방관계 확대라는 측면에서 대외개방의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독의 경우는 역시 分斷으로 인한 서독과의 특수관계가 여

기서도 중요한 요소로 대두한다고 볼 수 있다. 동독은 안정적인 체제유지를 위한 고립적인 측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서독과의 경제관계증대, 1984년 이후 서독 TV의 시청을 허용하는 등 개방화의 경향을 보여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동구블럭 국가중 맹목적인 소련추종노선을 걸어온 불가리아의 경우는 서방과의 관계에서는 70년대 이래 서독등 서방국가와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계가 미진하다고 보여진다(예를들어 87년 불가리아의 총 방문객 수는 750여만명에 이르나, 그 중 40% 이상이 터어키계, 40% 가 소련-동구권이고, 나머지가 서방인). 개혁이전 중국이나 알바니아는 폐쇄적인 외교노선의 추구로 대서방교류가 적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6) 社會的 多元化 程度

이는 공산당이외의 개혁주도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의 판단 근거로는 産業構造(2, 3차 산업의 비중), 都市化, 教育水準(文盲率), 공산당 이외 조직의 존재, 종교인의 비율 등이다.

<표 7> 15세 이상 문맹 인구

	연 도	문 맹 인 구	문 맹 율 (%)
헝 가 리	1980	95,542	1.1
폴 란 드	1978	334,586	1.2
유 고	1971	2,478,207	16.5
소 련	1979		0.2

資料 :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88.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할 경우 대개 소련 - 동구국가들은 다원화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非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은 낮게 분류될 수 있다. 다만 동구국가들 중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강력한 指導權의 확립으로 인해 市民社會領域이 활발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표 8>

관 광 객 도 착 수

단위 : 천명

구 분	1980	1981	1982	1983	1985	1986	1987
알 바 니 아							
불 가 리 아	5486	6046	5647	5771	7295	7567	7593
체 코	5055	4787	3390	3812	16505	19030	
동 독	1523	1457	1500	1500	1060	1038	1121
헝 가 리	9413	10450	6473	6764	15126	16646	18953
폴 란 드	5664	1737	1123	1920	3436	3851	4776
루 마 니 아	6742	7002	5940	5802			
유 고	6410	6616	5955	5947	8436	8464	8907
소 련	5590	5870	6340	6777			

資料 : 國際聯合, 「世界統計年監」(Statistical Yearbook) 1983/1984. (80-83)

The Europa World Yearbook, Vol 1,2. 1989.

第3章 北韓 社會主義體制的 變化要因

1. 北韓 社會主義體制的 性格과 特徵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도 앞의 第1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기존의 사회주의체제가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1)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근거한 공식적 통치 이데올로기가 강조되고 있고, (2) 共產黨의 領導權을 전제로 한 黨-國家體制를 갖추고 있으며, (3) 국유화와 집단화로 강화된 사회주의 경제구조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를 堅持하고 있으며, (4) 陣營論的 世界觀에 입각한 국제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북한도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45년 해방과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더불어 탄생하였고, 한국전쟁과 격렬한 남북대결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사회주의는 다음과 같은 “主體型 社會主義”의 성격과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가. 이데올로기적 特徵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根幹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제반 정책의 준거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적인 行態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따라서 ‘역사의 주체와 사회발전의 원동력’도 ‘인민대중’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논리는 현실적으로

인민대중의 ‘주인다운 태도’ 즉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요구하며, 북한당국이 諸政策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 사상적 자극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리적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對内外정책적으로는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라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강렬한 主意主義的이고 民族主義的 性格을 가지는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확립된 데에는 한국전쟁 이후 파괴된 북한사회를 조속히 再建하고, 산업화와 사회주의 개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자발적이고 혁명적인 참여와 동원이 요구되었다는 점, 1956년의 이른바 종파투쟁을 前後로 하여 김일성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1960년대에 격렬하게 전개된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북한의 자주성을 堅持해야 한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북한은 1961년의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黨의 指導理念으로 강조하였고, 1980년 제6차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주체사상은 名實相符하게 북한의 唯一的 指導思想으로 확립되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조선로동당과 국가기관의 활동의 지침’이자 ‘모든 국민들의 절대적 지도사상’으로 북한사회의 전일적인 규정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1) 김일성체제의 정통화, (2) 세습적 권력계승의 정당화, (3) 혁명과 건설을 위한 대중동원, (4) 대외적 독자노선의 추구, (5) 통일노선의 합리화 등의 總體的인 機能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주의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결정적 측면임과 동시에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 예를 들면, 사회주의권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개혁을 시도하는데 있어 강력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이다.

나. 政治的 特徵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는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정치의 기본원리로 삼아왔다. 잘 알다시피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는 당과 국가기관, 그리고 근로단체라는 3가지 조직이 주요 구성요소로서 작동된다. 이 3가지 조직체계 중에서 黨은 政治的 領導的인 役割을 수행하며, 국가기관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고, 근로단체는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로서 대중을 교양하고 당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듯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특성은 당의 지도와 이를 기초로 한 국가기관과 각종 근로단체의 大衆的 政策實踐이라는 範疇로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와는 달리 수령의 존재를 당, 국가, 근로단체라는 조직단위의 上位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체제와 차별성을 가진다. 즉, 사회주의국가에서 총체적 지도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黨’의 역할을 수령이라는 ‘超越的 存在’에게 移讓함으로써 수령의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總體的이고 唯一的인 指導를 행하며, 당은 ‘수령의 영도’를 정책화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지도하는 ‘執行者的 役割’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구조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와는 달리 수령중심의 유일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북한의 정치제도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으로 시작된다. 북한은 1948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1972년 12월 28일 제 5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으로 전면개정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

특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공고히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는 문제가 당면한 과업으로 제기되었다.”¹⁾ 고 헌법제정의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헌법의 제정으로 북한은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한 단일권력구조를 制度化하게 된다. 즉, 종래의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의 권한을 신설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로 移讓하였으며, 중앙인민위원회를 국가주석이 직접 지도, 통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내각은 단순한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바뀌었고, 재판기관인 최고재판소는 중앙재판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중앙인민위원회의 지휘, 감독아래 놓이게 되었다.

한편, 舊憲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조선로동당의 지위를(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明文化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 4 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국가기관에 대한 지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72년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은 黨의 地位와 黨에 의한 國家機構의 指導를 制度化하였으며, 다른 한편 主權機關의 지위와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주석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측면에서 유일적 지도를 制度化한 것이라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사회제도』(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p.42.

할 수 있다.’²⁾ 이제 수령은 내용적으로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모든 권력을 총체적으로 담보하게 됨으로써 유일지도체제의 완전한 성립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정치의 또 다른 특성은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권력계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의 權力繼承은 현재까지 근 15여년 이상이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계승이 단순히 지도자의 교체가 아닌 주체체제의 계승이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식 權力繼承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인 3대혁명소조운동을 전개하여 후계자인 김정일을 주체체제의 계승자로 대중들에게 부각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당 및 국가기구에 있어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단행하면서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로써 김정일은 이미 1970년대 중반 대중들에게 ‘黨中央’으로서 이미지가 부각되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김일성과 함께 ‘指導者’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 김정일을 당 중앙위원회, 당비서국 및 당군사위원회에서 서열 2위를 차지함으로써 실질적인 후계자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다. 經濟體制의 特徵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自立的 民族經濟’라는 개념으로 특징지우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현재의 북한의 수령, 즉 김일성은 국가주석, 조선로동당 총비서라는 권력의 최고핵심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동당의 중앙군사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 정권기관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며, 정치·사상적으로도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는 생산의 인적 및 물적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민족국가내부에서 생산 소비적 관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산을 실현하여 나가는 경제체제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는 자기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주체적인 경제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는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와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 인민경제의 현대적 기술로의 장비,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기지, 자체의 유능한 민족기술간부의 대부대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³⁾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閉鎖經濟體制, 혹은 自給自足經濟體制라고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자신들은 “폐쇄경제건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사회주의 제국과 개발도상국가들의 상호 경제기술적인 협조는 경제자립을 확보하고 경제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북한경제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폐쇄적이지도 자립적이지도 못하다. 아래의 <표 9>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北韓經濟의 對外依存度는 특별하게 낮은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무역이 소련과 중국등 사회주의권에 치중되어 있고, 서방과의 경제관계에 대해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 북한과 동남아국가의 무역의존도

구 분	인구(백만명)	GNP(억\$)	1인당 GNP	수출(억\$)	수입(억\$)	개방도(%)
세계	5 024	141 916	2 825	23 471	24 078	33.7
중국	1 072	2 934	273	347	364	24.2
북한	21	194	936	16.7	23.9	21.0
일본	122	23 963	19 642	2 303.4	1 503.0	15.9
소련	282	21 500	7 690	1 086.8	968.7	9.6
동북아	1 539	49 777	3 235	4 227.0	3 269.7	15.1

3) 『경제사전』(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5) p.208.

1989년 현재 북한의 貿易規模는 총 47억 9,100만불, 이중 수출은 19억 4,600만불, 수입은 28억 4,500만불로서 8억 9,900만불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외채는 67억 8천만달러이고, 이중 西方圈에 27억 3천만불, 共產圈에 40억 4천만불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대외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역에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74년에는 무역총액이 전년대비 47.7%의 성장율을 보이기도 했으나⁵⁾ 실제적으로는 1974년 한해에만도 6억 2,590만달러의 무역적자만을 내게 되고 1975년부터는 다시 무역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 특히 서방과의 무역관계는 별로 성장하지 못했다.

북한경제의 보다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노동력 중심의 경제건설노선, 즉 大衆動員에 의한 經濟의 量的 成長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 있다. “생산자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 동원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적 우월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다그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⁶⁾는 한 북한경제학자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경제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대중동원을 통한 경제건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속도전’, ‘80년대속도창조

4) 『국제정세』 1990년 11월호, p.171. 최근 북한의 한 학자는 자신들의 외채가 20~30억 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박영호, “북한학자들이 말하는 오늘의 북한경제” 『신동아』 1990년 9월호, p.295.

5) 徐鎭英 編, 『現代中國과 北韓 40年』(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89) p.350.

6) 박춘단, “사회주의경제발전에서 사회주의경쟁운동의 추동적 역할”, 『경제연구』(평양: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1988년 4월) p.16.

운동' 등이 북한의 기본건설노선으로 자리잡게 하는 이유이다.

북한경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과도한 중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집중을 들 수 있다. 비록 북한에서는 자신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이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적 발전'으로 均衡的 發展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경공업과 중공업에 대한 투자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3 : 7 정도로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물론 이러한 비율이 이전의 2 : 8의 비율보다 나아진 조건이기는 하다) ”

더구나 남과 북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공업에 대한 투자중 상당부분이 군수산업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공업의 발전이 단순히 '인민생활에 향상을 가져오는 부문에 집중'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중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경공업과 인민생활의 상대적인 낙후성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었다.⁸⁾ 또한 경공업, 인민생활의 낙후성이 '投資資金의 不足'에서 오는 것인 바, 이러한 경공업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내부 원천의 최대한의 동원', 즉 대중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방식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정했으면서도, 경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라는 대중동원운동을 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

7) 현재 북한에서 발표된 공식적인 수치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64년까지의 비율뿐이다. 1964년의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투자비율을 보면, 중공업은 73.8%, 경공업은 2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46~1985』(1986) pp.186~187.

8) 이달희의 연구에 의하면, 군사비 1%의 증가는 인민경제비를 평균적으로 약 0.4%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이달희, "북한경제와 군사비",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 219~220.

유는, 바로 ‘중공업에의 투자집중과 이에 따른 경제건설자금의 부족’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경제관리체계는 중앙집권적인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물질적인 자극이나 자유경쟁보다는 政治, 思想的 刺戟에 의한 大衆動員的 方法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관리체계는 1974년 연합기업소제도의 도입을 특징으로 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가치적 범주의 확대 등 제한된 범위에서 개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기업소에 대한 간접적인 지도기능은 약화되는 대신 주로 과학, 에너지분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최근 사회주의권의 개혁의 정도와 비교할 때, 상당한 거리가 있다. 즉, 북한의 경제관리체계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생산수단의 개인소유와 시장경제의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 分斷과 北韓 社會主義體制의 性格

북한은 사회주의의 특징중 하나는 ‘分斷’이라는 규정력이 미치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兵營的 社會主義’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南과 北이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상황은 南에서의 군사정권의 등장, 北에서의 병영적 사회주의정권의 지배가 계속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남한과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특수한 긴장상태를 이용하여 냉전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군사적 지배체제를 확립했다고 할

9) 이성봉, 『북한의 경제관리체계연구』(고려대 석사논문, 1990.8) pp.80~81.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남한에서와 같이 군부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지만, 전 사회의 병영화를 단행하였고,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군사대국으로 성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병영적 사회주의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1985년 현재 북한의 군사화의 정도는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전체 북한 인구중에서 약 28.5%의 인구가 군사조직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사회가 얼마나 병영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IISS의 『Military Balance』는 1989년 현재 북한의 정규군을 111만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구를 약 2,279만 2천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있다. 이는 정규군이 전체인구의 약 5%에 가까운 것이다. 이외에 북한은 554만명에 달하는 준군사조직을 두고 있다고 한다.¹⁰⁾ 이렇게 볼 때, 1989년 현재 북한에는 약 665만명 이상이 군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전 인구의 약 30%에 가까운 수치가 되는 것이다. 특히 통일원이 1988년의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가 약 927만 1천명이라고 잡고있는 것을 고려하면,¹¹⁾ 이와 같은 군사력의 증대는 직접적으로 북한의 경제건설과정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 현재 북한은 이같이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10)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0 ~ 1991 (1990) p.166..

11) 1988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수치는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1990) p.5.

< 표 10 > 중국, 베트남, 북한의 병력과 군사비 지출(1985)

구 분	인 구 (백만)	정규군 (백만) (인구비)	전체병력 (정규군과 준군사조직) (백만) (인구비)	1985년 국내 총생 산 (US 10억 불)	1985년 국방비 지출 (US 10억 불)	1985년 GNP에 대 한 국방비 지출 (%)
중 국	1,050.0	3.0 0.29%	25.0 2.4%	553.0	6.52	1.18
베트남	61.23	1.25 1.98%	5.715 9.3%	14-19.4	N/A	
북 한	26.6	0.878 4.26%	5.88 28.5%	14.2	3.42	23.3

資料：李昊宰 編, 『韓半島軍縮論』(法文社, 1989) p.162.

< 표 11 > 1980년대 북한의 군사비지출 현황 (단위: %)

구 분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국 방 비	관 리 비
1980	60.5	22.2	14.6	2.7
1981	61.3	22.0	14.3	1.9
1982	62.5	20.9	14.6	2.0
1983	63.1	20.2	14.7	2.0
1984	64.4	19.9	14.6	1.1
1985	62.5	20.7	14.4	2.4
1986	63.5	20.3	14.0	2.1
1987	66.4	18.9	13.2	1.5
1988 ¹⁾	67.1	19.0	12.2	1.7
1989 ²⁾	?	?	12.0	?

資料：1) 1988년까지는 徐鎮英 編, 『現代中國과 北韓 40年』(亞細亞問題研究所, 1989) p.328.

2) 1989년은 국토통일원 刊, 『1989년도 北韓 經濟綜合評價』 1990, p.8.

위의 <표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의 공식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국방비의 부담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국방비에 대한 통계는 자료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란 쉽지 않다. 북한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1988년 현재 전체예산 중에서 국방비의 비중은 12.2%에 불과하며, IISS의 자료로는 1983년 현재 14.8% 그리고 統一院의 자료로는 1985년 현재 31.3%에 달하고 있다.¹²⁾ 또한 GNP에 대한 군사비의 비중을 국방부의 자료에 의거하여 보면, 1986년에는 22.6%, 1987년도에는 24.4%로 나타나고 있으며,¹³⁾ IISS의 자료에 의하면 1988년에 GDP의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⁴⁾ 자료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수치는 실제로 投資財源의 부족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북한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예산의 구성상 군사비의 증감이 人民經濟로의 투자액을 증감시키는 직접적 계기로써 작용한다고 볼때, 군사비지출의 축소를 통한 人民經濟로의 투자재원의 확대라는 측면은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2. 北韓體制가 當面한 課題

북한사회주의의 革命과 建設史에 대한 <로동신문>의 정권창립 41주년 기념사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2) 徐鎮英 編, 앞의 책,

13) 이달희, 앞의 글, p.212.

14) IISS, 위의 책, p.166.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은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우리 식대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왔으며 국가건설도 우리식대로 진행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사회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생사고락을 같이해 나가는 혁명적 대가정이 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인 사회가 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다.”¹⁵⁾

이처럼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唯一的 指導理念으로 삼고 있으며, 수령론에 입각하여 수령, 당, 대중이 三位一體가 되는, 김일성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고,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여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혁명적 대가정’으로 만들고, ‘우리 식대로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특이한 사회주의국가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의 지도부는 현재 ‘북한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는 북한의 변화요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1980년대에 북한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알기 위해 다음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동신문 사설을 분석하였다.

<표 12> 「로동신문」분석(1980 ~ 199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국내정치	정치	당, 국가	20	19	13	12	13	10	6	6	2	8	8
		사상, 대중운동	46	23	29	35	42	48	42	54	62	63	55
		3대혁명	1	1	1	1	1	1	1	1	1		

15) 「로동신문」 1989년 9월 9일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국 내 정 치	정 치	기타	1				3	2	2				
		소 계	68	43	43	48	59	61	51	61	65	72	63
	경 제 체	일반	19	11	13	16	13	17	14	14	13	7	12
		경제관리, 경제지도	2	7	2	4	2	4	2	2	1	2	2
		경제구조, 경제제도				1				1			
		산업, 운수	20	16	27	41	33	36	40	34	31	37	29
		농림수산업	19	29	19	24	19	19	19	20	13	13	7
		대외무역						2	1	1	1	2	
		과학기술	7	2	4	2	5	3	8	6	8	6	1
		기타	9	15	10	9	7	2	4	1	2	7	7
	소 계	76	80	75	97	79	83	88	79	69	73	58	
	사 회 문 화	일반						2				1	
		교육, 체육	3	2	2	1	2	2	3	1	1	3	2
		의료, 보건, 복지	1					1			1		
		문학, 예술							2		1		
		기타	1	1		1	1	3	1	2	2	2	
		소 계	5	3	2	2	3	8	6	3	5	6	2
	군 사	민군관계								1			1
		기타	1			1		1	1		1		2
소 계		1			1		1	1	1	1		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남 북 관 계		정치	6	3	3	3	3	1	2	1	2	3	1
		경제					1						
		통일문제	6	6	4	6	5	3	8	7	13	3	6
		군사		1	1	2	3	4	3	3	1	2	1
		기타					1	1	1	1			1
계			12	10	8	11	13	9	14	12	16	8	9
국 제 관 계		일반	1		1	1		1	2	1	1	1	
		北韓 - 蘇聯		1	1				1				
		北韓 - 中國	2	2	3	3		1	3	3		2	2
		北韓 - 東歐											
		北韓 - 美國		1		1							
		제 3 세계	2		2	2	1	1	1	1		2	
		국제기구											
計			5	4	7	7	1	3	7	5	1	5	2

* 1990 년은 1 월 ~ 9 월까지의 수치임 .

앞에서 제시한 로동신문 사설의 주제별 빈도수에 의하면, 1980 년대에 북한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제건설과 경제발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1980 년대에 북한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만성적인 투자재원의 부족 등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들이 경제의 활성화와 생산력의 증대를 일차적인 과제로 제시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전력공업, 채취공업, 운송산업분야에서의 成長鈍化가 북한의 경제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산출함에 따라, 북한은 이같은 基幹産業部門에 대한 투자와 생산력 증강을 강조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본과 노동생산력을 提高시키 위해 과학, 기술의 발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黨과 國家의 문제에 있어서, 당이나 국가의 ‘指導’라는 측면보다는 실제적인 업무수행능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의 정치과정에서 실무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推論을 할 수 있게 한다. 즉, 당과 국가가 정책을 제시하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大衆의 창발성을 강조하던 것과는 달리 정책집행과정에서 현대적인 조건에의, 적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관료의 등장이란 점과 관련하여 북한의 정치과정의 성격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세대, 즉 혁명 2세대의 등장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서 정책집행과정에서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적용문제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로동신문은 세대교체의 문제와 함께, 간접적으로 김정일의 승계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로동신문의 분석에서 가장 주목되어야 할 것은, 1988년 이후 북한에서는 思想, 大衆運動에 대한 強調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990년에 이르게 되면, 북한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지도부의 최대의 관심사항은 경제문제보다는 정치, 사상문제로 이전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1980년대 말 이후 동구권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북한의 위기의식과 대응자세와 연관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개혁을 ‘資本主義的 方式’이라고 비판하면서, ‘社會主義的方法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의 물결을 막아보려고 고심하고 있는 것이 생생하게 보인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자체에서 해결하려는 방식이 북한주민의 사상의식에 대한 강조와 ‘우리식’

이라는 北韓社會主義體制의 特殊性속에 결합되게 되고,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사상의식과 사상교육에 대한 끊임 없는 강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 북한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생산력 낙후의 극복, 정치적으로는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김정일에로의 권력승계의 문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북한사회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3. 北韓의 變化要因 : 國際的 要因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더불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질서와 냉전구조의 붕괴는 기본적으로 陣營論的인 세계관에 입각해 있는 북한의 '주체형 사회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로 고무된 南韓의 北方政策이 상당한 성과를 낳게 되자 북한의 危機意識은 '獨逸式 吸收統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할 만큼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南北總理會談에서 행한 연청묵 북한총리의 연설이나 그밖에 북한에서 발간되는 公式文件에서 '먹고 먹히는 식'의 통일을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변화에 대한 북한의 위기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¹⁶⁾

다음 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북한은 이같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北韓式의 社會主義를 고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관적인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국제환경의 변화에 북한은 적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16) 「로동신문」 1990년 10월 5일자

요인으로서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게 변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제적 요인을 (1)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질서의 구조적 변화, (2)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남한의 북방정책, (3) 북한과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변화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冷戰秩序의 構造的 變化

1978년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과 서방세계에 대한 대담한 문호개방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던 냉전질서는 고르바초프의 ‘新思考 外交政策’이 가시화되면서 급격하게 붕괴되었다. 1985년 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개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정책은 미-소 양국이 군사적인 우위를 접하기 위한 競爭을 止揚하고 緊張緩和와 國際協力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낳게 하였다. 이같은 새로운 時代精神은 1987년 12월에 INF 폐기조약의 체결, 1989년 3월부터 시작된 유럽재래식전력감축회담(CFE)의 성공, 그리고 1989년 12월의 미-소 정상간의 폴타회담, 1990년 워싱턴회담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미-소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더불어 유럽에서의 냉전구조의 붕괴가 현실화되었다. 특히, 1989년의 동구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대변혁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실질적인 와해, 그리고 독일의 통일 실현 등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到來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 신시대의 정신은 아직 아시아의 냉전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큼 확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軍事的 對決을 止揚하고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1989년 5월의 고르바초프의 北京방문으로 나타난 中-蘇和解는 지난 30여간 이들 두 나라 사이에 계속되었던 긴장과 대립을 종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에서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에 중요한 여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소련의 변화는 이 지역의 냉전질서를 변화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1978년의 歷史的 路線轉換을 선언한 후 ‘獨立自主外交路線’을 표방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霸權의 支配를 모두 배격하고 實利主義的 外交政策을 추구하고 있다. 즉, 중국의 국가적인 과제인 四個 現代化와 經濟發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국제환경이 요구된다는 입장에서 군사적 대결과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한 국제관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등 서방 자본주의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대담한 門戶開放政策을 단행했으며, 소련과의 國交正常化를 추진하였고, 남한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달리 실리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지역적인 세력관계를 고려하여 남한과의 관계에서 政-經分離의 原則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정치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중국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緊張緩和를 추구하는 것이란 점에서 중국은 최소한 平和共存과 相互協力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소련도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냉전질서를 改編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물론, 유럽에서와 같이 냉전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만한 혁명적인 변화를 유발하지 못했지만,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아시아정책은,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대담한 것이었다. 즉, 1988년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한국과 소련의 경제교류 증대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소련은 기존의 대한반도 정책을 대담하게 수정하여 마침내 한-소 국교정상화에까지 이른 것은 이

지역에서 냉전구조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가장 구체적인 證據라고 하겠다.

이와같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소간의 대결 종식, 유럽에서 국제질서의 태동, 그리고 아시아에서 냉전질서의 瓦解와 같은 역사적 변화는 한국과 북한의 국제관계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정치에서도 중대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이데올로기와 냉전질서가 이미 붕괴되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에 과거와 같은 대결의 논리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와 정치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도전에 한국은 그런대로 適應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이룩한 경제성장과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민주화를 기초로 하여 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 대변화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공세적인 立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하여 자주의교와 자립경제를 강조했던 북한은 이같은 세계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남한의 북방정책의 공세에 대하여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외교적인 孤立과 더불어, 북한사회주의체제의 내부적인 동요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는 북한에게는 지금까지 북한이 경험했던 그 어떤 시련보다도 더 큰 변화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社會主義圈의 變化와 韓國의 北方政策

소련, 중국,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대변혁은 이들 사회주의국가들이 종래에 堅持해 왔던 한반도문제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북방정책의 可視적인 성과를 산출하였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1973년 당시 박정희대통령의 6.23 선언을 계기로 공산권국가와의 교류를 허용하고 간접적인 형태로

나마 소련을 비롯한 몇몇 공산권 국가와의 경제 및 문화교류를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1980 년대에 들어와, 경제발전과 민주화, 88 올림픽 등으로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이 변화되고,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 개방정책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들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교류, 특히 경제교류가 급격하게 되었다. 한국과 공산국가와의 交易量은 1988 년을 前後로 하여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특히, 중국과는 약 30 억불 수준의 무역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과 사회주의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정부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들 사회주의국가와의 국교정상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중국은 중국적 사회주의를 고수해야 한다는 국내적인 사정과,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완강하게 政經分離를 견지하고 있지만, 이미 사회주의를 포기했거나 사회주의를 전혀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동구국가들과 소련은 경제교류와 함께 정치적인 국교정상화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주었다.

동구권 국가중에서 가장 먼저 대변혁을 경험한 헝가리가 1988 년 2월에 한국과 정식수교협정을 체결한 것을 시발로 하여 동구 국가들은 앞을 다투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폴란드(1989 년 11 월), 유고슬라비아(1989 년 12 월), 체코슬로바키아(1990 년 3 월), 불가리아(1990 년 3 월), 루마니아(1990 년 3 월) 등이 연이어 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동구국가들과 한국의 국교수립에 뒤이어, 1990 년 10 월 1 일에는 한국과 소련의 국교수립이 劇적으로 실현됨으로써, 냉전시대의 종언이란 역사적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화로 말미암아 한국정부의 국제적인 位相이 크게 高揚되었는 데 비하여, 북한의 외교적 고립감을 더욱 深化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였다. 더구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이 과거와는 달리 국제사회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대단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나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북한을 '포기' 했다는 증거는 없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동구에서와 같은 대변혁을 유도하거나 자극할 것이란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소련은 물론이거니와 헝가리를 제외한 다른 동구국가들은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를 과거와 같이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회주의국가들이 북한의 現體制를 결정적으로 동요하게 할 만한 변화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시사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중국은 천안문사태이후 북한과의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이나 중국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남한의 북방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과거와 같은 陣營論的 對決論理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다. 蘇聯, 中國과 北韓의 關係

사회주의국가들, 특히 중국과 소련은 북한에게 정치적, 안보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들이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아래의 <표 13>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의 대외경제는 압도적으로 소련과 중국,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북한은 소련,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천안문사태와 동구의 대변혁으로 공동의 위기감을 가지게 된 북한과 중국은 잦은 정상급지도자들의 상호방문, 軍事使節團의 파견 등을 통하여 정치적인 連帶를 강화하고 있다.

< 표 13 >

북한의 지역별 무역구조(%)

연도별	소련	중국	공산권	비공산권
1946	81.1			
1949	46.7		83.4	16.6
1955	80.6	9.0	99.6	
1960	35.7		96.3	3.7
1965	40.4	약 40.0	88.9	13.5
1970	47.6	14.4	79.0	21.0
1975	22.9	23.7	59.4	40.6
1980	25.8	20.0	54.8	45.2
1985	42.4	16.5	69.5	30.5
1986	51.3	15.5	74.7	25.3
1987	56.5	15.1	73.0	27.0

資料: 서진영 편, 『현대중국과 북한 40년』, p.352. 참조하여 작성

1989년 4월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였던 趙紫陽의 평양방문, 1989년 11월 김일성의 북경방문, 그리고 1990년 3월에 천안문사태이후 등장한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총서기인 江澤民의 평양방문과 1990년 9월에 있었던 김일성과 강택민의 瀋陽에서의 비공식 회담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은 긴밀한 협력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지난 1989년 8월 북한군 총참모장 최광이 인솔하는 군사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군 총참모장인 遲浩田과 군사회담을 가지면서 양국사이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토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중국과의 관계가 1980년대 이후에 급격히 밀착하게 된 것은 소련 및 동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

실이다. 특히 최근에 한-소관계가 급진전하면서 북한과 소련의 언론들은 서로 감정적인 비방까지 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교역국이며, 북한 무역총액의 약 50%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사실,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북한과 소련의 무역량은 더욱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고,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양국관계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1985년 이후 소련은 북한에 대하여 MiG-23, MiG-29를 비롯하여 SA-5와 ZSU-23,24 자주대공포등과 같은 최신 무기를 제공해 주었으며, 군사사절단의 교환방문등을 통하여 군사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련의 對북한정책이 최근에 변화되면서 이같은 군사, 안보적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경제관계와 군사안보관계가 변화될 것이란 조짐은 소련이 국내적인 사정이 악화되면서 1988년 11월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하고, 1990년 이후 모든 군사물자를 유상공급하기로 한 방침과 1991년부터 북한과의 무역에서도 硬貨결제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 들어와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어느정도 소원해진 반면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해 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孤立無援의 입장에 몰린 것은 아니다. 더구나 중국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자국의 입장 때문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과 함께 '부르조아 자유화'를 助長하는 개혁,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소련보다는 중국에 의존하여 국제적인 고립을 모면하고 개혁, 개방의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意圖는 이미 1984년 9월에 중국의 개방을 모방하여 합영법을 제정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인 정치개혁도 천안문사태 이후 保守派가 제시한 정치개혁, 즉 사회단

체와 군소정당의 활성화의 방침과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인 개혁, 개방압력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같은 전략에는限界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 첫째, 중국이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표면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정부 역시 소련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조심스럽게 권유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이 보다 현실주의적인 인식에 입각하여 남북교류확대와 平和共存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북한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남한과의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1990년 10월에는 한-소수교에 자극을 받아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관계까지 취급하는 무역대표부를 설립하기로 합의를 하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난다고 하겠다.

둘째, 북한은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정책변화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북한으로서 이들 사회주의국가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특히, 소련에 대하여 북한은 앞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과의 관계를 축소할 수 없다는 고민이 있다. 더구나 북한의 군사현대화와 핵무기 개발등에 있어서 북한은 소련의 지원이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 부분적으로 중국이 소련대신 북한에 군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중국은 대단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소련을 代置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소련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對外依存度, 특히 소련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높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의 정책변화는 북한에게 심각한 外壓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注目할 필요가 있다. 앞의 북한의 무역구조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대외경제는 소련과 중국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중요한 현대식 군사장비와 군사기술을 소련이나 동구국가들로부터 導入하고 있는 것이 틀림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 의존도가 높은 데 비하여, 다음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중요성은 이들 사회주의국가에게 그렇게 높지 않다는 데에 북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 사회주의국가와 한국과의 무역량이 북한과의 무역량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데에도 북한의 취약성이 있는 것이다.

〈 표 14 〉 소련, 중국의 대북한 무역 현황

(단위 : %)

연도 \ 국가	소 련 ¹⁾			중 국 ²⁾		
	수 입	수 출	총 계	수 입	수 출	총 계
1986	0.7	1.1	0.9	0.6	0.8	0.7
1987	0.7	1.2	1.0	0.6	0.7	0.6
1988	0.8	1.6	1.2	0.4	0.7	0.6

資料 : 1) 1986년 北方研究會, 『蘇聯總覽』(법경출판사, 1989), p.146
 1987년 이후는 蘇聯對外關係省 經濟管理總局, 『蘇聯의對外經濟關係統計集 1988年』(財政と統計出版社, 1989), pp.9~14.

2) 1986년은 中國研究所, 『中國年監』(大修館書店, 1989), pp.274~275.
 1987년 이후는 『中國統計年監』(中國統計出版社, 1989), pp.636~637.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소련이나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의미는 경제적인 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에게 있

어서 북한은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역이며,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基地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에게 있어서도 북한을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아시아의 동맹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더구나 소련과 중국 모두에게 북한의 존재는 한국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군사적 안보적인 관계보다는 경제적, 實利的인 국가이익이 강조되는 脫冷戰시대가 到來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정치적 위치가 가지는 중요성이 半減되고, 과거와 같이 소련이나 중국의 개입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餘地가 좁아졌다. 中蘇紛爭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지만, 아직도 냉전질서가 지배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북한은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자주노선을 견지할 수 있었지만, 중소화해와 탈냉전이 실현된 상황에서 북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됨으로써 북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더이상 과거의 같은 自主路線을 고집할 수 없고, 국제적 변화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한반도 정책변화와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서방국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을 수 없는 外壓을 받고 있으며, 이같은 압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可視化되고 있다고 하겠다.

4. 北韓의 變化要因 : 經濟的 要因

앞에서 소련, 중국, 동구 사회주의국가에서 변혁운동을 촉발하게 되는 요인으로 장기적인 經濟沈滯와 경제위기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북한의 경우도 이런 점에서 例外가 아니다. 비록 북한의 경

제현황에 대한 客觀적으로 민을만한 통계자료를 찾기도 어렵고, 더구나 북한주민들이 體感하는 경제위기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현재 북한이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성장의 鈍化와 인민생활개선의 요구증대라는 데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사실, 북한에서 발표한 몇가지 統計數値를 분석해 보더라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제 2차 7개년 계획(1978~1984)을 통하여 국민소득은 1.8배, 공업총생산은 2.2배(생산수단 2.2배, 소비재 2.1배) 증가하여 계획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발표하였다.¹⁷⁾ 이러한 통계치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공업총생산 2.2배 달성은 북한이 통계를 발표하지 않은 1981년, 1983~84년에 공업생산이 상당한 침체에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북한당국이 발표한 공업총생산액의 증가율은 1978년 17%, 1979년 15%, 1980년 18%이므로, 1978~84년간 2.2배 증가하였다는 것은 1980~84년간의 연평균증가율이 8.8%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1982년의 증가율이 16.8%로 발표되었으므로 1981, 1983, 1984년의 공업총생산증가율은 6.5%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된다.¹⁸⁾ 북한은 1970년대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며, 1988년의 경제성장율은 3.0%, 1989년에는 2.4%를 기록하여 제 3차 7개년 계획의 연평균 성장목표인 7.9%에 크게 미달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¹⁹⁾

17) 최고인민회의 제 8기 2차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 3차 7개년(1987~1993)계획에 대하여”, 정무원총리 리근모 보고, 국토통일원 刊, 『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 4권(1989) pp. 803~811.

18) 徐鎮英 編, 앞의 책, p.335의 표를 참조하여 재구성

19) 국토통일원 刊, 『1989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1990) p.5.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성장둔화는 주민생활 개선요구를 실현해 주지 못함으로써 내부적인 불만을 누적시키고 마침내는 사회주의체제의 ‘理想과 現實’의 乖離를 인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구나 남북한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체제적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북한은 아래의 <표 15>에서 보여주듯이 1970년대이후 남한과의 경제력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1988년 현재 1인당 GNP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은 남한의 약 1/4에 불과하게 되었다.

<표 15> 남북한 1인당 GNP 변화추이

연 도	남 한	북 한	연 도	남 한	북 한
1960	526	137	1983	1,944	765
1965	622	192	1984	1,999	762
1970	897	286	1986	2,296	860
1975	1,281	579	1987 ¹⁾	2,826	936
1980	1,654	758	1988 ²⁾	4,040	980
1981	1,741	750	1989	4,968	987
1982	1,813	736			

資料: 1) 1987년까지는 국토통일원, 『남북경제현황비교』 각년판 참조
 2) 1988년 이후는 국토통일원, 『1989년 북한경제종합평가』(1990) 참조

이와 같이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북한경제가 當面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북한당국의 발표를 분석하면, 북한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隘路는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1) 전력, 석탄, 철강 등 산업생산의 기반에 심각한 공급부족에 당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1980년에 설정

한 「10대 전망목표」를 1993년까지의 제3차 7개년계획기간으로까지 연장하였으나, 현재의 실적으로는 1993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년 김일성의 신년사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던 것이다.

“전력, 석탄, 철강재 생산을 늘리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심고리입니다. 전력, 석탄, 철강재 생산을 빨리 늘여야 사회주의 대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²⁰⁾

(2) 衣食住問題 解決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970년대 이래로 의식주문제 해결이 경제정책의 전면목표로 대두되어 왔지만, 특히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개혁추진에 대하여 북한은 개혁을 필요치 않음을 주장해온 만큼 그 증거를 인민들에게 생활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김정일로의 權力移讓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인민생활수준의 향상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기존의 ‘중공업 우선정책’의 骨格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공업과 소비재생산의 발전과 농업부문의 活性化를 가져오기 위한 부분적 개혁을 시도하였다. 지난 1984년의 이른바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에서 북한당국은 生必需品 생산확대를 위해 作業班과 같은 지방단위의 자율생산, 판매조직을 설치하고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市場原理를 도입하고 있는가 하면, 1987년에는 자유상설 농민시장을 개설하여, 국가가 부여한 생산목표를 달성하고 난 超過分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20) 「로동신문」 90년 1월 1일자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공업부문에서 소련 및 조총련과의 합작생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생활품의 생산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북한당국도 기존생산설비의 老朽化로 인한 가동율의 저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소련측의 관측에 따르면 산업가동율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新規投資와 技術革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북한당국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표방하고 있는 제3차 7개년 계획의 기본성격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²¹⁾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며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인민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이 올려 세우는 것이다.”

이상의 집약적인 언급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 북한경제의 장기적인 沈滯局面을 돌파하고 인민들의 생활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 10대전망목표의 실현, 의식주문제의 해결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1980년 이래 나타나고 있는 제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경제건설 추진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자재원 조달의 애로에 있으며, 제약된 財源조차도 非效率的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堅持하고 있는 북한사회에서 투자재원의 주된 원천

21)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1990) pp. 910~924.

을 財政收入이라고 할 때, 북한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1987년 6.3%, 1988년 5.1% (또는 5.2%), 1989년 5.4%로 제2차 7개년계획기간의 평균 9.8%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²²⁾ 이처럼 부진한 재정수입의 증가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7개년계획과 동일한 투자율을 持續하기 위해서는 재정에서 공업건설투자예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대신 국방비 등의 비생산적인 부분의 비중이 낮아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등의 여타부분의 비중은 지극히 소폭의 저하에 그치고 있다. 또한 1989년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행사에 무려 47억불의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경제건설을 위한 생산적인 투자를 더욱 萎縮시키고 있는 것이다.²³⁾ 따라서 북한의 경제는 새로운 재원의 조달을 심각하게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打開하기 위하여 최근 일본과의 수교협약, 그리고 배상금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투자재원의 부족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겠다. “특히 기계설비의 현대화 방향에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고 뒤떨어진 현존기계설비들을 기술적으로 개조하게 되면 막대한 기본투자를 절약하면서도 추가적인 생산장성의 거대한 예비를 얻어낼 수 있다.”²⁴⁾ 는 북한경제학자의 지적에도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 과학기술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발전이라는 생산력 증대의 한 목표

22) 1988년까지는 徐鎭英 編, 앞의 책, p.322를, 1989년은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p.7을 참조하였음. 또한 1988년의 수치가 이중적으로 표시된 것은 자료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임. 5.1%는 국토통일원의 자료

23) 『내외통신』 종합판 제37집, p.178.

24) 임명호,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는 현시기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목표”, 『경제연구』 1988년 1호(평양: 경제연구출판사) pp. 25 ~ 26.

로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투자자원의 확대’라는 당면한 북한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었다. 또한 북한에서의 노동력의 부족현상 역시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더욱 促進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로력원천이 매우 적으며 지금의 인구증가율을 가지고 생산확대에 요구되는 로력을 원만히 보충할 수도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소비량도 많아지므로 로력자의 머리수만은 늘려 가지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은 지금 있는 공장들과 기업소들에게 기계화, 자동화를 하여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로력을 다른 부문의 확대에 돌리는 것입니다.”²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경제는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의 근본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로서 인민생활개선을 실현한다는次元에서 경공업과 소비재생산의 발전, 신규투자자원의 확보와 과학기술의 革新이 무엇보다도 절박하다는 점을 북한당국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 경제의 構造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경제관리의 비능률과 硬直性を 개혁하는 경제체제개혁을 보다 과감하게 단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종래의 군사력 위주의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른 자원배분의 歪曲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투자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자본과 현대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대담한 개방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물론,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정책으로 미루어 보아 가까운 장래에 이같은 대담한 體制改革과 개방을 단행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북한경제

25) 『김일성저작집』 17권, p.192 : 김운철 “집약적인 생산방법은 생산확대의 기본방법”, 『경제연구』 1987년 1호(평양: 경제연구출판사) p.3에서 재인용.

의 경제현상이 深化되면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이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경제정책은 1960년대의 제1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배경으로 하여 1970년대의 6개년계획(1971~76)이래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을 취해 왔으며, 1980년대에 들어 이러한 경향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해석된다. 1970년대 전반기에 서방진영으로부터의 무모한 자본도입이 곧 외채상환불능사태를 초래함으로써 1970년대 후반이후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에서 자력갱생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개방정책의 실패로 인한 반작용일 뿐이며, 결국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선택하였다. 한편 對內經濟政策에 있어서도 1984년이래 상당한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립채산제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소비재생산과 유통에 있어 종래의 국영기업과 지방기업과는 별도의 독립기업체제가 등장하는 등 生必需品와 소비제품의 생산증대를 위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이 도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개혁의 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가 있듯이 막대한 군사력의 유지는 북한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북한 지도자들도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1970년대 이후 남한이 급속도로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과 군비현대화에 拍車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유지하고 있던 남한에 대한 군사적 優位도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은 북한으로 하여금 1980년대 이후 과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軍備縮小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최근 일본과의 극적인 국교정상화 제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한-소 수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교적인 고립감에서 탈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특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소련에 많이 의존해 왔던 북한으로서는 소련의 지원 가능성이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의 경제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선택이 없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미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북한과 소련은 1990년 11월 2일자로 1991년부터 양국간의 무역을 국제가격에 따라 硬貨로 결제하는 순수상업베이스의 교역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샤탈린의 '500일 시장경제 이행 계획안'은 소련의 대외경제 활동을 전면적으로 脫이데올로기화 하며, 대외원조는 최소한의 인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70~80% 削減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89년기준으로 북한무역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소련과의 교역이 硬貨로 변경됨에 따라 북한경제가 深刻한 충격을 받을 것은 自明하다고 하겠다.

소련의 발표에 따른다면, 북한의 전력의 60%, 강재의 33%, 석유화학 제품의 50%, 섬유의 40%가 소련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1989년부터 시작된 소련의 북한에 대한 석유수출의 감소는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加重시키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련의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점차 협력관계를 정리해 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련은 북한에 대한 차관 39억불에 대하여 정리를 희망하고 있으며, 상품교역에 대하여도 북한이 협정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소련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소련의 북한에 대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북한의 무역구조가 1980년대를 통하여 급속하게 對蘇依存的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일

어났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북한의 수출입에 있어 소련의 비중은 1980년 수출의 26.7%, 수입의 25.9%에서 1988년에는 각각 52.7%, 61.1%로 제고되었다. 특히 1989년에는 전년에 비해 소련으로부터의 수입규모가 14.6% 감소하였으며, 이는 석유, 곡물, 기계 등의 수입감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북한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은 과거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지원 감소를 두차례에 걸쳐 경험한 바 있다. 1960년대 전반기에 中·蘇理念紛爭 과정에서 親中國化로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激減하였으며, 1970년대 전반기에는 1차석유파동 이후 소련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借款供與가 대폭 감소하였다. 첫번째 경우는 1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招來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으며, 두번째 경우는 북한으로 하여금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토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1991년부터 시작되는 소련과의 상업베이스의 교역과 硬貨결제에 북한으로 하여금 서방제국에 대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은 自明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既存의 外債 조차 償還不能狀態에 있는 북한에 대하여 일본을 제외하고는 경제협력의 관심을 표시할 나라가 없다는 점이 북한의 當面隘路라고 하겠다.

5. 權力承繼와 北韓의 變化

이미 앞에서 北韓體制의 特徵중의 하나로 여타 사회주의국가와는 달리 오래 전부터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문제를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이처럼 後繼者問題에 유달리 대비하고 있는 이유는 부자세습의 不自然性에서 派生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고 정권과 정책노선의 안정적 계승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사실, 사회주의국가에서 최고지도자의 교체는 격렬한 권력투쟁과 정책의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중국과 소련에서 대개혁운동이 발생한 배경에는 최고지도

자를 포함한 핵심적 권력구조의 변화라는 요인을 共有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따라서 김일성체제에로의 권력승계가 북한의 변화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 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김정일체제에로의 권력승계가 북한의 변화를 觸發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다. 우선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김정일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혁명 2세대'로서 주로 기술관료와 젊은 세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냉전시대의 '혁명 1세대' 보다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는 김정일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중들의 물질적 욕구'와 민주화에의 기대를 어느 정도 실현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내적인 '경제개혁'을 포함하여 정치과정의 부분적인 민주화를 시도할 수 있는 蓋然性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김정일에로의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變化의 觸發要因'보다는 '抑制要因'으로 작용될 수 있는 측면도 강하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민주화 요구로 인하여 對内外的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한국정부의 北方·統一政策의 공세로 독일식의 吸收統攝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식할 만큼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혼란을 惹起할 수 있는 대담한 정책전환을 시도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정일의 중요한 정통성 근거가 주체사상의 계승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개혁정책을 단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권력위기를 自招한다는 점에서도 김정일체제가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권력승계의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체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권력승계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深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가. 엘리트의 構成과 性格變化

현재 북한정치에서 核心的인 지위는 여전히 혁명 1세대, 빨치산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당중앙위원회 정위원 179명중 25명(13%), 당서열 50위내에는 12명(24%), 당중앙위 정치국 25명중 6명(24%),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에는 16명중 8명(50%), 정무원 부장급 이상 50명중 2명(4%), 국방위원회 11명중 6명(54%), 중앙인민위원회 17명중 3명(17%)등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활동을 한 人物이 掌握하고 있다. 또한 아래의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 현재 북한의 노동당 서열 50위에 속하는 인물들의 평균 연령은 약 68세로, 이는 1980년에 평균연령이 약 59세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핵심적 지도부 내에서는 세대교체가 거의 없었고, 여전히 빨치산 출신이 고위급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16> 당서열 50위까지의 연령, 경력분석

	평균출생 년 도	빨치산	대 표 경 력		
			군	전문당료	기술관료
1980년	1921.4	14	11	17	22
1989년	1921.9	19	8	17	25

이런 점에서 북한은 앞으로 김일성과 빨치산세대가 은퇴하고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고도 대폭적인 인사이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같은 핵심지도부의 세대교체는 극심한 권력투쟁을 惹起할 蓋然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년동안 북한의 권

력 엘리트들의 구성과 성격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잘 알다시피 북한은 1970년대초부터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최고 지도부를 제외한 중견 지도계층내에서는 세대교체를 지속적으로推進하였다. 그 결과, 당과 정부의 고위직에 젊고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기술관료들이 대거 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혁명 2세대인 기술전문관료들의 정치적 진출은 계속 확대되게 되는데, 제 6차 당대회시 정치국 정위원 19명중 6명, 후보위원 15명중 8명을 차지하던 기술전문관료들이 1984년 2월에 가서는 정위원 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후보위원 18명중 12명으로 증가되었으며, 1986년 12월 제 6기 12차 중앙위원 전원회의에서는 정위원 15명중 7명이 각각 선출됨으로써 기술전문관료들이 정위원과 후보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약 50%와 70%로 증가하였다.²⁶⁾ 이와 같은 1970년대 이후 3대혁명소조운동의 전개와 당지도부 구성의 변화는 혁명 1세대에서 혁명 2세대로의 세대교체와 아울러 혁명 2세대인 기술전문관료들을 세력기반으로 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북한의 권력구조는 보다 실무적인 관료와 김일성에 충성하는 노간부들이 김정일체제로의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종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確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① 勞動黨組織 ② 軍組織 ③ 만경대혁명학원출신 ④ 3대혁명소조출신 등으로 김정일의 지지세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1) 勞動黨조직 : 김정일은 1973년 9월 노동당 조직, 선전 및 선동담당

26) 이우정, “최근 북한권력엘리트 변화와 정책전망”, 『통일문제연구』 제 1권 제 2호(국토통일원, 1988)p.48

비서직을 맡으면서 주로 활동해 왔으며, 黨內에서 등장한 新進간부와 기술관료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黨의 최고지도층내부에서는 별 變動이 없었지만, 중간급 당간부의 인사이동을 통하여 세대교체와 후계체제의 구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테면, 제 6차 당대회에서는 제 5차 당대회 당시의 당중앙위원 172명을 248명으로 대폭 증원시켰는데 그중 70.6%가 신진인물들로서 이들은 김정일 승계체제 확립을 위한 포석으로 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²⁷⁾ 이와 같이 당시 신진관료들을 중심으로 김정일 지지세력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중에 代表的인 인물로는 림춘추, 허담, 리근모, 김종린, 김영남, 홍시학, 현무광, 김환, 강성산, 서윤석, 전병호, 연형복, 계응태 등을 들 수 있다.

(2) 軍조직: 軍조직에서 김정일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은 빨치산 출신과 만경대혁명학원출신들을 들 수 있다. 이에 오진우(당정치국원, 당중앙위군사위원, 국방위원회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전문섭(당중앙위 군사위원), 오백룡(당중앙위원), 김철만(당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오극렬(당중앙위 군사위원)등이다.

또한 북한은 1985년 4월 1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하여 법정정원 3명을 훨씬 넘는 9명의 고위장성을 승진시켰다. 즉,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차수, 그리고 총참모장 오극렬, 인민무력부 부부장 백학림, 당군사부장 김두남, 제 1부참모장 리을설, 제 2군단장 주도일,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봉률, 포병사령관 김광진, 제 4군단장 리두익상장을 각 대장으로 승진시켰는데, 이들은 김일성 혹은 김정일 후계체제를 擁護하는 데 앞장 선 인물들이다.

27) 「내외통신」제 198호(1980.10.20): 유석렬, “김정일의 대두와 정권승계” 『아세아연구』제 30권 2호(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87.7) p.81. 에서 재인용.

그러나 김정일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군부에서의 지지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군경력이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지난 5월 신설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김정일이 임명되었다는 것은 김정일의 군부에 대한 지도권을 확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 :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 12일에 창설된 제1특수군사학교로 현재까지 20,000명이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김정일은 이 학원의 제1기 졸업생(1953년 졸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만경대 혁명학원 졸업생들은 최우선적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강건종합군관학교, 공군대학, 해군대학 등 국내 학교와 외국에 유학할 기회가 주어지며, 특히 80년대 이후 김정일체제 등장으로 더욱 큰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1989년 현재 북한의 당서열 50위 내에는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들이 12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김정일과 함께 성장한 인물들이며, 김정일처럼 김일성대학, 혹은 소련에 유학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 학원 출신들은 1990년 현재, 당중앙위에 179명중 29명(16%), 당서열 50위내에서는 12명(24%), 당군사위원회에서는 16명중 8명(50%), 당중앙위 정치국에서는 총 25명중 6명(24%), 중앙인민위원회에서는 17명중 5명(29%), 국방위원회에서는 11명중 2명(18%), 정무원에서는 부장급이상 50명중 7명(14%)을 차지하고 있다.

이 학원출신들 중에서 주요 인물들로는 김정일과 함께 졸업한(1기) 백학림(중앙위군사위원, 사회안전부장,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 부위원장) 김강환(당중앙위군사위원), 김두남(당중앙위군사위원), 윤기정(女, 전 재무부장), 김병률(당중앙위원), 오극렬(당중앙위군사위원), 김환(당중앙위원, 부총리, 화학공업부장), 박용석(당중앙위원, 철도부장), 이재륜(당중앙위원,

노동행정부장), 최문선(당중앙위원,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김의순(女, 前자 강도당 책임비서) 등이 있다.

(4) 3대혁명소조 출신: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혁명 2세대라 할 수 있는 전문기술관료의 등용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을 기반으로 하여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黨中央’(김정일)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黨性이 강한 청년, 학생 및 과학 기술자 당원으로 구성된 소조원들을 각지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파견하여, 간부들에 대하여는 保守主義, 經驗主義 등 낡은 사상을 버리고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근로자들에게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과학기술지도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혁명 2세대인 전문기술관료를 당권력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이를 직접 지도한 김정일의 권력을 강화하게 하였던 것이다. 1986년 12월 제 6기 12차 당중앙위원회 정위원 15명중 7명, 후보위원 10명중 7명이 전문기술관료로 선출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구성에서도 전문가들의 참여가 확대되게 되었다.

<표 17>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사회성분별 및 여성의 구성비

구 분	노동자	농 민	사무·전문가	계	여 성
제 4 기 (1967)	292(63.89)	70(15.32)	95(20.79)	457(100)	73(15.97)
제 5 기 (1972)	347(64.14)	72(13.3)	122(22.56)	541(100)	113(20.88)
제 6 기 (1977)	248(42.8)	64(11)	267(46.2)	579(100)	121(20.8)
제 7 기 (1982)	213(34.6)	63(10.2)	339(55.2)	615(100)	121(19.6)
제 8 기 (1986)	238(36.4)	79(12)	338(51.6)	655(100)	138(21.1)

資料: 국토통일원 편, 『북한최고인민회의의 자료집』(1988) 중 기별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보고」 분석

앞의 <표 1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97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중에서 노동자, 농민출신은 64.14%, 13.3%이었는데, 1986년에는 36.4%, 12%로 그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사무직, 전문가의 비율은 22.5%에서 51.6%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무직, 전문가의 절대적, 상대적인 수가 산업과 교육의 발달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무직, 전문가의 비율이 전체 대의원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사무직, 전문가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혁명 2세대와 전문가집단들의 등장도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김정일의 권력기반 확충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때, 김정일체제의 성격은 김일성체제와는 다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나. 김정일체제에 대한 抵抗勢力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1970년대부터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위하여 각종 준비를 하여 왔다. 따라서 김일성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김정일로의 모든 권위가 공식적으로 계획된 절차에 따라 移讓된다면, 김정일세력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세력은 나타날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세습제에 대한 불만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 더구나 사회주의국가들마저 이같은 세습왕조식 승계체제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 보다 광범위하게 反김정일 세력이 散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反김정일 세력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유형에서 나타날 수 있다.

(1) 권력기구 내부의 反김정일세력의 존재 가능성 : 김정일세력의 浮上에 대한 권력내부의 반발로서, 일부 元老勢力과 김정일에 의하여 소외된 세력들의 불만이 결합되면 강력한 저항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지적인 것처럼, 김정일세력의 등장과정에서 당과 정부의 각급기관에서 인사 이동이 빈번하였고, 그에 따라 신진인물이 대거 등장한 반면, 그만큼 탈락된 간부들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당과 정권기관의 중간간부급의 잦은 인사이동은 당조직의 활성화란 차원에서 긍정적인 작용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사불만을 누적시키는 부작용도 산출한다고 하겠다. 게다가 김정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은퇴나 반은퇴를 강요당한 50대와 60대의 당관료들의 반발 가능성도 전혀 排除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현재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김정일의 등장이 自力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後援下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김일성의 有故와 더불어 김정일에 대한 반발이 조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蓋然性은 많다고 하겠다.

이같은 당내의 불만세력에 대하여 6차 당대회 직후인 1982년 7월 24일자 로동신문은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간의 알력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으며, 김정일은「조선로동당의 당면과제」라는 글을 통하여, 黨内の 종파주의, 가족주의, 지방주의, 당과 인민과의 연계강화, 만연된 관료주의의 시정, 자본주의와 결탁한 내부반항의 존재 등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였다.²⁶⁾ 이러한 측면은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對內的 사상의식의 강조과정에서도 ‘당내 불만세력에 대한 비판’을 강도 높게 제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김정일에 대한 내부적 불만세력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군부내의 반김일성-김정일 세력의 존재 가능성: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김정일은 지난 1980년 5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

26) 「로동신문」 1982년 10월 17일자

의에서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새로 독립된 국방위원회의 제 1 부위원장에 被選됨으로써 軍을 장악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 김정일은 1980년의 노동당 제 6 차대회에서 당군사위원회에서 진출하여 군부내부에서 반 김일성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같은 과정에서 일부 빨치산 출신의 인물들과 한국전쟁세대의 일부가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같은 김일성-김정일 승계구도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군부인사들이 주동이 되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암살음모가 실패하자 중국으로 망명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물론 이같은 반 김일성-김정일세력의 규모라든가 성격은 현재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군부에서 김정일의 영향력이 그렇게 안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측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김정일이 군사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 이외에도, 군부내부에 비교적 외부세계의 변화에 敏感한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김일성-김정일 承繼構圖에 불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1989년 2월에 인민군 간부대회를 소집하고 소장파 군인들에 대한 정치,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심지어 김정일에 대한 충성서약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反證한다고 하겠다.

군부의 반 김일성-김정일 세력의 등장과 관련하여 북한 군부내의 '소련 코넥션' (connection)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동구국가들 중에서 소련의 개혁권고를 거부하고 독자노선을 고집하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親蘇派의 경향성을 가진 집단들에 의한 쿠데타를 통하여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북한에서도 그와 같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노선을 지지하면서 김일성-김정일의 세습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군부에서 出現할 것이라고 推論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로 北韓軍은 매년 300 - 500명이상의 군의 중간간부들을 소련에 유학시켜

왔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련으로부터 현대식 무기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북한군부내에 자연스럽게 소련과 연계되어 있는 젊은 장교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수나마 당과 정부내의 개혁주의적 관료와 일부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지식인들이 加擔한다면 북한에서 反 김일성-김정일 쿠데타 발생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

(3) 기타 불만세력: 최근에 들어와 일부 외신은 북한에서도 反體制團體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1988년 8월 24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북한 여행자의 증언을 토대로 최근에 약 800명의 노동자, 농민, 군인으로 구성된 ‘조선인민자유동맹’이란 반체제단체가 남포, 원산, 청진, 신의주등지에서 식량배급량 증대와 생활개선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한 바가 있다는 보도를 하였고, 1990년 6월에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구국전선의 지도자인 브루칸 박사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과 언론인 중에 반체제 인사가 있으며, 이들은 김일성-김정일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해외세력과의 연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같은 반체제단체의 존재, 조직규모, 성격등은 전혀 확인될 수 없지만, 북한사회내부에 불만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른바 ‘독재대상구역’의 在所者 數의 증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북한체제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인사들을 격리 수용하는 독재대상구역이 지난 1982년 4월에는 8개지역에 약 10만 5천명이었는데, 1990년 1월에는 12개지역에 약 15만 2천명이 수용된 것으로 보아, 그만큼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세력이 증가되었다는 것이다.²⁷⁾ 이 이외에도 북한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계층은 북한당국의 성분분류에 의하여 동요계층, 또는

27) 「서울신문」 1990년 1월 18일자

적대계층으로 命名되어 여러가지로 불이익과 차별대우를 받는 집단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다.

다. 安定的 權力承繼와 北韓의 變化 可能性

이와 같이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세습에 대하여 북한사회내부에 불만세력이 싹트고 있으며, 그와 같은 反김일성-김정일세력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暴力的으로 突出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김일성의 有故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外勢의 적극적인 介入이 있다든가, 또는 북한의 국제적, 국내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는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과연 김정일정권이 얼마나 持續할 수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세습의 권력승계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사회는 아직도 강력한 통제사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組織的인 반대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말해서 조직적인 反김정일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지난 1958년 반종파투쟁 이후 당과 정부내에서 반김일성세력은 거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련이나 중국에서와 같은 개혁운동의 전통이 없고, 따라서 대체세력이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 셋째, 지난 20여 년동안 김정일은 당과 정부, 군부내에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強固한 지지세력을 확보함으로써, 이미 권력승계를 既定 事實化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사실, 현재의 북한사회에서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挫折된다면 극심한 혼란과 권력투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배계층으로서의 북한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김정일체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김일성 이후의 북한사회를 당분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사회에서 김정일체제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해서 북한의 변화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김정일체제의 등장은 단순히 최고지도자의 교체라는 차원을 넘어서, 북한 지배엘리트의 성격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경향과 리더쉽 스타일등에 있어서 김일성의 북한과 김정일의 북한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체제는 지배엘리트의 구성에서 보여지듯이 항일투쟁의 경력을 가진 빨치산세대와 해방이후 성장, 교육을 받은 김정일세대의 실무관료들이 과도기적 연합을 구성하고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아직도 혁명 1세대가 지배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사상과 정치지도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고 사회적 複雜性和 多元性이 증가하면서 사상과 정치중심의 리더쉽보다는 實務적이고 實用的인 리더쉽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전문관료집단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도 일반적인 경향이고, 이런 점에서 북한도 例外가 아니다. 따라서 김정일체제는 점점 더 이같은 실무관료에 의존하면서 북한사회의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체제의 북한에서는 제한적이거나 개혁과 개방을 실현하고 남한과의 평화공존을 받아들이면서 북한의 체제적, 정권적 안정과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第4章 北韓體制的變化에 대한豫想 시나리오

이 章에서는 北韓체제의 변화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위해서 먼저 1980 년대에 北韓이 보여준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에 대한 認識과 對應樣相을 분석하여 北韓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변화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며, 長期的인 차원과 短期的인 차원에서 과연 北韓이 의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통제해갈 수 있는가를 검토하면서, 앞의 제 2 장에서 시도한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혁유형을 기초로 하여 北韓體制的 변화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려고 하였다.

1. 社會主義圈의 大變革에 대한 北韓의 認識과 對應

가. 北韓의 認識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에 관한 北韓의 「로동신문」이나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를 분석해 보면,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北韓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권의 改革을 ‘자본주의적 방식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사회주의적 길’을 적극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1989년 4월 6일자 「로동신문」은 “미제의 반사회주의적 전략과 사상교란”이란 논문에서 사회주의 나라에서의 經濟的 부진과 經濟的 난관을 제국주의의 經濟援助로 극복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권의 改革, 開放을 제국주의적 사상교란작전을 自招하고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經濟改革보다는 北韓의 언론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은 사회주의권

의 정치 改革, 즉 '정치적 다원주의'와 '사상적 자유화'에 대한 것이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의 위기는 '물질적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의 빈곤에서 오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인민대중의 사상, 정치적 통일을 파괴하고 사회주의 자체를 와해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北韓은 특히 헝가리를 비롯하여 동구국가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와 多黨制를 採擇하고 있는 것을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北韓은 「로동신문」을 통해 헝가리가 이른바 政治的 多元主義를 채택하면서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점차 이탈하고 있으며, 폴란드 역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그에 합세한 反사회주의 세력들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난 1989년 6월 헝가리 공산당의 黨名改稱과 더불어 '민주적 사회주의로의 길'을 선언한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헝가리가 이른바 '정치적 다원주의'를 운운하며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점차 이탈하여 반혁명, 반사회주의분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고 있다.(중략) 헝가리에서 다당제라는 이름 밑에 반혁명적 정당들이 조직되고 있으며 심지어 반사회주의분자들이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바로 동구사회주의의 改革이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한 국내의 반사회주의적인 세력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反帝國主義 투쟁과 사회주의의 보호'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北韓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脈絡에서 北韓은 지난 1989년 6월에 발생한 中國의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蘇聯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민주화운동을 유혈

1) 「로동신문」 1989년 6월 28일자

진압한 中國을 비난하고 있을 때, 거의 유일하게 中國의 보수파 지도자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제국주의세력을 타파하자”고 역설하기 까지 하였다.”²⁾

그러나 北韓은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서는 改革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구체적인 政治-經濟改革은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제한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北韓과 蘇聯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지 28년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사실을 통해 “改革政策으로 蘇聯인민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했다.”며, “오늘 蘇聯에서는 社會經濟建設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편사업이 심화, 발전되고 있으며 소비에트사회 의 更新過程이 적극 추진되고 인민들의 복리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페레스트로이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함으로써 불편한 심정을 내보였던 것이다.³⁾

이와 같이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에 대해 北韓은 축소, 왜곡 보도하거나 무시함으로써 北韓의 困境한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를테면, 베를린장벽의 개방에 대해서도 北韓은 ‘서부 베르린 깡패들이 국경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동서 독일의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루마니아사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차우셰스쿠가 처형된 다음에 간단한 사실보도를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하나씩 하나씩 몰락하게 되자 北韓도 현실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사회주의권은 시련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北韓은 사회주의의 원칙을 견지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입장은 김일성의 1990년 신년사를 통하여 밝혀졌다.

2) 「로동신문」 1989년 10월 1일자

3) 「로동신문」 1989년 7월 6일자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사회주의로의 길은 전인미답의 길인 것 만큼 전진도상에서 예상치 않던 사변에 부닥칠 수도 있으며, 우여곡절도 겪을 수 있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도 변천되는 현실에 맞게 개선되고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류가 반드시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력사의 진리는 달라질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사회주의 원칙 고수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⁴⁾ 김일성은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힌다고 하여 사회주의 원칙을 버리고 자본주의적 방법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난관을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을 마비시키고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經濟改革이나 政治改革에 대해 강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⁵⁾

특히 北韓은 韓國政府의 북방정책과 사회주의국가들의 ‘배신’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北韓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남조선 괴뢰들이 들고 나온 북방정책이란 사회주의 나라들에 접근하여 교차접촉과 교차승인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라의 분열을 고정화, 합법화하기 위한 범죄적인 민족분열 영구화 책동이다.”⁶⁾

“이른바 북방정책의 반동적 본질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 나라들을 분열 와해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보려는 미제의 반공, 반사회주의 전략실현의 도구라는 데 있다.”⁷⁾

4) 국토통일원 刊, 『통일 및 남북관계관련 북한자료』(1990)pp.96-97.

5) 「로동신문」 1990년 5월 24일자

6) 「로동신문」 1988년 10월 1일자

7) 「로동신문」 1988년 10월 31일자

이처럼 北韓은 韓國의 북방정책을 韓國이 중·소관계 개선을 통하여 교차접촉, 교차승인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南北韓 UN동시기입 등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 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北韓이 헝가리를 비롯하여 동구국가들은 물론이거니와 蘇聯까지 韓國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데 대하여 충격을 받고, 격렬하게 비난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

北韓 외교부는 이미 오래전(88년 10월 26일) 담화를 통해 헝가리가 '남조선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2개의 조선음모를 떠받든 첫 사회주의국가'가 됨으로써 '남한의 반공기지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사회주의 대열의 분파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89년 2월 외교부 각서는 "분열주의자들의 2개조선 조작음모에 가담한 결과이며, 명색이 사회주의 나라인 헝가리가 남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제국주의 앞에 투항하고 그들의 반 사회주의적 전략에 가담한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강력히 불만을 표시했다. 나아가 이러한 행동은 "전반적인 사회주의 偉業의 견지에서나 사회주의 벗들간의 도덕적 견지에 보나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입장은 한-소수교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직후에 발표된 1990년 10월 5일자 「로동신문」사설에서도 되풀이 되었다.

“.....지금의 蘇聯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견지하던 그 전날의 蘇聯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성격의 국가로 변질된 것만큼 그에 상응하게 '새로운 벗'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며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심)지어 동맹국의 리익을 침해하는 것도 주저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이것은 조선을 둘러싼 미국, 蘇聯, 남조선의 3각결탁관계의 형성을 의미하게 되며 '平和적 이행' 전략에 따라 아세아에

서 사회주의를 와해하기 위한 포위망 형성의 일환으로 되게 될 것이다.”

나. 北韓의 對應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北韓은 사회주의권의 대변력과 韓國의 북방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세력과 내부 수정주의자들의 복고가능성’에 대해 더욱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강도높은 ‘주체형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제도의 강화, 발전을 主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北韓 역시 앞 章에서 살펴 본 것 처럼 사회주의 일반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공통적 위기의식 때문에 제한적인 改革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北韓이 추진해 온 改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北韓의 經濟改革: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北韓은 計劃經濟와 自立經濟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보완적인 차원에서 각종 改革을 시도하였다. 이를테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채산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능률임금제도 등의 각종 물질적 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분적으로 개인 영업을 허용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며, 소비재 생산을 강조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조용한 改革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北韓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80년 10월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이 대외무역의 확대와 다각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1984년 합영법 제정, 1985년 합영시행세칙, 합영회사 소득세법, 외국인 소득세법 및 세칙 제정, 1986년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설립, 1989년 합영공업부 설치 등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외무역의 확대와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래의 <표 18>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5년간의 합작실적은 그 규모와 내용이 보잘 것 없으며, 그것도 대부분이 일본의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北韓의 합작사업이 부진한 것은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대외신용도의 저하, 시장의 협소성 등이 주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 표 18 > 北韓의 합작실적 현황 (1985 ~ 89)

연도	대 상 국	내 용	비 고
85	조총련(日)	낙원백화점	지방 31 개체인
	"	대동강자동차수리공장	
	"	창광산호텔커피숍	
	시에라레온	朝鮮은덕상사	플라스틱제품 건축중
	프랑스	양각도호텔 (47 층규모)	
	부르키나파스	광업합작회사	
86	조총련	운산금광개발주식회사	金萬有병원
	"	朝日우호의료회사	
	"	평양골프장	
	"	조선국제연합영총회사	의류
	"	모란봉합영회사	
	"	은하수식당	
	시에라레온	금광개발합작	
가나	전통의약제조합작		
87	조총련	대동강피복공장	모란봉합영회사 자회사
	"	동해관식당	
	"	조선락원금융합영회사	1 천만달러규모

연도	대상국	내용	비고
	조총련 " 蘇 聯 " " " " 잠비아 中 國 탄자니아	원산애국편직물유한책임회사 남산합영회사 이와노프희천연합체 고르키희천기계공사 천해양식공동기업소 어업공동기업소 농장합작 평양냉면관 농업합작회사	전기전자제품 판매점 조정공작기계 다시마가공품 해저자원개발 북경소재
88	조총련 " " 헝가리 蘇 聯 " 몽 고 中 國	평양실크합영회사 청천강합영회사 동대원피복공장 식당 의류생산합작 고르샤롭스키국영농장 코크스탄광공동개발 도문강식당	견직물 제사공장 모란봉합영회사 자회사 60여 공장참여 농업 80만달러 규모(연결시)
89	조총련 " " " " "	신흥합영회사 명전합영회사 조선합영은행 평양포장재합영회사 함흥화학공장 덕산건설기계합영회사	전자제품 의료기구 20억엔규모 포장재 중장비수리

연도	대 상 국	내 용	비 고
	조총련	광포합영회사	오리털가공
	"	창광합영회사	식당
	"	조선만풍합영회사	돛자리공예품
	"	단밤연구소	밤가공식품
	폴란드	식당	
	中央阿	금강석합영회사	
	몽 고	내화벽돌생산공장	
	蘇 聯	성계가공공장	
	"	모란봉레스토랑	
	"	동의학센터	
	재미교포(미국)	고려상업은행, 금강산국제개발회사	
	"	금강산국제관광회사	

資料：『北韓』 1990년 4월호(北韓연구소) p.53.

(2)北韓의 政治改革 : 기존의 '수령과 당의 영도성'을 堅持하면서도 사회주의권에서 소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첫째,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의원중에 사회민주당(7.4%), 친도교청우당(3.2%)과 무소속(1.9%)등이 진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데에서 드러난 것 처럼, 표면적으로나마 정치적 다원화를 지향하려고 하고 있으며, 둘째, 지난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한 이후 국가기관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고 黨-政分離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셋째, '당과 대중의 유리현상,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대중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정치적 改革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숭배를 위한 사업(예를 들면, '구호나무' 발굴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수령-당-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강조하면서 주체형 사회주의적 제도의 강화, 발전과 제국주의 세력의 타파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 南北關係와 對外關係: 최근 北韓은 南北關係와 대서방국가와의 관계에서 종래와는 다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통일문제와 南北關係와 관련하여 北韓이 최근에 발표한 文件을 상세히 살펴보면, 미군철수와 軍縮에 관해서 과거와는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北韓이 지난 1988년 11월에 발표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보장대책에 대하여"에서, 그리고 1990년 5월에 발표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에서 北韓은 거듭 '단계적 미군철수'와 '단계적 축감'이란 방침을 표명하고 있는 점, 그리고 南北고위급회담을 받아들이고 최고위급회담(남한이 제안한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 등은 통일정책과 대남정책이 기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여 유연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北韓의 자세변화는 비록 취소되기는 하였지만, 남한기업과 금강산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南北經濟交流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北韓은 蘇聯과 동구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中國, 베트남 등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국가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韓國의 북방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韓은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을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과 국내 수정주의자들의 등장, 그리고 정치사상교육

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北韓의 대응도 주체 사상의 재강조와 수령-당-대중을 중심으로하는 주체형 사회주의체제의 강화,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北韓도 사회주의 체제가 당면한 문제점, 이를테면 經濟的 곤란, 관료주의의 병폐,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외교적 고립화 등을 인식하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改革, 開放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北韓이 앞으로도 이와같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부분적 변화를 지속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노선이나 정책에 革新的인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2.北韓의 變化類型 分析과 豫想 시나리오 : 短期的 展望

北韓의 변화유형을 예상하기 위해서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변화유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北韓의 내외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北韓에서 앞으로 어떤 유형의 변화가 가능한가를 推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의 第2章에서 우리는 蘇聯, 中國, 東歐 사회주의국가들의 自生的 革命傳統과 改革傳統, 經濟發展 정도와 經濟危機의 정도, 서방세계와의 관계와 사회적 다원화정도 등의 變數를 분석하여 ①中國이나 알바니아와 같은 위로부터의 제한적 改革, ②蘇聯과 같은 위로부터의 급진적 改革, ③헝가리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改革, ④루마니아식의 改革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권의 변화유형을北韓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입하면北韓體制的 변화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상정해볼 수 있다.

- (1)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改革, 開放을 추진하는 경우

- (2) 김정일체제가 붕괴하거나 혹은 변형되면서 변혁적인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蘇聯式의 위로부터의 급진적 改革을 추진하는 경우
- (3) 루마니아와 같이 군부 쿠데타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밑으로부터의 압력으로 김일성-김정일체제가 붕괴되지만 공산당(조선로동당)세력이 집권하는 경우
- (4) 동독과 같이 蘇聯의 改革압력과 내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김일성-김정일체제가 붕괴하고 非共產主義 이념을 가진 統一指向的인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

이런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앞에서 사회주의권의 改革을 유형화한 변수를 北韓社會에 도입, 분석을 한다면, 北韓의 경우는 대체로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1)의 유형이라고 생각되며, 그 다음의 (2)-(3)-(4)의 순서로 北韓體制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예측은 다음과 같은 類型變數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다.

① 자생적 혁명전통: 주지하다시피 北韓은 蘇聯에 의하여 소비에트식의 사회주의가 건설되었으며, 北韓정권의 형성도 蘇聯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北韓에는 자생적인 혁명전통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1956년 8월 중파투쟁 이후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활동을 '蘇聯革命'의 전통이라고 선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하여 北韓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자생적 혁명전통의 유무가 改革類型에서 갖는 의미가 정권의 정통성과 대외적 자립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북한은 이같은 혁명전통과 주체 사상에 대한 교육으로 擬似的인 혁명전통을 형성하여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② 改革傳統: 北韓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김일성체제에 대한 반발과 노선수정에 대한 움직임은 1956년의 소위 '8월 중파사건'을 유일하게 들 수 있다. 1953년 8월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파는 戰後復舊와 사

회주의건설을 위한 노선으로 '농업협동화 추진 및 중공업우선, 경공업, 농업의 동시발전'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延安派와 蘇聯派는 '농업협동화 시기상조론'을 제시하고 소비상품을 희생시키는 중공업우선 발전노선의 수정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선대립은 195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어 1956년 2월 개최된 제 20차 蘇聯공산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에 의해 스탈린 개인숭배가 비판되면서, 노선대립은 反김일성운동으로 비화하게 되었다. 결국 갈등은 1956년 8월 30일-31일 열린 당중앙위 8월 전원회의에서 윤공흠, 박창욱 등의 延安, 蘇聯派들이 공개적으로 김일성 개인숭배와 당 노선 문제에 대해 비판을 가함으로써 폭발되었다. 그러나 소위 8월중파사건으로 알려진 이들의 反김일성 운동은 대규모의 숙청으로 연결되면서 延安, 蘇聯派들의 대거 축출과 김일성의 권력장악의 계기가 되고 말았다. 이후 北韓에는 김일성체제와 당노선에 대하여 조직적인 반대운동이나 改革運動이 전개된 적이 없다고 하겠다.

③ 경제발전정도 : 北韓은 1988년 현재 GNP 206억불, 1인당 GNP 980불, 經濟성장률 3.0%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수치는 蘇聯이나 東歐의 산업화된 사회주의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것이지만, 세계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하위권 국가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④ 경제위기의 정도 : 北韓의 경우도 경제성장률은 저하되고 있고,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침체와 대중들의 생활개선에 대한 욕구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와 교류통제로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상승이 억제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간의 經濟的 불평등성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위기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속에서 北韓의 경제침체가 계속되

고, 南北韓의 經濟的 격차가 점차로 알려지게 되면, 심각한 信心의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⑤ 서방세계와의 관계 : 北韓과 서방국가와의 관계정도는 北韓의 무역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처럼 낮은 편이다. 1987년 현재 北韓과 서방권(일본+OECD)과의 교역량은 絕對額數에서도 수출 3억 8천 4백만불, 수입 3억 1천 3백만불의 수준에 불과하고, 그것은 北韓의 전체 수출, 수입중에서 각각 23.3%, 15.1%를 차지한다. 그것도 거의 일본과의 무역에 치중되어 있는 편이다. 한편, 北韓은 1990년 3월 현재 105개의 국가와 수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같은 기간에 남한은 140개국과 수교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42개국은 아프리카지역에 있는 국가들이다. 이와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北韓의 대외관계는 상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서방과의 관계에서는 폐쇄적이기까지 하다고 하겠다.

⑥ 사회적 다원화의 정도 :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北韓은 엄격한 사회적 통제체제를 갖추고 있고 각종 사회적 정책도 다원화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병영국가라고 할 만큼 전체 주민의 30%가 군사조직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다원화의 정도는 대단히 낮은 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北韓 사회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都市化의 비율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사회적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권의 변혁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던 6가지 변수에 대한 北韓의 평가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러한 北韓의 상황을 고려하면, 北韓의 改革類型은 앞의 제 2장에서 분류한〈위로부터의 제한적 改革〉이란 유형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類推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第2章에서 <위로부터의 제한적 改革>의 경우에도 중국식, 불가리아식, 알바니아식의 3가지 종류가 있음을 살펴본바 있다. 이 세 나라와 北韓의 공통점은 自生的이든 擬似的이든 혁명전통의 뿌리가 있고, 서방 세계와의 관계가 제한적이며, 사회적 다원화의 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변 수	평 가
자생적 혁명전통	의사적 혁명전통이 존재
개혁전통	미미함
경제발전수준	중하위 정도
경제위기심화정도	낮음
서방세계와의 관계	제한적
사회적 다원화	제한적

그러나 中國의 경우 비교적 강한 改革運動의 전통이 있다는 점에서 北韓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다르며, 불가리아는 경제발전의 정도가 北韓이나 中國, 알바니아와 비교하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로부터의 제한적 改革>을 시도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北韓은 모든 면에서 알바니아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사실 既存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改革, 開放을 시도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中國은 經濟改革의 분야에서, 그리고 불가리아는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政治改革의 분야에서 비교적 大膽한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알바니아는 아직도 정치적인 차원에서나 經濟的인 차원에서 中國이나 불가리아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완고하다.

알바니아와 北韓은 모두 기본적으로 스탈린주의적인 黨國家體制와 計劃經濟體制를 固守하려고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강화론적 차원에서 제한된 改革을 選別的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하겠다.

물론, 北韓이 中國式 모델을 수용하여 김일성사상을 再解釋하면서 혁신적인 經濟改革을 단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이 되기 위해서는 北韓엘리트 내부에서 經濟改革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을 추진할 改革派가 등장해야 한다는 조건이 充足되어야 한다고 假定하면, 北韓이 中國式 改革을 단행하게 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北韓 지도자들의 공식연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처럼, 北韓이 당면한 經濟的 困難에 대한 지도층 내부의 공동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며, 또한 아직 그 성격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40 - 50代의 전문기술관료들과 海外유학파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3. 北韓의 變化에 대한 豫想 시나리오 : 長期的 展望

이와 같이 北韓은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위로부터의 제한적 改革>이란 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다른 유형으로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蓋然性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豫想外의 돌출적인 사건, 이를테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치명적인 經濟的 실패와 민중봉기, 또는 蘇聯의 적극적 개입 등은 北韓으로 하여금 앞에서 예시한 (2)-(3)-(4)와 같은 변화도 일어날 수 있게 할 것이다. 더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北韓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한다면, <위로부터의 제한적 改革>의 한계가 드러나고 국제적, 국내적 여건이 계속 악화될 경우에는 蘇聯式 또는 루마니아式的 변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하겠다. 만일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 본다면 北韓의 장기적 변화의 시나리오는 시간상으로 (1)과 같은 변화가 지속된 후에 (2)또는 (3)과 같은 類型的 변화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2)또는 (3)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인 : 北韓사회가 현재의 조건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지도부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아래로부터 변화를 요구하는 변혁운동이 단시일내에 폭발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겠다. 따라서 단기적인 차원에서 北韓의 변화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제한적인 改革, 開放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세대가 물러가고 김정일세대가 北韓의 지도부를 장악하게 될 때, 과연 김일성세대와 같은 지도부 내부의 단결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카리스마와 정통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김정일체제에서는 국내적인 상황과 국내의 經濟的인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지도부가 분열되면서 中國에서와 같은 改革派와 保守派의 路線鬭爭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중심이 된 集團指導體制가 형성되면서 中國式의 改革, 開放을 모색하는 過度期를 거친 다음, 주체사상과 김일성시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모색하는 蘇聯式, 또는 루마니아式 변혁을 추구하는 단계로 이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經濟的 요인 : 北韓은 이미 1980년대 이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부분적 개혁, 개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 개방은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차원의, 그리고 부분적 개혁, 개방에 치중한 것이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개혁, 개방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부분적 개혁, 개방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北韓經濟의 構造改革을 단행하지 않고 經濟的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로서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택할 수 있다. 즉, 일본과 서방

세계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北韓經濟를 회복하려고 할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일본과의 수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군축을 통해 군사비 부담을 줄여보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기적인 대책으로도 北韓經濟가 획기적으로 전환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市場과 자본주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經濟構造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③ 국제적 요인과 南北關係 : 사회주의권의 대변력과 韓國의 북방정책은 北韓의 고립화를 심화시키고 체제의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北韓體制를 固守하면서도, 이같은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미국과 일본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이며, 南北關係와 통일정책에서도 기본적인 목표와 정책은 변경함이 없이 전술적인 柔軟性을 발휘하여 남한의 공세를 둔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술적인 변화만으로는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나 남한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없게 되고, 北韓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면 '하나의 조선'이란 정책을 포기하고 '두개의 조선'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北韓의 변화는 다음표와 같은 3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로 체제적 변혁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北韓의 장기적인 전망을 추론하면서 앞에서 말한 (4)의 가능성 즉 독일식 흡수통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이미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독일식 상황과 한반도의 상황이 표면적인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내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여건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약 3-5

구 분	변화의 1 단계	변화의 2 단계	변화의 3 단계
변화유형	(1)의 알바니아식	(1)의 中國式	(2)의 蘇聯式 또는 (3)의 루마니아식
정치와 이데올로기	김일성-김정일체제 주체사상 재강조	집단지도체제 주체사상 재해석	지도부 분열과 改革勢力의 등장 새로운 사회주의
經濟政策	부분적, 제한적 改革, 開放	經濟構造의 部分改 革, 전면적 開放	전면적, 구조적 改革, 開放
國際關係	서방국가와 제한적 수교(일본, 서구)	미국과의 수교	모든 서방국가와 수교
南北關係와 통일정책	南北對話, 활성화 '하나의 조선' 정책	교류와 군축 실현 실질적 '두개의 조선'	완전한 '두개의 조 선'과 주和平론 모색

년)으로는 김일성-김정일체제가 유지되면서 위로부터의 부분적 改革을 단행하겠지만, 김일성의 隱退와 더불어 과도기(약 1, 2년)을 거치면서 변혁의 계기와 변혁의 주도세력, 그리고 변혁노선이 형성되면서 北韓은 지금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 질 것이다. 그러나 北韓체제의 完全解體와 남한에로의 吸收統合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겠다.

第 5 章 北韓體制的 變化에 대한 對應

앞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권의 變革要因과 變革類型을 분석하여 北韓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해 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北韓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첫째, 北韓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基本立場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北韓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1. 北韓의 變化에 대한 우리의 基本立場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北韓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보아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소련이나 중국, 또는 동구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사회주의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의 缺陷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에서는 더욱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수령-당-대중론에 입각한 北韓의 정치체제, 그리고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 등이 바로 北韓에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왜곡되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의 사회주의체제가 사회주의 일반이 안고 있는 위기요인과 동시에 ‘주체형 사회주의’에 내재한 北韓 特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北韓의 변화는 장기적, 역사적 眼目에서 본다면,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北韓의 자유화, 개방화, 다원화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변화일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장기적, 역사적 변화의 과정이 곧 北

韓體制의 해체와 붕괴로 이어 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동구사회주의의 몰락현상과 동독의 서독에로의 흡수통합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자극을 받아, 아시아에서도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은 시간문제이며, 北韓도 조만간 붕괴될 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도 잠시 언급 했지만, 이같은 지나친 기대는 우리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北韓의 生存能力을 과소평가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따지고 보면, 우리사회의 정치력이나 경제력, 그리고 사회적 성숙도는 서독과 비교할 때 상당히 뒤져 있고, 반면에 北韓의 自生能力은 동독보다 훨씬 강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기대가 무엇이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현실성은 별로 없다고 하겠다. 사실, 우리가 北韓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량은 현재로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게다가 北韓에서 폭발적이고 폭력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꼭 우리의 國益과 統一에 기여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北韓의 자동 몰락을 바란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까지 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北韓에서 發生하기를 바라는가. 만일 北韓이 어느 날 갑자기 동독처럼 붕괴된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北韓社會에서 바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는 현재의 김일성-김정일체제가 점차 民主的이고 實用主義的인 정권으로 대체되면서, 南北韓이 平和共存의 기반 위에서 진정으로 體制와 理念競爭을 전개함으로써 동시적으로 발전과 統一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南韓과 北韓社會에서 어느정도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妥協과 協商에 의한 統一이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體得하고 있다. 權威主義的인 정권에서는 아무리 統一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도, 民族的 利益보다는 정권적, 개인적 이익이 우선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統一 그 자체가 目的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統一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민주화는 統一의 條件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남한사회의 민주화가 남한사회에서 統一論議를 活性化하고 統一運動의 진전을 가져 온 것처럼, 북한사회의 민주화도 統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앞에서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지적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북한사회도 개방화, 자유화, 민주화의 방향으로 변할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統一은 기본적으로 樂觀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北韓의 이와 같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2. 北韓의 變化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앞에서 여러번 지적했지만 北韓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장기적으로 北韓의 개방화, 자유화,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제적 정통성과 안정성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으로 부터 붕괴될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北韓으로 하여금 흡수통합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개혁, 개방이 北韓體制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지나치게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양보하고 실질적으로 南北交流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의 對北政策의 기초를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

장에서 우리의 단기적,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短期的 方案

(1) 기본목표

현재로서는 北韓에서 큰 변화가 있기는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北韓으로 하여금 현재의 국제정세와 사회주의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남한의 체제인정과 對南不信에서 벗어나 대화와 交流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정책

한국의 內政이 北韓의 선전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對北開放으로 인한 국내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北韓에 대하여 체제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국정치의 다원성과 민주성을 고양하고 統一問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北韓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北韓의 언론매체와 北韓의 영화 등 예술작품과 학술서적을 대폭적으로 공개한다.

(3) 대북정책

가. 정치적 차원 : 실질적으로 北韓과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김일성-김정일체제를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自制함으로써 北韓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버리고 대남협상, 交流에 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南北協商에서도 정치, 군사문제와 經濟, 文化, 通信등의 다양한 의제를 수용하고, 합의될 수 있는 영역을 꾸준히 확대,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사실, 지난 번에 있었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南北총리의 基調演說에서도 드러난 것 처럼, 南北韓間에는 南北關係와 統一問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특히, 군사적 신뢰구축과 軍縮問題에서도 南北의 제안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南北韓이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상호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를 점차로 확대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경제적 차원 : 北韓은 經濟에서의 변화를 추구할 경우에도 정치적 변화를 회피하고자 할 것이나, 실제로 北韓體制에서 政-經間의 비연계성은 어려울 것이므로 經濟에서의 변화와 交流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南北經濟協力은 순수한 민족경제공동체로서 南北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 민족경제공동체로서의 협력과정은 상품거래를 통한 신뢰구축-기술협력-자본협력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상품의 直交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南北經濟交流를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北韓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北韓이 남한과의 經濟交流를 통해 實利益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다. 군사적 차원 :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가능성은 지난 40여년에 비해 현재는 대단히 낮다고 평가된다. 국제적인 화해의 분위기가 확산된다고 해도 地域紛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北韓의 군사적 우위가 더 이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권의 변혁으로 소련은 물론이거니와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특히 남한의 自衛能力의 향상등을 고려한다면, 北韓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현재 南北韓의 군사력 비교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지만, 北韓의 양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동안 經濟力을 바탕으로 꾸준히 군을 현대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충분한 自衛能力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南北韓의 군사적인 균형을 바탕으로 北韓이 주장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軍縮問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한다.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세계정세의 변화와 미국의 국내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불가피한 것이 되고 있으므로 미군철수와 軍縮, 그리고 平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北韓과 소련의 군사협력관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현 소련의 개혁노선이 유지되는 한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北韓으로서도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北韓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또한 經濟적으로 곤란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군비경쟁을 하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군비축소 / 통제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많다고 하겠다.

(4) 국제관계

가. 對사회주의권(북방)정책 : 그동안의 北方政策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외교적 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이제는 실제적인 經濟的 효과를 거두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北韓이 국제적인 고립감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북방정책의 승리를 내세우는 것은 北韓으로 하여금 對南不信 만을 조장하게 하는 것이 되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고, 한국이 사회주의권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北韓도 美·日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名分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지금까지 북방정책의 목표가 國交正常化에 있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經濟關係를 확대하면서, 이들 사회주의국가들로 하여금 北韓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의 역할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소련과의 공동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對美·日政策 : 北韓이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北韓의 미·일접근이 곧 交叉承認이라는 식의 선전을 止揚하여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교차승인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정부의 입각에서는 北韓과 일본과의 수교와 관련하여, 일본의 지나친 對北支援은 오히려 北韓의 개혁, 개방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주게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北韓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南北韓에 대한 교차승인을 추구하는 우리의 對北政策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對美政策은 이미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의존관계는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동안 미국의 역할은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외교의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미국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북방정책, 특히 소련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UN가입문제 : 남한의 UN가입위협은 北韓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남한이 실제로 UN에 단독가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성급한 UN가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UN가입문제는 앞으로도 北韓의 개방화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면서 北韓과의 동시 가입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나. 長期的 方案

(1) 기본목표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인 平和統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統一過程과 統一이 달성된 후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역량을 비축하고 개혁을 단행한다.

(2) 국내정책

統一過程에서 국론의 분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도 對北政策과 북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극대화하며,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對北政策과 비연계 되도록 국회차원에서 統一問題에 대한 합의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南北交流와 統一問題를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與野의 정치세력과 다양한 사회적 세력을 대변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면서 統一過程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도록 한다.

(3) 대북정책

가. 정치적 차원 : 南北頂上會談을 성사시키며, 이를 定例化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 노력하며, 北韓과의 人的, 文化的 交流를 활성화한다. 특히 實用主義를 選好하는 經濟, 기술관료와 經濟人들의 접촉을 강화한다.

나. 경제적인 차원 : 南北經濟交流를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즉, 상품 交流의 단계에서 점차로 北韓經濟에 대한 직접투자와 인력 파견의 단계로 발전시키면서 相互依存度를 강화한다. 특히 北韓의 對南依存度를 높인다.

다. 군사적 차원 : 단계적인 주한미군의 철수와 ทัพ스피리트훈련의 규모와 횟수를 줄여 가면서 군비축소/통제를 구체화한다.

(4) 南北韓이 參與하여 한반도지역의 平和와 發展을 보장할 수 있는 地域的 協力機構를 설치하도록 하여, 南北韓의 統一問題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서기 1990년 12 월 26 일 50부 발간

발간업체 : 문 성 경 인 (주) 738-7434
738-0619

대 표 자 : 김 재 회

인가근거 : 조내자 2066-14387 호 (64.12.18)

참 여 자	통 일 원
	이 봉 근

